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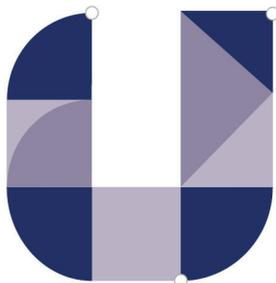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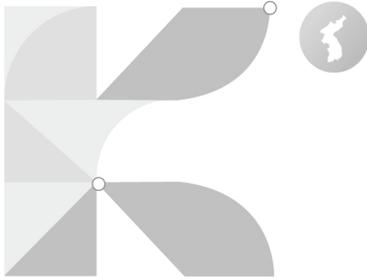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오경섭 | 김진하 | 박형중
한병진 | 김에스라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연구책임자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형중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한병진 (계명대학교 교수)

김에스라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



연구지원

한종민 (통일연구원 연구원)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김정은 집권 10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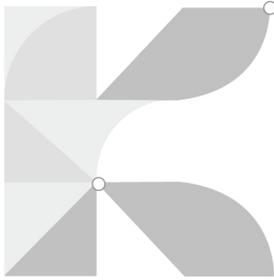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KINU 연구총서 21-11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저자	오경섭, 김진하, 박형중, 한병진, 김에스라
발행인	고유환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인쇄처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I S B N	979-11-6589-050-6 94340 979-11-6589-049-0 (세트)
가격	10,500원

© 통일연구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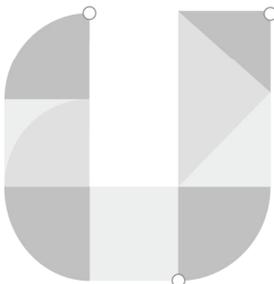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례

요약	9
I. 서론 오경섭	13
II. 통치 안정화 전략과 통치 담론	23
1. 김정은 통치 안정화 전략 분석: 7차 및 8차 당대회를 중심으로 김진하 · 25	
2. 통치담론 김에스라	60
III. 김정은과 엘리트 및 인민의 관계	83
1.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령과 엘리트 한병진	85
2. 이중적 인민 정책 오경섭	117
IV. 국정전략과 기관·인물 체계 개편 박형중	139
1. 서론	141
2. 김정은식 국정전략 확립과 엘리트 갈등 (2021-2013)	143
3. 김정은식 국정전략 확립과 기관·엘리트 개편 (2014-)	147
4. 3대 공안기관 간 권세와 이익 갈등	157

V. 결론	195
1. 요약 및 결론	197
2. 정책 시사점	209
참고문헌	214
최근 발간자료 안내	231

표 차례

〈표 Ⅱ-1〉 독재자의 운명, 1946-2004	29
〈표 Ⅱ-2〉 체제이행과 전임자의 운명, 1946-2010	30
〈표 Ⅱ-3〉 김정은 권력세습 후견엘리트 집단	40
〈표 Ⅱ-4〉 김정은 집권 이후 5년간(2012-2016년) 숙청 규모	43
〈표 Ⅱ-5〉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 인선	49
〈표 Ⅱ-6〉 7차 당대회 주요 인선	51
〈표 Ⅱ-7〉 8차 당대회 주요 인선	51
〈표 Ⅲ-1〉 엘리트의 집단행동과 독재정치질서	86
〈표 Ⅲ-2〉 2012년 인민 생활 관련 건설사업 현지도	131
〈표 Ⅳ-1〉 김정은 시대 주요 직책 변화 (2012-2021.10)	191

그림 차례

〈그림 Ⅲ-1〉 노동신문의 백두의 혁명정신 보도 빈도 추이 71

이 연구는 집권 10년 동안 김정은 정권이 유일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정치 분야 정책을 평가한다. 이 연구는 5장으로 구성한다. II장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 안정화 전략과 통치 담론을 분석한다. III장은 김정은과 엘리트 및 지배 세력과 인민들의 관계를 분석한다. IV장은 국정전략과 기관·인물체계 재편을 분석한다. V장은 결론 및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10년 동안 엘리트와 인민들의 충성과 복종을 유도함으로써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에 성공했다. 엘리트 정책으로 국정전략에 맞춰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엘리트들로 지배연합을 재편했고, 인민 정책을 통해 인민들의 반대를 억압하면서 자발적 지지를 유도하는 이중적 정책을 실행했다. 김정은 정권은 지배연합의 강력한 결속과 지지를 바탕으로 핵·미사일 능력의 추가발전과 재래식 군비의 선택적 현대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길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북핵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는 심각한 위협요인이다. 대북 제재와 국경봉쇄가 지속되면서 경제가 나빠지고,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도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는 인민들의 식량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며 인민들의 불만을 키운다. 통치자금 부족은 엘리트들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엘리트들의 이탈을 촉진한다. 그러므로 향후 UN의 대북 제재는 김정은 정권 안정성에 계속 영향을 줄 것이다.

주제어: 김정은 정권, 권력 안정화, 통치 안정화 전략, 통치 담론, 간부 정책, 인민 정책, 국정전략

Establishment of the Kim Jong Un Regime and the Stabilization of Power

Oh, Gyeong Seob et al.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that provide an overview of policies implemented by the Kim Jong Un regime in pursuit of a stable one-man ruling system over the decade following his ascension to power in 2012. Chapter II analyzes the Kim Jong Un regime's strategy in terms of political stabilization and discourse. Chapter III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Kim Jong Un, the DPRK elite, and North Korean citizens. Chapter IV outlines the North's state affairs and restructuring of power institutions and elites. Lastly, Chapter V provides a conclusion and sets forth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The Kim Jong Un regime has successfully established a monolithic ruling system and consolidated its grip on power since coming into power a decade ago by inducing the ruling elites and people to stay local and obedient to the regime. The policy on elites, in line with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has reorganized the ruling elite association by appointing the elites loyal to Kim Jong Un and pursued a contradictory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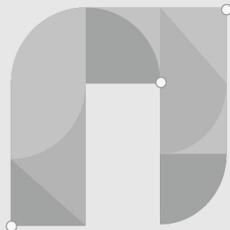
of deriving voluntary support from people while suppressing those who oppose him. Based on the strong solidarity and support of the ruling power, the regime has forged a new path that aims to strengthen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s well as modernize selected conventional arms.

Nevertheless, there remain both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that need to be overcome by the Kim Jong Un regim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well as the state's ongoing border closure in response to COVID-19 currently pose serious threats to the state. Sanctions and coronavirus lockdowns have taken a major toll on the North Korean economy, depleting the state budget. Furthermore, dissatisfaction among citizens is mounting as the economic crisis complicates efforts to feed people and resolve food shortages. The depletion of the state budget reduces the incentives provided to the elites and thus induces the elites to deviate from the regime. Therefore the intensity of UN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will further affect the stability of the Kim Jong-un regime.

Keywords: Kim Jong Un regime, power stabilization, political stabilization strategy, political discourse, policy on party leadership, policy on North Koreans, state affairs strategy

1. 서론

오경섭 통일연구원



이 연구의 목적은 2012년 북한의 권력세습 이후 10년 동안 김정은 정권이 유일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정치 분야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권력세습 이후 김정은의 권력이 안정될 것 인지는 불확실했다. 김정은은 2008년 말 북한의 후계자로 등장할 때까지 공식적인 당직을 맡지 않았고, 북한 인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정치경력이나 업적도 없었다. 후계자 수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불과했다. 후계자 김정은의 정통성은 김일성·김정일을 승계한 백두혈통이라는 사실에서 찾았다. 김정은이 백두혈통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북한의 권력을 세습할 이유가 거의 없었다.

후계자로 내정된 지 3년 만에 최고지도자에 오른 김정은은 당시에 권력을 완전하게 장악·통제했다고 볼 수 없었다. 이것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존의 독재 연구는 후계자가 정해진 경우 개인독재정권에서 권력투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개인독재정권에서 독재자가 사망한 후 후계자의 부재는 불확실성을 높인다. 그러나 후계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권력투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1946년부터 2012년까지 김정일을 포함한 전 세계 79명의 독재자가 자연사한 이후 민주정권으로 교체된 사례는 4%에 불과했다.¹⁾ 기존 독재정권이 유지된 경우는 87%에 달했다.²⁾ 독재자 사망 후 5년 내 민주정권으로 교체되는 경우는 24%였다.³⁾

권력세습은 지도자와 지배연합 엘리트들 모두에게 유리한 권력승계 방식이다. 전임자는 세습 제도를 이용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지원 하는 지배연합 엘리트들도 물려준다. 새로운 지도자는 자신을 지원

1) Andrea Kendall-Taylor, Erica Frantz, "When Dictators Die," *Journal of Democracy*, vol. 27, no. 4, Oct., 2016.

2) *Ibid.*, p. 160.

3) *Ibid.*, p. 165.

하는 지배연합 엘리트들을 기반으로 세습 권력을 안정시킨다. 반면에 지배연합 엘리트들은 전임자의 세습 후계자를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받는다. 최고 권력이 지배연합의 외부인에게 넘어가면, 지배연합 엘리트들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권력세습은 외부인에게 권력이 넘어갈 때보다 지배연합 엘리트들이 기득권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인다.⁴⁾

김정은 정권은 수령유일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를 위해서 엘리트들의 충성과 인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했다. 김정은 정권이 엘리트들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은 ‘간부 정책’으로, 인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은 ‘인민 정책’으로 규정한다. 간부 정책은 엘리트들의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공유하는 것이고, 인민 정책은 피지배자들의 지지를 유도하고 정치적 반발을 막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⁵⁾

권력세습 이후 김정은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요인은 지배연합의 반발이었다. 지배연합 엘리트들은 세습 후계자를 지지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었다. 지배연합 엘리트들은 김정은 지지를 선택했고, 김정은 후견 체제에 참여했다. 김정은의 권력세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엘리트들이나 정치 파벌은 거의 없었다. 지배연합 엘리트들은 새로운 독재자의 등장으로 인해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것보다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을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장받는 길을 선택했다. 김정은 정권은 엘리트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간부 정책을 실행했다. 그것은 간부 정책을 통해 주요 권력기관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지배연합을

4)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알라스케어 스미스 지음, 이미숙 옮김. 『독재자의 핸드북』,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2), p. 79.

5) Milan W. Svob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 2.

구축하고, 엘리트들의 충성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구축한 후견 체제를 기반으로 권력세습을 끝내고, 지배연합 재구성에 나섰다. 후견 체제에서 믿을 수 없는 위협적인 인물들을 제거하고, 충성심을 검증한 인물들을 중용했다.⁶⁾

인민 정책의 주목적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북한 인민들은 강력한 감시·억압 시스템으로 인해서 김정은 정권 반대운동에 나설 수 없었다. 북한에는 반정부 단체도 없고, 반정부 운동도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인민들은 김정일과 조선노동당이 결정한 후계자를 수용했다. 김정은 정권은 기존의 감시·억압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중적 인민 정책을 실행했고 인민들이 정치적 반대를 표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은에 대한 인민들의 자발적 충성과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했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의 백두혈통을 부각하며 정통성을 확립했고, 친인민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인민중시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제시했다.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고 권력을 안정시켰는가? 김정은 정권은 독재정권의 핵심 도전요인인 엘리트들의 반발과 인민들의 반대를 어떻게 막았는가? 김정은 정권은 어떤 통치 안정화 전략과 간부 정책·인민 정책을 실행했는가?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집권 10년 동안 수령유일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립·실행한 통치전략과 정책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통치전략과 정책은 통치 안정화 전략과 통치 담론, 김정은과 엘리트 관계 및 지배 세력과 인민의 관계, 국정전략의 변화와 기관·인물체계 재편으로 구분해서

6)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알라스케이어 스미스 지음, 이미숙 옮김, 『독재자의 핸드북』, pp. 117~118.

분석한다. 각 장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II장은 김정은 정권의 통치 안정화 전략과 통치 담론을 분석한다. 우선, 제7차·제8차 당대회에서 진행된 당사업총화보고를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한 통치 안정화 전략을 분석한다. 김정은의 생존 전략은 가산제 통치 안정화 전략이다. 개인독재정권은 탄압과 포섭을 활용해서 지배연합 엘리트들을 가신화하여 정권을 안정화하고, 피지배자인 인민들의 저항과 봉기를 사전에 봉쇄한다.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구축의 걸림돌은 역설적으로 3대 세습을 지원한 지배연합 내부의 측근 가신들과 후견세력들이다.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전까지 260명 이상의 최고위급 간부들을 숙청함으로써 신뢰하기 어려운 엘리트들을 제거했다.⁷⁾ 숙청된 간부들의 빈자리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검증받은 신진 엘리트들로 채웠다. 김정은은 신진 충성과 관료들로 지배연합을 재구성해서 권력을 안정시켰다.

김정은은 경제통제, 이념 교양, 전체주의 주민동원 등 전통적인 주민통제 전술을 이용해서 인민들을 통제했다. 김정은은 대중동원 및 사상 교양의 핵심 기제로서 당 지배체제 재건, 인민대중제일주의 등 새로운 신념 상징체제를 도입해서 선제적 이념통제를 실행했고, 핵무력 개발과 대북 제재의 대립국면을 활용해서 내부적 체제 결집을 강화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제시한 김정일애국주의, 백두의 혁명정신, 우리 국가제일주의 등 통치 담론을 분석한다. 권력 집단은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조직·재정·인력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통치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한다.⁸⁾ 김정은은 아버지

7)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p. 58~66.

8) 김에스라, “김정은 시기 정치담론 동학에 관한 연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

인 김정일에 비해 후계자로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지 못했기에 북한 인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최고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김정은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통치 담론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여 안정적으로 권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인민들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권력세습의 정당성 확보를 통해 정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제시한 김정일애국주의, 백두의 혁명정신, 우리 국가제일주의 등의 통치 담론을 분석한다.

Ⅲ장은 김정은과 엘리트의 관계 및 지배연합과 인민들의 관계를 분석한다. 우선, 김정은과 엘리트 관계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급하게 개인독재를 세습한 김정은이 엘리트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해서 실행한 전략을 분석한다. 핵심 분석 대상은 계승 초기 김정은이 엘리트의 절대복종이라는 공동지식과 조정을 위해 사용한 지배의 기술이다.

여기서 핵심 전제는 세습 독재자는 신생 독재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다. 오랜 개인독재의 관습이 자리 잡은 북한에서 지배연합 엘리트들은 다수가 함께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일방적으로 독재자에 대한 충성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다. 젊은 독재자 김정은은 이러한 이점을 등에 업고 계승 초기 당을 복원하고 전통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다소나마 안심한 지배연합 엘리트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였을 것이고, 선군의 혼란기에 만들어진 다양한 파벌의 연합 대신 오만한 주요 엘리트는 수령의 호의를 얻기 위한 충성경쟁을 진행했다. 이는 개인독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호작용이다.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 18.

엘리트들은 오만과 상호불신에 빠졌으나 김정은은 권력 장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세습의 이 점에도 불구하고 주요 엘리트들을 한꺼번에 숙청하지 않고, 짧은 주기로 순차적으로 숙청했다. 김정은은 숙청을 마무리하면서 헌법이 라는 최대 스피커를 통해 절대권력에 대한 절대복종이라는 공동지식과 엘리트의 조정을 공식화한다. 엘리트들에 대한 최소 징벌의 수준은 절대복종의 조정 균형에서 이탈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극단적이다.

또한, 지배연합과 인민들의 관계를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는 김정은에 대한 인민들의 반대를 막고, 인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었다. 김정은 정권은 지지자들에게는 관대하고, 반대자들은 강력하게 억압·통제하는 이중적 인민 정책을 실행했다. 인민 정책은 기존의 인민통제 시스템 활용, 김정은의 권위와 정통성 확립, 인민중시정책과 인민대중제일주의 등이다.

김정은 정권은 이중적 인민 정책을 통해 지지자들을 더 결집하고, 반대자들을 억압·통제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국경봉쇄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인민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발전을 통한 인민 생활 향상을 실현해야 한다.

IV장은 김정은 정권식 국정전략과 연계시켜,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의 기관·인물 재편을 검토한다. 본 장의 2절에서 김정은식 국정전략 확립 과정에서 엘리트 갈등을 다룬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당시 북한 정권 내부에는 두 개의 국정전략 대안과 그를 둘러싼 경쟁이 존재했다. 3절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권력구조

개편을 다룬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리영호 총참모장 숙청, 2013년 말 장성택 숙청을 토대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에 나섰다. 권력구조 개편은 세 가지 원칙으로 진행했다. 첫째, 선당의 원칙하에 군부 개편, 둘째, 세대교체 단행, 셋째,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위한 기관·인물 체계의 재구성이었다. 4절은 2~3절에서 언급한 과정들과 동시에 진행된 김정은 시대 3대 공안 기관(조직지도부, 총정치국, 국가보위성) 간의 권세 및 이권 다툼을 분석한다. 이들 권력기관은 수령에 대한 충성을 구실로 자신들 권력기관의 권세와 이권을 확장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충돌한다. 이러한 갈등은 수령에 의해 조정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한다.

V장은 이 연구의 요약 및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통치 안정화 전략과 통치 담론

김진하 통일연구원

김에스라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1. 김정은 통치 안정화 전략 분석: 7차 및 8차 당대회를 중심으로

북한 독재체제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최고지도자 개인에 권력이 집중된 인적(人的) 독재, 즉 독재자 중심 개인독재체제(Personalist Dictatorship, 이하 개인독재)를 3대 부자세습으로 고착화시켰다는 점이다.⁹⁾ 최고 권력의 혈연적 가계계승(Hereditary Succession)이 야말로 사실상 인적 네트워크 독점을 통해 체제를 지배하는 개인독재체제의 고착을 입증하는 지표이다.¹⁰⁾ 권력세습은 최고 독재자에게 도전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이 제거되었거나 가신화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독재자 중심 개인독재체제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바로 최고 권력자의 교체 순간이다. 권력세습이 통치연합 내 지배엘리트들에 의해 정당한 권력승계 방식으로 인정된 체제에서조차 최고 권력자의 교체 순간은 위험하다.¹¹⁾ 최고 권력자 생존 시 복종하던 지배엘리트들이 최고권력 유고 상태가 발생한 공백기에도 아직 권력을 확고히 사유화하지 못한 전임 독재자의 혈연적 후계자에게 여전히 충성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임 독재자에게 권력 집중이 심대할수

9) Samuel P.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pp. 110~121; Barbara Geddes, *Paradigms and Sand Castles: Theory Building and Research Designing Comparative Politic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pp. 50~69; Barbara Geddes, Joseph G. Wright, and Erica Frantz,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pp. 79~88.

10) Jason Brownlee,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 59, no. 4 (2007), pp. 595~628.

11) Seweryn Bialer, *Stalin's Successors: Leadership, Stability, and Change in the Soviet U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 184~185.

록 지도자 교체기에 나타날 수 있는 위기요소는 증가하게 마련이다. 권력 공백의 여파가 극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독재체제의 권력 승계 시기에는 체제 지구력이 절대평가를 받는 운명의 시간이 도래하는 것이다.¹²⁾

2011년 말 김정은은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세습 공고화 과정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권력을 세습한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은 건강한 김일성의 후광 아래 충분한 지도자 수업과 우상화 과정을 거쳤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는 소위 당 중앙의 실질적인 권력 최상위에 자리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인적으로 결집·단합된 가산제(家産制) 통치엘리트 연합을 구성했다.¹³⁾ 그는 이를 통해 시간적 여유를 누리며 최고 독재자로서의 정치적·조직적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¹⁴⁾ 이와 달리 김정은은 2008년 김정일의 치명적인 뇌졸중 발병으로 2009년 급작스럽게 후계자로 선택된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며 겨우 1년 남짓 졸속한 후계자 수업 기간만을 가질 수 있었던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신들로 구성된 후견연합의 지원을 받으며 권력을 계승한다.¹⁵⁾

김정은은 미약한 정치 경험에도 후견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자신

12) Gordon Tullock, *Autocracy*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7), pp. 151~166.

13) 김정일 주도하에 북한판 독재자 중심 인적 독재체제를 강령적으로 확립한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발표는 김정일로의 세습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공표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송인호, “북한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vol. 43, no. 1 (2019), pp. 145~176; 김정일 가산제 통치연합의 구성과 통치연합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Alexandre Y. Mansourov, “Emergence of the Second Republic: The Kim Regime Adapts to the Challenges of Modernity,” in Young Whan Kihl and Hong Nack Kim, eds., *North Korea: The Politics of Regime Survival* (Armonk: M.E. Sharpe, 2006), pp. 37~58.

14) 이태섭,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 ‘단결’의 정치,” 『현대북한연구』, vol. 6, no. 1 (2003), pp. 11~51.

15) 김진하,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순환도발전전략의 기원 및 권력세습 이후 패턴분석,” 『국방연구』, vol. 57, no. 1 (2014), pp. 46~47.

만의 통치엘리트 지배연합을 단시간 내 구성하여 유일독재를 재건해야 하는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집권 10년은 북한판 개인독재체제인 유일영도체제의 재건과 개인독재자로서의 생존을 위한 집권 안정화 과정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김정은은 김정일 이래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된 핵무장이 초래한 외교적 고립과 국제제재 강화에 따른 경제난 악화로 위기에 봉착한 비정상적 체제를 세습 받았다. 집권 안정화는 지난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정은의 생존전략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 본 절은 김정은의 지배체제 구축과 통치 안정화에 동원된 가산제 통치전략 분석에 집중한다.

본 절은 다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가. 권위주의 체제유지]는 일반적으로 독재체제, 특히 독재자 중심 개인독재체제에서 동원되어온 체제 안정화 전략과 수단에 초점을 맞춘다. [나. 김정은 정권의 통치 안정화 전략]은 첫 부분에서 소개한 가산제 통치전략의 개념과 수단을 토대로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정화 전략과 이를 명확하게 드러낸 김정은 집권기 중 개최된 7차 및 8차 당대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한다.

이 글이 북한 당대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국가 독재체제에서 당대회는 최고 권력자의 통치전략과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최종 교시가 법제화되어 선포되는 제1 수단이자 포럼이다. 특히 제도적 변화뿐만 아니라 인사, 이념노선, 주요정책 기조, 외교 및 국방 전략을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당대회 결정서는 김정은과 같은 유일독재자의 통치전략이 요약적으로 드러나는 핵심교본이다. 더욱이 김정은은 군을 권력 유지의 근간으로 포섭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대신하여 당을 유일영도체제 재건의 중핵으로 활용했다. 당대회의 중요성이 더욱 배가된 것이다.

가. 권위주의 체제 유지

(1) 독재체제 안정화 전략

어떠한 정치체제에서도 직업정치인은 결국 정치적 생존(Survival)과 권력 지위 보전에 목표를 두고 이기적인(Self-Interested)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정치적 사업자(Political Entrepreneur)이다.¹⁶⁾ 이런 점에서 “모든 정치인의 동기는 권력을 획득하고, 권력 지위에 최대한 오래 머물며, 재정 통제(Control over Money)를 지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정치 제도화 및 투명성의 수준이 조악하여 항시적인 불확실성과 폭력행사 가능성이 정치영역을 지배하는 권위주의 독재체제에서¹⁸⁾ 정치인들의 생존 추구는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권력의 상실이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몰락은 물론, 일신상의 위해를 동반하게 될 가능성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46-2004년간 전 세계 독재자의 47%가 권력 상실의 결과로 투옥(Prison), 추방(Exile), 죽음(Death) 등 가혹한 운명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¹⁹⁾ 특히 <표 II-1>이 보여주듯이, 인적 개인독재체제(Personalist Regime)의 독재자들은 군부(Military) 독재나 일당(Single-Party) 독재체제의 전임 독재자들보다 심각한 결과를 얻게 될 개연성이 크다.

16) Joseph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perPrennial, 1975), pp. 269~273; Barbara Geddes, *Politician's Dilemma: Building State Capacity in Lat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pp. 24~42.

17) Bruce Bueno de Mesquita and 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11), p. 10.

18) 이 글에서 독재체제와 권위주의체제는 호환 사용된다.

19) Abel Escriba-Folch, "Accountable for What? Regime Types, Performance, and the Fate of Outgoing Dictators, 1946-2004," *Democratization*, vol. 20, no. 1 (2013), p. 160.

〈표 II-1〉 독재자의 운명, 1946-2004

Ruler' regime	Succeeded by	Post-exit fate			
		OK	Exile	Prison	Death
Personalist	Dictator	31.82% (21)	33.33% (22)	16.67% (11)	18.18% (12)
	Democracy	34.62% (9)	34.62% (9)	19.23% (5)	11.54% (3)
Military	Dictator	49.33% (37)	17.33% (13)	24% (18)	9.33% (7)
	Democracy	58.33% (21)	25% (9)	11.11% (4)	5.56% (2)
Single-party	Dictator	60.29% (82)	20.59% (28)	11.03% (15)	8.09% (11)
	Democracy	84.21% (16)	5.26% (1)	5.26% (1)	5.26% (1)

출처: Abel Escriba-Folch, "Accountable for What? Regime Types, Performance, and the Fate of Outgoing Dictators, 1946-2004," p. 176.

또한, 2014년 게디스(Barbara Geddes) 등의 연구에 따르면, 〈표 II-2〉와 같이 권위주의체제의 전환의 경우에도, 민주체제로의 전환을 맞이한 전임 독재자들에 비해, 독재체제로의 체제 전환을 겪은 전임자들이 더 혹독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⁰⁾ 이에 따라 권위주의체제에서, 특히 독재자 중심 개인독재체제에서 권력투쟁 발생 가능성과 권력투쟁의 방식이 폭력적이며 결정적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메스키타(Mesquita) 등의 지적처럼,²¹⁾ 독재체제 최고 권력자가 지배권력 안정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20) Barbara Geddes, Joseph Wright, and Erica Frantz, "Autocratic Breakdown and Regime Transitions: A New Data Set,"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2, no. 2 (June 2014), p. 322.

21) Bruce Bueno de Mesquita, et al.,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IT Press, 2003), pp. 8~9.

〈표 11-2〉 체제이행과 전임자의 운명, 1946-2010

Post-Exit Fate	After transition to	
	Autocracy	Democracy
Death	14	6
Jail	22	11
Exile	38	23
OK/Natural Death	27	60

출처: Barbara Geddes, Joseph Wright, and Erica Frantz, "Autocratic Breakdown and Regime Transitions: A New Data Set," p. 322.

독재체제에서 통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독재 체제를 위협하는 도전은 크게 권위주의 지배엘리트의 통치에 도전하는 피지배층의 봉기, 즉 밑으로부터의 반란과 지배엘리트 내부자들의 도전, 즉 엘리트 반란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이 글도 김정은 정권의 지배 안정화 전략을 내부 엘리트 통제 전략과 주민통제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그렇다면 내부의 도전과 밑으로부터의 도전 중 어느 것이 독재체제에게 더 위협할까?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독재타도를 연호하며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시위대에 천착하기 쉽다. 그러나 독재체제 몰락이나 체제전환 사례에 대한 경험적·통계적 연구들은 체제 내부 엘리트들의 권력투쟁과 쿠데타, 즉 엘리트반란이 주요인임을 명확히 보여준다.²²⁾ 스볼릭(Milan Svolic)의 연구는 1946-2008년간 독재체제 붕괴 사례의 2/3 이상이 내부 엘리트들의 쿠데타나 반란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²³⁾ 독재체제의 안정성과 지배력 확보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은 내부 통치엘리트의 관리와 통제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22) Barbara Geddes, Joseph G. Wright, and Erica Frantz,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p. 170; Erica Frantz, *Authoritarianism: What Everyone Needs to Kno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 125.

23) Milan W. Svolic,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 5.

지배연합 엘리트 분열이 왜 더 증대한 체제위협 요인으로 작동하는가? 아무리 강력한 독재자일지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경쟁자들을 제압하고 주민을 통제하며 체제를 옹위해 나갈 수 없다. 동료나 참모, 무력행사 전문가, 행정가 등 정권 창출과 통치에 필요한 자원과 조직, 인맥을 보유한 지지엘리트 세력들의 지원이 없다면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 특히 독재체제 창립 시기나 최고지위를 승계한 후계 정권 초기에 있어, 독재자를 지원하는 지지엘리트 세력의 도움은 절대적 의미를 갖는다.²⁴⁾

그러나 일단 정권이 수립되고 권력 장악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고 나면, 최고지도자, 즉 독재자, 그리고 독재자와 더불어 지배연합을 구성하게 된 체제 내부 엘리트 세력은 불가피한 상호불신과 잠재적 경쟁관계에 돌입하게 된다. 정치세력 간 충돌을 조정할 불편부당한 독립적인 제3의 정치권력(예, 사법부나 언론)이 부재하고, 정치 제도화 및 법치의 수준이 낮으며, 민주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창출이 불가능한 권위주의체제에서는 상호불신과 공포, 권력매집과 독점욕구, 선제공격에 대한 유혹이 짙게 드리우게 된다. 독재자는 엘리트 세력에게 진 빚을 부인하며 권력독점을 추구할 수 있으며, 위협을 느끼는 엘리트 동맹세력은 이를 선제적으로 제압할 기회를 노리게 된다. 정권 수립 초 권위주의체제에서 정치 불안정과 불확실성, 그리고 잠재화된 불신과 폭력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운명인 것이다.²⁵⁾

더욱이 정권 수립 초기에는 독재자는 물론이고 지배연합 엘리트

24) Stephen H. Haber, "Authoritarian Regimes," In Barry R. Weingast and Donald Wittman,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p. 693~707.

25) Roger B. Myerson, "The Autocrat's Credibility Problem and Foundations of the Constitutional Stat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2, no. 1, (2008), pp. 125~139.

세력도 여전히 동원 가능한 인력, 조직, 폭력, 이념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권력 공유와 안전보장에 관한 상호신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체제 내부 분열과 상호 간 공포가 극대화되는 순간이다. 예컨대, 김정일 시대는 물론, 김정은 정권도 권력승계 시부터 주민통제에 앞서 지배연합의 구성과 관리, 그리고 내부 엘리트 통제에 진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위주의체제 지배연합 엘리트 세력의 균열과 불신을 감소시켜 통치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은 권력분점(Power-Sharing) 제도화와 독재자 개인으로의 권력집중으로 대별된다.²⁶⁾ 권력분점 전략은 지배엘리트 세력 간 권력분배를 비교적 투명성이 높은 공식적/비공식적인 권력공유제도(Power-Sharing Institutions)들의 확립을 통해 독재자와 통치연합세력 간 신뢰도와 상호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통치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다.²⁷⁾ 군주제 국가의 왕립자문회의(Royal Consultative Council),²⁸⁾ 군부통치체제 군부협의체(Junta)나 일당독재체제 지배정당의 정치국회의(Politburo) 등과 같은 집체적 정책결정과 권력배분 보장 장치는 권력분점을 제도화하여 내부반란이나 권력투쟁 가능성을 낮추어 체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²⁹⁾

26) Milan W. Svob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p. 53~63.

27) Milan W. Svobik, "Power-Sharing and Leadership Dynamics in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3, no. 2 (2009), pp. 477~494.

28) Michael Herb, *All in the Family: Absolutism, Revolution, and Democracy in the Middle Eastern Monarchi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pp. 1~50.

29) 미얀마 군부 준타는 군부의 결속과 권력분점을 통한 통치 안정성을 제고하여 군부독재의 지구력을 강화시켰다. Kyaw Yin Hlaing, "Setting the Rules for Survival: Why the Burmese Military Regime Survives in an Age of Democratization," *Pacific Review*, vol. 22, no. 3 (August 2009), pp. 271~291; Robert H. Taylor, *The State in Myanma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9), pp.

권력집중 전략은 최고 독재자가 지배엘리트 통치연합 세력 내 잠재적 도전자들을 일소하고 유일독재권력을 확립하는 전략이다.³⁰⁾ 국가권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되어 독재자에 체현되는 “확실히 자리를 잡은 전제독재체제(Established Autocracy)”이다.³¹⁾ 소위 독재자 중심 개인독재체제(Personalist Dictatorship)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유일영도체제가 대표적 사례이다. 아래에서 권력집중 전략의 핵심기제로서 가산제 또는 신가산제(新家産制, Neo-Patrimonialism) 통치 안정화 전략에 대해 논한다.

(2) 가산제 통치전략

권위주의체제, 특히 권력집중 경로를 선택한 독재자 중심 개인독재체제에서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요인은 통치연합을 구성하는 지배엘리트 세력의 분열과 내부반란, 즉 권력엘리트 내부 또는 궁전 쿠데타이다. 정치 및 경제 권력이 독재자 개인에 절대적으로 집중되면서 체제의 안위가 절대독재자의 건재에 달려 있게 되고, 절대 권력자 인신과 정치적 생존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행위자가 바로 지근에 위치한 통치엘리트 세력이기 때문이다. 내부 엘리트 세력의 반란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력 독점을 다지기 위해 독재자가 ‘광범위한 재량권’과³²⁾ 인적 권력네트워크를

375~485; Beatriz Magaloni, “Credible Power Sharing and the Longevity of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1, no. 4~5 (April 2008), pp. 715~741; Scott Gehlbach and Pilip Keefer, “Investment without Democracy: Ruling-Party Institutionalization and Credible Commitment in Autocrac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9, no. 2 (June 2011), pp. 123~139; Milan W. Svob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p. 85~94.

30) Geddes et al.,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pp. 61~94.

31) Milan W. Svob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 6.

32) Robert H. Jackson and Carl G. Rosberg, *Personal Rule in Black Africa: Prince,*

바탕으로 권력엘리트 파벌의 생성과 세력화 억제, 그리고 내부 쿠데타 방지(Coup-Proof)에 집중하는 권위주의 정치공학이 (신)가산제 통치 안정화 전략이다.³³⁾

가산제 통치 안정화 전략의 핵심은 통치 엘리트 세력의 가신화(家臣化)이다. 즉, 통치연합을 구성하는 지배엘리트 세력이 더 이상 독자적 파벌이나 조직, 정치경제적 자원을 보유한 통치동맹세력이나 혁명동지가 아니라, 독재자에게 절대적 충성과 헌신을 증명함으로써 절대적 권력과 재산을 보유한 ‘술탄(Sultan)적’³⁴⁾ 독재자의 인정과 호의를 얻어내어야 권력 지위와 특혜, 부패 권한, 그리고 경제적 부를 얻게 되는³⁵⁾ 조력자 또는 가신 처지로 만드는 것이다. 독재자의 인정과 호의가 사라지는 순간 정치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하므로 피지배주민들은 물론 통치엘리트 세력조차 독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종속적 존재로 격하된다. 북한의 소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³⁶⁾ 가산제 통치전략의 정치공학 이념을 그대로 드

Autocrat, Prophet, Tyra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p. 143.

- 33) James T. Quinlivan, “Coup-Proofing: Its Practice and Consequences in the Middle Eas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2 (1999), pp. 131~165; Lloyd I. Rudolph and Susanne Hoeber Rudolph, “Authority and Power in Bureaucratic and Patrimonial Administration: A Revisionist Interpretation of Weber on Bureaucracy,” *World Politics*, vol. 31, no. 2 (January 1979), pp. 195~227; Robin Theobald, “Patrimonialism,” *World Politics*, vol. 34 (July 1982), pp. 548~559.
- 34) Houchang E. Chehabi and Juan J. Linz, eds., *Sultanistic Regim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pp. 3~48.
- 35) Michael Bratton and Nicolas van de Walle, *Democratic Experiments in Africa: Regime Transi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 86.
- 36)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의 “주체사상교양에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제시되어 세습적 유일독재체제의 정당화 도그마 중 하나가 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사회정치적 존재인 개개인이 당의 영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 사상적으로 결속하면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know/view.do?id=31828&mid=SM00>)

러낸다.

여타 독재체제에서와 동일하게 가산제 정치공학을 통치 안정화 전략으로 활용하는 독재자 중심 개인독재체제에서도 독재의 주요 수단은 결국 탄압(Repression)과 포섭(Co-Optation)이다. 포섭은 정치권력과 경제적 부와 특권, 이념적 만족, 사회적 명예 등 지대(Rent) 자원을 지지자들에게 실제적 가치 이상으로 지불 배분(Overpay)하여 충성심을 유도하고 결집을 도모하는 기술이다.³⁷⁾

피지배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을 매개로 지배력을 굳히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통치엘리트층에는 특권적 자원배분을 통해 이들의 충성심을 유인하는 일종의 매수(Buying-off) 기술로 활용된다.³⁸⁾ 반면 숙청, 폭력, 감시와 강요, 경제적 박탈, 공포 조성, 테러(Terror), 사회적 고립과 제재, 추방 등 각종 탄압수단들은 잠재적 적대세력이나 반체제 성향 인사나 조직들에 유무형의 압박과 제한을 행사하는 강압적 체제 안정화 도구이다. 그러나 탄압과 폭력에 의존하는 정책은 군이나 경찰 및 공안조직 등 폭력기구의 비대화를 가져오기 쉽다. 탄압조직과 폭력전문가 집단이 독재자의 원래 의도와 다르게 가장 강력한 위협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³⁹⁾ 포섭과 탄압의 적절한 배합이 독재체제의 지구력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포섭과 탄압이라는 독재수단들은 가산제 통치 안정화 전략하에서 독재자 개인과 권력엘리트와의 유대관계 근접도와 충성도를 통해 권력지위와 특권이 분배되는⁴⁰⁾ 인적 네트워크의 바퀴축과

000536&limit=10&eqViewYn=true> (검색일: 2021.8.15.).

37) Ronald Wintrobe,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 38~39.

38) *Ibid.*, p. 335.

39) Milan W. Svob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p. 123~138.

40) Karen L. Remmer, "Neopatrimonialism: The Politics of Military in Chile, 1973-1987," *Comparative Politics*, vol. 21, no. 1 (January 1989), pp. 149~170.

바퀴살 체제(Hub and Spoke System)를 구축한다.⁴¹⁾ 다른 한편, 통치엘리트 파벌과 조직의 세력화를 예방하는 데 투사된다. 무엇보다도, 권력엘리트 세력의 정치적 결집과 집단적 행동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지닌 인적·조직적 센터 형성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데 주력한다. 가산제 바퀴축의 네트워크 외곽 또는 중간 기착지에 형성될 수 있는 소위 중간보스들과 그들의 조직 거점들을 분쇄하는 데 집중한다. 유사시 반란과 저항의 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재자의 측근 선택 역시 전문적 능력보다는 정치적 충성심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게 된다.⁴²⁾ 독재자의 안전이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이다.

‘선별적인 정실주의(Selective Favoritism)와 편파적 후원(Discretionary Patronage)’으로 잠재적 저항 또는 반대세력을 제압하는 동시에 충성파의 진지(Loyal Base)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⁴³⁾ 권력 조직에 대한 예방적 숙청을 통한 방역, 특히 특정 엘리트 세력이나 인물이 권력거점을 보유하게 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불규칙한 인사 로테이션(Rotation)을 단행한다. 소위 ‘파당의 공포’를 소멸시키기 위한 폭력의 기예이다.⁴⁴⁾ 이유가 불분명하며 예측이 불가능한 선제적 숙청과 좌천, 그리고 공포정치 테크닉을 활용하여 특정 인물이나 조직세력의 권력결집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절대 권력자에 대한 무기력증을 각인시키는 데 힘을 기울인다.⁴⁵⁾

41) Alexandre Y. Mansourov, “Emergence of the Second Republic,” pp. 37~58.
 42) Georgy Egorov and Konstantin Sonin, “Endogenizing the Loyalty–Competence Trade–Off,”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 9, no. 5 (2011), pp. 903~930.
 43) Eva Bellin, “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s*, vol. 36, no. 2 (January 2004), p. 145, 150.
 44) Douglas C. North, John J. Wallis, and Barry R. Weingast, *Violence and Social Ord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 197.

그 외에 경제적 자산과 자원을 독점적으로 통제하여 독재자와 독재자 가문을 제외한 어떠한 조직, 인물, 집단도 충분한 자립적 경제기반을 가지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조치를 취한다. 충성분자들에 분배된 자산이나 부패 권한도 독재자의 신임이 사라지는 순간 몰수될 수 있도록, 정치 부문, 특히 국가권력의 절대성을 확보한다. 경제적 자립을 갖춘 잠재적 도전 세력의 발흥을 차단하면서 충성세력의 독재자에 대한 물질적 의존을 극대화하는 조치이다. 김정은 정권의 경우,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 및 국가소유제의 유산으로 김씨 가문이 주요 산업 및 경제기반을 독점할 수 있었다. 가산제 통제 전략 이행에 유리한 환경을 유증 받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 국제 경제제재의 심화, 장마당 경제의 확산은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권력엘리트 간 소통(Communication)과 조율(Coordination)을 사전에 차단하여 체제 내부 세력의 저항과 공정 반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진력한다. 특히 엘리트 세력 및 조직 간 반목과 충성경쟁을 유인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조직 간 힘의 배분관계를 수시로 변경하여 권력결집을 방해한다. 분할 통치를 통한 반쿠데타 작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혈연적, 문화적, 종교적, 신분적, 지역적 분열을 유도하고 특정 부문을 중용하여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경쟁자들에 둘러싸여 독재자에게만 절대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는 지배 귀족층을 양성하기도 한다.⁴⁵⁾ 소위 북한의 만경대 가문, 백두산 혈통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산제 독재체제에서 국가폭력기구의 비대화는 거의 필연적이다.

45) Yoram Gorlizki and Oleg Khlevnuk, *Cold Peace: Stalin and the Soviet Ruling Circle, 1945-195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 3.

46) James T. Quinlivan, "Coup-Proofing: Its Practice and Consequences in the Middle East," pp. 131~165.

이에 대한 견제를 위해 가산제 독재자들은 정규군에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존재하며 독재자와 운명을 같이할 가산제 친위군 집단을 창설하곤 한다.⁴⁷⁾ 상호견제하에 군부 쿠데타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창설된 유사 군조직들이다. 비밀경찰 및 공안조직의 비대화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독재자는 관할권이 겹치는 경찰 및 공안조직을 다수 창설하여 상호경쟁과 반목을 유도한다. 더 많은 권력과 자원분배, 지위확보를 노리는 이들 조직들은 독재자의 호의와 신뢰를 얻기 위해 경쟁하며 상대조직을 위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독재자는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⁴⁸⁾

민간 출신의 가산제 독재자의 경우, 지배정당 창설과 공고화를 군 및 보안기구 출신 지배연합 엘리트 세력을 견제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⁴⁹⁾ 민간(Civilian) 지지자들의 공식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동시에 독재자에 충성하는 민간 당 간부들을 내부통치 집단(Inner Circle)에 편입하여 독재자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당의 군중 동원력을 통해 군 등 전문폭력조직의 반란 가능성을 예방 견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⁵⁰⁾

강력한 ‘지배정당에 기반한 개인독재체제(Bossim)’는 강력한 체제 지구력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⁵¹⁾ 특히 당의 엘리트 갈등조율과

47) Eva Bellin, “Coercive Institutions and Coercive Leaders,” in Marsha Pripstein Posusney and Michele Penner Angrist eds.,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Regimes and Resistance*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2005), pp. 21~41.

48) Sheena Chestnut Greitens, *Dictators and Their Secret Police: Coercive Institutions and State Viol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pp. 25~32.

49) Barbara Geddes, “How Autocrats Defend Themselves Against Armed Rivals,” APSA 2009 Toronto Meeting Paper (August 2009), pp. 1~12.

50) Barbara Geddes, Joseph G. Wright, and Erica Frantz,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pp. 111~115.

51) Dan Slater, “Iron Cage in an Iron Fist: Authoritarian Institutions and the

상호감시 및 통제 기능은 엘리트 반란과 권력투쟁 개연성을 사전에 감소시켜 엘리트 분절화(Fragmentation)를 최소화하고 통치 안정성을 강화한다.⁵²⁾ 독재자에 충성하는 응집력 강한 지배정당의 존재는 위기 시 독재자와 체제를 수호하는 요새로 기능할 수 있다.⁵³⁾

밑으로부터의 봉기나 저항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가산제 통치 안정화는 대중동원 및 이념통제, 감시 및 통제체계 확립, 그리고 경제통제 등 전통적인 탄압과 시혜정책 병용 전략을 채용한다. 의식화 교육과 사고통제, 그리고 정보차단, 자기검열과 비판 기제의 내재화 등 이념적 동원은 김일성 시대 이래 집요하게 선호되어 온 전형적인 군중지배 전략이다. 이어서 김정은표 피지배층 통제 전략의 특징으로서 당 중심 주민통제체제 복원, 인민대중주의 주창 등 선제적 이념교양, 그리고 핵무력 개발과 제재강화의 효과를 역이용한 전환전술을 살펴본다.

그리고 가산제 통치 안정화 전략이 김정은 정권 10년 동안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본다.

Personalization of Power in Malaysia,” *Comparative Politics*, vol. 36, no. 1 (2003), pp. 81~101.

52) Jason Brownlee, *Authoritarianism in an Age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 122~156.

53) Benjamin Smith, “Life of the Party: The Origins of Regime Breakdown and Persistence under Single-Party Rule,” *World Politics*, vol. 57, no. 3 (April 2005), pp. 421~451.

나. 김정은 정권의 통치 안정화 전략

(1) 지배엘리트 통제 I: 숙청정치와 김정일 유일지도체제 재구축

3대 세습을 진행한 북한독재체제의 장수비결은 효과적인 가산제 통치 안정화 전략을 통한 체제 내부의 지배엘리트 관리였다. 그러나 선대로부터 효과를 입증해 온 강력한 가산제 독재의 전통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세습 초반에 체제 유지를 낙관할 수 없는 가혹한 생존환경에 처했다.⁵⁴⁾ 김정일 사망 이후 절대권력을 세습한 김정은의 생존을 위한 절대 명제는 ‘수령제’⁵⁵⁾ 유일영도체제를 재건하여 통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김정일 선군시대를 풍미했던 막강한 구신(舊臣) 통치엘리트들, 특히 소위 ‘운구차 7인방’을 포함하는 김정은 승계 ‘후견세력’의 건재는 김정은 개인독재체제 확립의 거대한 장애물로 다가왔다.⁵⁶⁾ <표 II-3> 참조.

<표 II-3> 김정은 권력세습 후견엘리트 집단

친족 및 가신 그룹	김경희(대장, 정치국위원, 경공업부장), 장성택(정치국후보위원, 중앙군사위원회위원, 국방위부위원장), 최룡해(정치국장, 비서국비서, 중앙군사위원회위원), 김평해(평북도당책임비서, 정치국후보위원, 비서국비서), 문경덕(비서국비서, 평양시당책임비서, 청년동맹 중앙위부위원장)
신군부	리영호(총참모장, 2012년 숙청), 최부일(대장 승진, 부총참모장), 김명국(작전국장, 중앙군사위원), 정명도(해군사령관), 현영철(8군단장), 김영철(총정찰국장) 등

54) Jin-Ha Kim, “North Korea’s Succession Plan: Stability and Future Outlook,” Korea University Ilmin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IIRI)-MacArthur Foundation Working Paper no. 8 (December 2010).

55)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pp. 58~66.

56) 김진하,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순환도발전략의 기원 및 권력세습 이후 패턴분석,” pp. 46~48.

선군정치 보안세력	우동측(정치국후보위원, 중앙군사위원, 국가안전보위부제1부부장), 김창섭(국가안전보위부정치국장), 주상성(정치국 위원, 국방위원, 인민보안성부장, 실각), 주규창(당 중앙위원회군수공업부장), 백세봉(제2경제위원장, 국방위원회위원), 김경옥(당조직지도부위원, 대장) 등
--------------	------------------------------------------------------------------------------------------------------------------------------------------------------

출처: 김진하,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순환도발전략의 기원 및 권력세습 이후 패턴분석" p. 47.

특히 후견세력의 증추인 장성택 등은 잠재적 위협이었다.⁵⁷⁾ 이들 구신 집단은 지배엘리트의 저항과 반기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정권이 선대에 비해서 더욱 혹독해진 엘리트 통제정책으로 위기 돌파에 나서리라는 점은 예상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김정은은 경제파탄, 국제적 고립, 장마당 경제의 확산과 피지배주민의 충성도 저하 등 더욱 열악해진 체제생존 여건에 처하게 된다.⁵⁸⁾ 핵무장 강행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대북재제 심화와 대외적 고립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자산 확보와 통치자금 매집이 힘들어지면서 엘리트 통제 정책수단의 한 축인 포섭, 즉 지배 엘리트 시혜와 매수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탄압과 숙청으로 통치연합 지배엘리트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았다. 여기서 숙청은 광의로 해석하며, 정치적·물리적 영구 제거뿐만이 아니라 강등, 좌천 및 해고, 재교육 등 엘리트에 대한 다양한 정치공학적 탄압을 함의한다. 다시 언급되겠지만, 숙청 후 재교육·재등용은 엘리트 길들이기의 주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요약하면, 권력을 갖 세습 받은 신규 독재자인 김정은은 유일지배 체제를 신속하게 재구축해야 하고 지배엘리트 규모의 과감한 감축을 통해 통치를 안정시켜야 하는 난제를 떠안았다. 대외적 고립과

57) Ken E. Gause, *North Korean House of Cards: Leadership Dynamics under Kim Jong-un* (Washington, DC: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 p. 39.

58)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1), pp. 45~118.

가용 통치자금의 감소는 김정은이 숙청과 공포정치에 방점이 찍힌 보다 가혹하고 강경한 엘리트 통제 방법을 빈번히 선택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권력세습과 동시에 김정은은 무엇보다도 유일영도체계의 재건을 통해 세습한 권력의 통치 안정화에 박차를 가한다. 유일체제 재건에 가장 큰 걸림돌은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일 와병 이래 3대 세습과정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아버지 김정일의 측근 가신들, 권력 엘리트 후견세력들일 수밖에 없었다.⁵⁹⁾ 세습 직후에 이들 후견엘리트 집단은 김정은의 아직 불안정한 리더십을 보완하며 세습과정을 마무리 짓는다.

비록 김정은이 인민군 최고사령관, 노동당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 국무위원회 위원장 등 벼락감투를 쓰고 외견상 당·군·정의 정점에서 독재 권력을 손에 쥔 모양새를 취했지만, 연령 및 정치경력 면에서 김정일 구신들에 견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김정은에게 이들 막강한 후견 원로들을 제거하거나 굴복시키고, 동시에 이들의 조직 거점들, 특히 무력 기관과 보위·보안 기관들에 대한 재정비 작업은 김정은 유일영도체제 구축의 선결과제였다. 자기 사람을 심는 통치관료의 변화는 김정은 정권 안정화의 핵심이었다.⁶⁰⁾

자기 정치의 완성을 선포한 2016년 7차 당대회 이전까지 김정은은 공포의 숙청정치를 지휘하며 이들 김정일 시대 기득권 기층엘리트들을 제거 또는 무해화(無害化)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 한기범의 연구에 따르면, <표 II-4>와 같이 이 기간(2012년-2016년)에 약 260명의 원로급 간부들이 순차적인 숙청 캠페인을 통해 숙청 또는

59) 김진하,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통일정세분석 2010.7, pp. 2~11.

60) 이승열,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 통치관료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00호, 2019.12.31., p. 1.

처형된 것으로 나타난다.⁶¹⁾ 김정은 시대에는 선군정치 치중으로 비
대해진 군부와 국방위원회가 우선 정비 대상이 된다. 김영춘, 김정
각 등 군부 원로그룹은 물론 리영호, 현영철, 변인선 등 군부 실세에
대한 숙청과 처형이 이루어졌다.⁶²⁾ 7차 당대회까지 인민무력상은 6
명(현재까지 총 10명), 총참모장은 5명이 교체됐다. 이후에도 군부
및 장령집단에 대한 의도적 명예실추, 견제 및 숙청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빈번한 인사교체, 갑작스런 숙청, 불명예 좌천 등으
로 군이 잠재적 반란의 근거지가 되는 것을 차단해 왔다.

〈표 II-4〉 김정은 집권 이후 5년간(2012-2016년) 숙청 규모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 누계
규 모	5명	30명	40여 명	60여 명	미상	130여 명
속 청	5명	30명	100여 명	130여 명	30여 명	260여 명
처형된 인물 (숙청)	1월 김철 무력부부장, 5월 박용무 서기실과장, 7월 리영호 총참모장 등	11-12월 장성택, 이용하, 장수길, 백용철 등 30명	박춘홍 부부장, 김근섭 부부장 등 36명 처형. (문경덕 책비, 변인선 작전, 마원춘 설계 등) 박춘홍 부부장.	조영남 국가계획위 부위원장, 현영철, 최영건 부총리, 임종추 보위부, 김옥 서기실 등 (한광상, 원동연)	김용진 부총리 (리영길, 최룡해, 김영철)	*2017년 들어 보위부부상 5명 처형. (김원홍, 황병서 숙청)

출처: 북한연구소 한기범 석좌연구위원 자문회의(2019.8.21., 통일연구원), 재인용: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p. 153.

다른 한편, 김정은 정권은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
는 데 주력했다. 군부에게는 직업 전문성을 강조하는 조직 통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김정은 시대 군부의 정치적 역할은 지속해서 감
소했다.⁶³⁾ 2021년 8차 당대회 개정 당 규약은 인민군을 “당의 영도

61)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p. 153.

62) “총살, 숙청, 해임…북한 김정은식 공포통치 5년,” 『VOA』, 2017.2.3., <<https://www.voakorea.com/a/3704847.html>> (검색일: 2021.9.5.).

63) 허규호·안경모,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의 역할과 성격 변화에 대한 연구: 전문직업 주의의 부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5권, 제4호 (2020), pp. 70~101.

를 받들어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의 우위 및 군 지휘권을 명확히 규제했다.⁶⁴⁾

그런데 김정은의 군부 숙청과 김정일 권신 제거작업과 공포정치의 전개는 또 다른 국가무력기관들, 즉 여러 공안 및 보안 조직의 정치화·비대화를 초래했다. 독재정치에서 비밀경찰과 공안기구의 확대는 군의 정치개입 강화 못지않은 위협 요인이다. 김정은은 이 역시 잦은 숙청과 간부사업, 공안조직 간 경쟁 부추기기 등 전통적 가산제 방식으로 대응한다.

무엇보다도 공안 및 보안기구와 주요 인물들의 무해화(無害化) 공정 및 상호 경쟁 강화에 집중한다. 특히 2017년 초 김정은은 공포숙청 정치의 선봉에서 김정일 구신 제거, 특히 장성택 숙청에 공훈을 세운 국가보위상 김원홍을 기습적으로 강등 해임하고 다수의 고위직 간부들을 처형하면서 국가보위성을 견제한다.⁶⁵⁾ 인권유린, 부패와 독직, 월권 등의 명목상 죄명을 이유로 김정은 시대 최측근 가신 집단으로 부상했던 삼지연 8인방의 핵심인 김원홍의 해임은 공포정치 기간 성장해온 비밀경찰 보위성에 대한 간부사업 및 기관청소를 통한 견제의 대표적 사례다.

대대적인 인적 교체 이후에도 보위성의 권한 및 업무 축소와 당적 통제강화 등 후속조치를 단행하여 보위성의 권력 기관화를 사전에 방제한다. 보위성만이 아니었다. 군 총정치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7년 10월 최룡해 주도하에 당 조직지도부는 총정치국에 대한 대규모 검열을 단행하여 기관 정비에 나서는 한편, 조직지도부 제1부

64)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당 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로동신문』, 2021.1.10.

65) “김정은의 고위층 숙청과 처형: 김원홍 국가보위상,” 『자유아시아방송』, 2019.2.11.,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c870c120-c778bbfcd1b5c2e0/newsinsidenk-02082019143818.html> (검색일: 2021.9.10.).

부장 출신으로 김정은의 측근으로 한때 위세를 떨치던 황병서 총정
치국장과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잠시 복귀했던 김원홍을 숙청 또
는 경질한다. 보안 관련 권력 거점기관에 대한 정비작업과 간부 사
업의 또 다른 사례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검열, 보안, 공안 기구들, 예컨대 총정치
국, 보위성, 당 조직지도부 등이 은원관계에 얽히며 상호 충성경쟁
과 견제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었다. 또한 과거 한직으로 여겨졌던
당이나 군의 일부 기관을 권력감찰 기구로 위상과 직무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안 및 감찰, 공안 관련 기구를 늘려서 특정 기관으
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견제했다.

예를 들어 2021년 8차 당대회 조직개편을 통해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정상학; 부위원장 박태덕과 리히용)의 권한을 대폭 확장하여
당 재정관리사업과 당 규율제 심의 및 신소청원 처리를 관장하는 권
력기관으로 재탄생시켰으며, 부위원장 박태덕을 신설된 당 규율조사
부장을 겸직하게 한다.⁶⁶⁾ 당 비서국에 새로 창설된 규율조사부는 당
조직과 당원들의 김정은 유일적 지배에 반하는 당 규율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조직이고, 법무부는 사법 및 경찰보안기관을 감독하는 역
할을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⁶⁷⁾ 공안, 보안 및 감찰 부문에 또 다른
권력기구를 만들어내 상호경쟁을 부추겨 김정은은 안전을 도모하며
정권의 안정을 기하고 있다. 군 정치국이나 보위성, 그리고 보안성
은 물론 기존 당 조직지도부조차 새로운 경쟁자를 갖게 됐다.

66) 한기범, “북한의 제8차 당대회 평가(Ⅲ): 인사개편·당규약 개정 등,” 북한연구소 INKS
논평, 2021.1.12., p. 7. <[http://www.nkorea.or.kr/board/index.html?id=focus
&page=2&no=121](http://www.nkorea.or.kr/board/index.html?id=focus&page=2&no=121)> (검색일: 2021.9.5.).

67) 오경섭·김진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3): 정치 분야,”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1-03, 2021.1.15., p. 4,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
0b0644c6-3b00-4a77-bdaa-09f1c172b724](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0b0644c6-3b00-4a77-bdaa-09f1c172b724)> (검색일: 2021.9.5.).

(2) 지배엘리트 통제 II: 당 우위 통치연합 재편과 지배엘리트 길들이기

세습 민간독재자인 김정은은 당을 선호한다. 집권 초인 2012년 4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 집권의 선도 기관으로 당의 위상을 격상시킨 이래, 유일영도체제 재건의 중추이자 군부 등 무장 세력의 감시통제의 핵심기체로서 조선노동당을 내세운다. ‘선군(先軍)에서 선당(先黨)으로 전환’하면서 당이 가산제 독재자의 권력 플랫폼으로서 전면에서 부각된다.⁶⁸⁾

이에 따라 김정은 세습 이후 유일독재 확립과 정권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사 및 조직개편, 그리고 주요 국가정책 변경에 대한 결정은 당대회, 당대표자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중앙군사위원회 등과 같은 당회의나 당기구를 통해 결의 또는 공표됐다. 김정일 시기 오직 단 한 번(6차 당대회, 1980년 10월 10~14일) 개최되었던 당대회를 열악한 경제 사정과 코로나19 대유행병 국면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벌써 2차례(7차 당대회, 2016년 5월 6~9일; 8차 당대회, 2021년 1월 5일~12일)나 열었다.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 ‘당 우위’ 원칙을 재확립하며 개정 당 규약에 “최고 형태의 정치조직으로서 당의 권위를 철저히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한다.⁶⁹⁾

“당 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정권을 강화하는 당을 기초로 한 수령체제의 재건은 결국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위상 강화로 연결됐다.⁷⁰⁾ 특히 당 내 당이자 수령의 그림자 권력으로서 김정

68) 박용한·곽은경, “김정은 정권 안정성 평가와 북한 체제 지속 가능성 전망,” 『전략연구』, 제27권 제2호 (2020), p. 69; “김정은 시대 ‘선군’ 보다 ‘선당,’” 『VOA』, 2015.10.8., <<https://www.voakorea.com/a/2995514.html>> (검색일: 2021.9.15.).

69)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로동신문』, 2021.1.10.

일 시대에도 위력을 떨쳐온 조직지도부는 김정은 시대 당의 위상 강화 및 공개 공식화 추세와 맞물려 유일지도체제 구축에 더욱 막강한 위력을 떨쳤다.⁷¹⁾ 장성택 숙청과 행정부의 전면 해체 및 조직지도부로의 합병은 조직지도부의 위세를 떨치게 된다.⁷²⁾ 김정은의 권력이 강화될수록 조직지도부의 권위와 위상도 더욱 강화되는 상호상승 효과조차 나타났다.

조직지도부 출신 인사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조직지도부 신세대 대표주자 조용원은 권력엘리트들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래 승승장구하며,⁷³⁾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 8인 비서국의 일원이자 실세로 등극한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조연준, 조용원과 더불어 조직지도부 출신 핵심인사로 지목한 바 있는 박태성도 평안남도 도당 위원장을 거쳐 2017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하며 중앙당으로 복귀하였고,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 사상 담당 당 선전비서로 고속 출세한다(현재는 숙청설이 제기되는 상황).⁷⁴⁾

물론 김정은의 경계의식 표출로 조직지도부 역시 견제를 당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2017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2차 전원회의를 통해 조직지도부 출신 핵심 실세이자 장성택 제거 등 숙청정치의 숨은 책사로 위세를 떨치던 조연준 제1부부장이 사실상의 좌천성 인사를 당하기도 했고,⁷⁵⁾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 구울조사부나 법무부가

70) “중앙위원회 제 7기 제 2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17.10.8.

71) 감명국·이승열, “김정은, 조직지도부 엘리트 등에 올라타다,” 『시사저널』, 2015.8.19.,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320>> (검색일: 2021.9.15.).

72)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pp. 163~164.

73) “북한 ‘핵심실세’ 조용원 조직지도부 부부장,” 『VOA』, 2017.2.3., <<https://www.voakorea.com/a/3703570.html>> (검색일: 2021.9.15.).

74) “전원회의서 주석단 ‘빈자리’ 포착…박태성 실각한 듯,” 『뉴스1』, 2021.6.17., <<https://m.news1.kr/articles/?4342609&189>> (검색일: 2021.9.15.).

조직되어 조직지도부 견제에 나서는 양태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은의 당 중심 유일지도체제의 중추기구로서 조직지도부의 위력이 급격히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또한 김정은은 가산계 간부사업을 통해 수령독재 재건을 위한 지배연합 권력엘리트 층의 재구성에 나선다.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무엇보다도 저항하는 엘리트의 지도부 역할을 수행할 잠재적 위협 인물들인 김정일 구신들을 숙청공정으로 제거한다. 장성택, 리영호, 현영철 등을 처형하고 김기남, 최태복 등 비교적 위협적이지 않은 인사들도 차례로 이선으로 퇴진시킨다. <표 II-4>와 같이 7차 당대회 이전 숙청공정 기간에 260명 이상의 최고위급 간부를 처형 또는 숙청한다.⁷⁵⁾ 2017년 잠재적 위협 또는 경쟁대상이던 이복형 김정남 암살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제재강화 등으로 초래된 체제유지용 자원의 지속적 감소는 지배엘리트연합의 규모를 강제적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하는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김정은의 숙청공정을 더욱 가혹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75) “조연준 “내부 표적 만들어 치자” 장성택 숙청 건의설,” 『중앙일보』, 2013.12.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13374591#home>>; “北 주요인사 숙청 기획자는 조연준,” 『뉴스시스』, 2015.5.15.,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50515_0013664232#_enliple> (검색일: 2021.9.15.).

76)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p. 153.

〈표 II-5〉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 인선

당기구	인선 명단
정치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국 상무위원(5명): 김정은,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리용호 - 정치국 위원(19명): 상무위원(5명)+ 김경희, 김영춘, 김기남, 양형섭, 강석주, 김정각, 장성택, 박도춘,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김국태, 최태복, 리용무 - 정치국후보위원(13명):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주규창, 곽범기, 오극렬, 로두철, 리병삼, 조연준, 태종수, 문경덕, 김락희, 김창섭
비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서(10명): 김경희, 박도춘(군수), 김기남(선전선동), 최태복(과학, 교육), 김양건(대남), 김영일(외교), 태종수(총무), 김평해(간부), 문경덕(평양), 곽범기(재정)
중앙군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2명): 최룡해, 리영호 -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16명): 김정각, 김영국, 김원홍, 리병철, 김영철, 주규창, 장성택, 김영춘, 김경욱, 정명도, 최부일, 윤정린, 최경성, 현철해, 리명수, 김락겸

출처: 『로동신문』, 2012.4.12., 재인용: 이승열,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 통치관료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100호, 2019.12.31., p. 2.

〈표 II-5〉와 〈표 II-6〉의 비교를 통해 선명히 드러나지만, 집권 초인 2012년 당대표자회를 통해 결집된 초기 지배연합 엘리트의 대다수, 특히 정치적 비중이 컸던 인물들은 2016년 7차 당대회 인선에 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다. 〈표 II-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왔던 박봉주, 최휘, 김수길, 최부일 등도 정치국에서 탈락하고 조용원, 정상학, 김두일, 최상진, 오일정, 권영진, 김정관, 리영길 등이 정치국에 진입한다.⁷⁷⁾ 7차 당대회에서는 “노·장·청 및 상징·실질 배합”의 원칙으로 세대교체를 주도하기도 했다.⁷⁸⁾ 7차 당대회 인선의 특징은 “당 중앙위위원

77) 이승열·이승현,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797호, 2021.2.9.; 한기범, “북한의 제8차 당대회 평가(Ⅲ): 인사개편·당규약 개정 등,” p. 3.

78) 박영자,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2): 지도체계 및 엘리트,” 통일연구원 Online

및 후보위원 235명 중 106명(45.1%)은 재선되었으나 129명(54.9%)이 신규 선출됐다”는 점이다.⁷⁹⁾

김정은 정권에서 놀라운 생존력을 증명한 인물은 최룡해다. 최룡해는 2014년 실각과 더불어 혁명화 교육까지 거쳤지만, 7차 당대회를 통해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등 6개 직위를 겸직하며 부활에 성공한다. 2017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선 조직지도부로 추정되는 부장 직위까지 손에 넣으며 불사조의 면모를 보인다. 8차 당대회 인선에서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건재를 과시한다. (<표 II-7> 참조)

그러나 대다수 원로 엘리트 간부는 최룡해 같은 생존능력을 보이지는 못했다. 이들 숙청된 원로간부들의 빈자리는 가산제 엘리트 발굴 전술로 등용된 신진 엘리트들로 채워진다. 김정은 정권 직계통치 연합이 결성된 것이다. 김여정 등 피붙이 직계가족을 파격 등용하거나 조직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청장년층 및 그간 주변부에 맴돌던 인물을 중용하는 것은 독재자 개인 중심 독재체제에서 즐겨 사용해오던 가산제 친정체제 강화방안의 하나다. 이러한 신진인사들의 경우 거의 유일한 출세 및 생존수단은 절대적 충성심으로 독재자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Series CO 16-13, 2016.5.13., p. 4.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272&category=21&thisPage=1&biblioId=1476766>> (검색일: 2021.9.20.).

79) 위의 글, p. 5.

〈표 II-6〉 7차 당대회 주요 인선

정무국	정치국	당중앙군사위원회
당위원장 김정은 당중앙위 부위원장(9명) 최룡해(근로단체) 김기남(선전) 최태복(교육과학) 리수용(국제) 김평해(간부) 오수용(계획재정) 곽범기(경제) 김영철(대남) 리만건(군수)	상무위원회(5명) 김정은,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위원(14명)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만건, 양형섭, 로두철, 박영식, 리명수, 김원홍, 최부일 후보위원(9명) 김수길, 김능오, 박태성, 리용호, 임철웅, 조연준, 리병철, 노광철, 리영길	위원장 김정은 위원 황병서, 박봉주, 박영식, 리명수, 김영철, 리만건, 김원홍, 최부일, 김경옥, 리영길, 서홍찬

* 정치국+정무국+당중앙군사위원회 겸직: 김정은, 김영철, 리만건

** 정무국+정치국 겸직: 정무국 전원은 정치국 위원

*** 당중앙군사위원회+정치국 겸직: 김경옥, 서홍찬 제외한 전원이 정치국 위원

출처: 박영자,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2): 지도체계 및 엘리트,” p. 2.

〈표 II-7〉 8차 당대회 주요 인선

당기구	주요 인선 내용
정치국 (30명)	- 상무위원: 김정은, 최룡해, 조용원, 리병철, 김덕훈 - 위원: 김정은, 최룡해, 조용원, 리병철, 김덕훈, 박태성, 박정천, 정상학, 리일환, 김두일, 최상건, 김재룡, 오일정, 김영철, 오수용, 권영진, 김정관, 정경택, 리영길 - 후보위원: 박태덕, 박명순, 리철만, 김형식, 태형철, 박정근, 김영환, 양승호, 전현철, 리선권
비서국 (8명)	- 총비서: 김정은 - 비서: 조용원(조직), 박태성(사상), 리병철(군사), 정상학(규율), 리일환(근로단체), 김두일(경제), 최상건(교육)
중앙군사위원회 (13명)	- 위원장: 김정은 - 부위원장: 리병철 - 위원: 조용원, 오일정, 김조국, 강순남, 오수용, 박정천, 권영진, 김정관, 정경택, 리영길, 림광일

당기구	주요 인선 내용
중앙검사위원회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정상학 - 부위원장: 박태덕, 리히용 - 위원: 리경철, 박광식, 박광웅, 전대수, 정인철, 김성철, 장기호, 강윤석, 이상철, 장광봉, 김광철, 오동일
중앙위원회 부장 (1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재룡(조직지도부장), 박태성(선전선동부장), 오일정(군정지도부장), 리일환(근로단체부장), 김두일(경제부장), 최상건(과학교육부장), 박태덕(규율조사부장), 김성남(국제부장), 허철만(간부부장), 김형식(법무부장), 박명순(경공업부장), 리철만(농업부장), 김영철(통일선선부장), 리두성, 강순남, 김세복, 박정남, 최휘, 김용수

출처: 이승열·이승현,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p. 3.

엘리트 길들이기 무해화 공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빈번한 좌천과 재등용의 회전문 인사, 유배형 순환근무와 재교육 등 가산제 간부공작은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었다. 원로 간부급 인사들은 물론이고, 김정은 친위대로 최고위급에 등용된 신진 엘리트들조차도 가산제 인사공정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⁸⁰⁾ 숙청과 혁명화재교육의 칼날을 회피할 수 있더라도 빈번한 김정은식 회전문 인사교체,⁸¹⁾ 예측이 어려운 정도로 빈번히 이뤄지는 소속조직 및 직무 변경, 중앙(평양)·지방 간 수시이동까지 피할 수는 없었다. 절대권력 가산제 독재자에 대한 무한충성과 경쟁으로 생존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산제 통치 안정화 매트릭스에서 지배엘리트들은 칼 날 위의 삶을 영위하는 셈이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는 “엘리트 교체의 순환 주기가 선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를 뿐만 아니라 강등과 복귀도 매우 잦다”는 현상이 두드러진다.⁸²⁾ 제재 등으로 인한 통치 자금의 유입 감

80) Houchang E, Chehabi and Juan J. Linz, eds., *Sultanistic Regimes*, pp. 3~48.

81) “북한 새 국방상에 리영길 임명 가능성...김정은식 회전문 인사,” 『VOA』, 2021.7.15.,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north-korea-defense-minister/6060208.html> (검색일: 2021.9.23.).

82) 이호령, “김정은 시대의 권력엘리트 변화와 특징,” KIDA Brief no. 2021-안보-4, 2021.7.30., p. 3. <<https://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

소로 시혜를 통한 간부포섭 및 충성 유인 작업이 힘겨워지면서 더 강압적이고 인위적인 간부공정에 집중한 결과로 보인다. 통치연합의 수를 감소시켜 나가는 소위 배제적 가산제 체제의 모습을 띠게 된 것이다.⁸³⁾

(3) 피지배주민의 통제와 전환전술

국제 공산주의 블록의 붕괴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제적 고립 등은 북한이 전통적인 국가사회주의(State Socialism)적 국가배급 및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만성화된 경제적 파탄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자신의 독재체제를 위협할 소지가 다분한 개혁개방으로의 노선 전환 대신에 소위 반개혁 자력갱생 노선을 항구적 정치노선으로서 “주체조선의 국풍”이자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투쟁정신으로 공고화”하여 버티는 데 주력했다.⁸⁴⁾

김정은 정권의 체제 “현상유지 편향” 또는 현상복원의 밑바닥에는 김정은 가산제 독재의 결사옹위 통치 안정화 목표가 깔려 있는 것이다.⁸⁵⁾ 비록 전체주의적 배급경제 재건이 난관에 봉착하고 장마당 경제 등이 확산됨에 따라 경제통제를 통한 피지배계급 통치가 한계에 도달했지만, 김정은 정권은 과거로부터 계수된 다양한 전체주의 주

sidx=2325&idx=109&depth=3&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lang=kr) (검색일: 2021.9.23.).

83) 한병진, “북한 버틸 수 있을까? 국가제도의 공고성과 시장개혁 변수를 통해 본 북한의 미래,” 『대한정치학회보』, 제22권 제2호 (2014), pp. 99~118.

84)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로동신문』, 2021.1.10.

85) 한병진, “북한, 결국 변할 것인가? 김정은 정권의 현상유지 편향,” 아산 리포트, 아산정책연구원, 2013, <<http://www.asaninst.org/contents/asan-report-%EB%B6%81%ED%95%9C-%EA%B2%B0%EA%B5%AD-%EB%B3%80%ED%95%A0-%EA%B2%83%EC%9D%B8%EA%B0%80-%EA%B9%80%EC%A0%95%EC%9D%80-%EC%A0%95%EA%B6%8C%EC%9D%98-%ED%98%84%EC%83%81%EC%9C%A0%EC%A7%80/>> (검색일: 2021.9.23.).

민통치 전술들, 즉 대중을 겨냥한 감시·규율·통제·억압을 통한 탄압과 공포화 전술, 그리고 전투적 민족주의(Militant Nationalism)에 기초한 전체주의적 사상 및 이념통제,⁸⁶⁾ 그리고 수시로 이뤄지는 장마당 경제에 대한 규제와 견제를 통해 말기전체주의(Post-Totalitarianism) 독재국가가 겪기 쉬운 통제 이완에 대항해왔다.⁸⁷⁾

특히 김정은 정권은 최근 들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전후에 출생한 소위 장마당 청년세대의 사상과 생활방식을 통제하고 비사회주의적 문화가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가배급경제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이들 장마당세대는 북한식 집체주의와 체제수호보다는 개인의 생존 문제에 민감하고 한국 등 외부세계 문화에 수용적일 수밖에 없는 세대이다. 그래서 젊은 세대 통제에 당과 국가기관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20년 12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유입, 유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 소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⁸⁸⁾ 한국 영상물 유포자 사형 및 시청자 15년 구형 등을 규정하여 유엔 인권문제 관련 특별보고관들로부터 “법 집행 목적을 위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수단을 가리지 않은

86) Martin K. Dimitrov, “Understanding Communist Collapse and Resilience,” in Martin K. Dimitrov, ed., *Why Communism Did Not Collapse?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 Resil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7.

87) Charles K. Armstrong, “Ideological Introversion and Regime Survival: North Korea’s Our-Style Socialism,” in Martin K. Dimitrov, ed., *Why Communism Did Not Collapse?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 Resil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99~119.

8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전원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0.12.5.

채 생명을 의도적으로 앗아가는 극단적인 조치”였다는 비판 서한을 받기에 이른다.⁸⁹⁾ 공포정치 가산제 통치공학이 대중통제를 위해 밑으로 확산돼가는 추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정은 정권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 회의를 2021년 9월 28일에 개최해 청년세대 사상 통제를 위한 소위 「청년교양보장법」 제정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⁹⁰⁾

경제적 통제가 이념통제에 가미될 경우 효과는 배증된다. 김정은 정권은 국가통제를 벗어난 암시장 또는 장마당 경제의 확산을 통제하고, 체제가 관리하는 국가자원분배 체계를 강화하여 대중의 국가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외부로부터의 정보 및 문화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항시적인 감시와 통제,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국가 테러 공포정치로 ‘일상적 위험과 상시적 불안’을 주입하여 피지배대중의 자율적 사고와 행동을 봉쇄할 수 있었다.⁹¹⁾ 반란과 저항의 싹을 잘라냈던 것이다. 김정은은 이상의 전통적인 북한식 사회주의 주민통제 전술을 재구성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이에 더해 김정은은 주민통제 및 규율, 그리고 대중 동원의 기제로서 당체제의 재건, 인민제일주의 등 새로운 신념 상징체제의 도입을 통한 선제적 이념 통제, 그리고 대외적 압박을 내부정치 체제결집으로 활용하는 전환전술의 정교한 활용이라는 특징적 모습을 보여준다.

먼저 김정은 정권은 주민통제 도구로서 당의 활용을 확대했다. 대중적 기반을 갖춘 대규모 지배정당은 피지배주민 포섭과 통제에도

89) “유엔 보고관들, 북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즉결총살 인권 침해 해명 요구,” 『VOA』, 2021.8.28.,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social-issues_un-north-korea-humanrights/6061284.html> (검색일: 2021.9.28.).

9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소집에 대한 공시,” 『로동신문』, 2021.8.26.

91)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1973), pp. 400~405; Sheila Fitzpatrick, *Tear off the Masks: Identity and Imposture in Twenty-Century Russ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p. 201.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야심적이고 충성심 있는 젊은 세대 피지배층 일부를 선별하여 장기적인 전망 하에 당과 독재자의 선전, 이념교육, 군중동원 및 감시 등에 매진하는 전위대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그들로 하여금 헌신의 대가로 인생 후반기에 고위직을 맡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매물비용을 증가시켜 장기적이고 끊임없는 봉사와 충성을 유도할 수도 있다.⁹²⁾ 응집력 있는 독재정당은 지배엘리트 관리뿐만이 아니라 대중통제에도 매우 유용하다. 북한정권은 중앙당에서 세포당 조직에 이르기까지 그물망 식으로 국가 및 사회 부문에 침투된 당 조직체제를 통해 주민을 교양·감시·통제했다. 김정은 정권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당 조직들을 재조직하고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을 통제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당 기강과 규율의 재정비 및 강화이다. 김정은은 8차 당대회 결정서 및 개정된 당 규약 등을 통해 당과 혁명대오의 단결의 준칙과 주민을 강조했다.

또한 “인민대중과 혈연적 유대를 강화하며 당 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을 당 건설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특히 당 간부가 “사상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고, 당 장성사업에서 당적 원칙, 객관이 인정하는 엄선의 원칙을 지켜 당 대렬을 질적으로 공고히” 해 “당 선전 부문에 내재하는 고질적인 결함을 극복하며 현실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한다.⁹³⁾ 즉 이념적으로 잘 무장되고 규율 잡힌 당원과 당 조직을 통해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현상”을 일소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과 “우리식 생활양식”의 확립에 나설 것을 강조

92) Milan W. Svob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p. 11~12.

93) “북한 노동당 규약 주요 개정 내용,” 『연합뉴스』, 2021.6.1.,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1170100504>> (검색일: 2021.9.28.);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로동신문』, 2021.1.10.

하는 것이다.⁹⁴⁾ 당세포에서 중앙당에 이르기까지 당은 출신수범과 기강 확립으로 주민통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1년 4월 8일에 있었던 제6차 세포비서대회 폐막식과 결론에서 김정은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소탕전으로 군중을 조직발동하는데서 당세포들이 응당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며,⁹⁵⁾ 특히 청년 장마당세대의 사상통제와 ‘인간개조’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피지배주민을 대상으로 통치정당화 이념으로 애민주의, 특히 8차 당대회를 통해 적극 주창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의 대주민 이념 교양의 중핵으로 정리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 즉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를 영도사상의 중핵”으로 삼아 “온갖 반인민적 요소 제거 투쟁을 전개”하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져 나갈 것을 그간의 공적이자 향후 사상전의 목표로 주창한다. 2019년 4.12 시정연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정치이념”으로 규정한 바 있다.⁹⁶⁾ 자애로운 아버지라는 감성정치로 사회저변에 깔린 민심이반 현상을 달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통치 정당화 전술이다.⁹⁷⁾

김정은이 대중지배를 안정화하는 정책의 하나는 전환전술이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같은 신화화된 집단적 순혈민족주의나 종교근본주의를 대중에 주입하고,⁹⁸⁾ 피지배대중의 동질화된 집단정서를 신

94) 위의 글.

95) 김정은, “2021년 4월 8일 제6차 세포비서대회 3일차 회의에서 결론,” 『로동신문』, 2021.4.9.; 『조선중앙통신』, 2021.4.9.

96) 한기범, “북한의 제8차 당대회 평가(II) 김정은의 사업총화보고,” 북한연구소 INKS 논평, 2021.1.10., p. 8., <<http://www.nkorea.or.kr/board/index.html?id=focus&page=2&no=120>> (검색일: 2021.8.16.).

97) 위의 글, p. 8.

98) Charles K. Armstrong, “Ideological Introversion and Regime Survival: North Korea’s Our-Style Socialism,” in Martin K. Dimitrov, ed., *Why Communism*

격화 또는 이상화된 개인독재자와 직관적으로 연결시키는 정치신학 (Political Theology) 기법은 체제결집에 큰 효과를 발휘하곤 한다.⁹⁹⁾

내외부의 적과 동질 의식화된 우리를 대치시키는 이념전략은 대중동원 기법과 결합하여 외부적 위기를 대내 단합 체제결집용으로 활용하거나,¹⁰⁰⁾ 역으로 체제 내부 위기를 외부로 표출하는 전환 (Diversionary) 전술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¹⁰¹⁾ 전투적·집체적 정치이념은 전환전술 활용의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워스(Jessica Weeks)에 따르면, 개인독재체제 지도자(Personalist Dictator)가 내부 위기 전환용으로 외부 갈등 야기에 나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¹⁰²⁾ 개인독재체제가 전환전술 사용빈도가 높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김정은은 국제제재와 대외고립, 그리고 경제적 낙관을 강행 돌파하여 “국가 핵무력 건설이라는 역사적 대업을 5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달성한 기적적 승리”를¹⁰³⁾ 거두며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낼 수 있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넉원”

Did Not Collapse?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 Resil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 99~119.

99) Emilio Gentile, “Fascism, totalitarianism and political religion: definitions and critical reflections on criticism of an interpretation,” *Politics, Religion and Ideology*, vol. 5, no. 3 (2004), pp. 326~375.

100) Timothy Frye, “Do Economic Sanctions Cause a Rally around the Flag?” *Columbia University SIPA Policy Paper*, August 3, 2017, (<<https://energypolicy.columbia.edu/sites/default/files/SanctionsandRallyAroundtheFlagTimFrye0817.pdf>> (검색일: 2021.8.17.).

101) Jaroslav Tir, “Territorial Diversion: Diversionary Theory of War and Territorial Conflict,”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2, no. 2 (2010), pp. 413~425.

102) Jessica L. Weeks, “Strongmen and Straw Men: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 Initiation of International Conflic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6, no. 2 (May 2012), pp. 330~337.

103) “김정은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8.4.21.

을¹⁰⁴⁾ 달성했다는 점을 업적으로 내세우며 김정은 세습정권의 정통성을 주창한다. 또한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부상시켜 대국들이 우리 국가의 이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던 시대를 끝장내고 우리 인민이 전쟁의 참화를 모르게 한 것”이 김정은이 성취한 “대승리”라며 김정은을 중심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치 아래 단결할 것을 강조하며 체제결집에 나선다.¹⁰⁵⁾

핵개발을 체제결집 및 정권 정당화를 위해 활용하는 모습이다.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 강행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핵화 압박을 “제재압박으로 목조르기 하여 우리의 핵 억제력을 허물고 사회주의제도를 무너뜨리려”는 미 제국주의의 책동으로 묘사하며 북한 주민이 겪는 경제난과 고통의 원인으로 전가한다.¹⁰⁶⁾ 민족주의 결집효과(Rallying Effects)를 극대화하는 데 매진하는 것이다. 미국의 압력에 맞서 김정은 정권은 대외정책목표로서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조선반도의 정세 격화는 곧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 불안정”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선포한다.¹⁰⁷⁾ 체제수호, 즉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벼랑 끝 핵 대처의 대외적 강공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안보정세를 체제결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04) 김정은, “2018년 새해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2018.1.1.

105) 유영식, “북한 ‘국가주의’ 탐색 - 우리 국가제일주의,” 『장신논단』, vol. 51, no.5 (2019), pp. 355~380;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로동신문』, 2021.1.10.

106)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로동신문』, 2013.4.2.

107) 위의 글.

2. 통치 담론

2011년 12월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짧은 후계자 기간을 마감하고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김정은 정권이 어느덧 10년 차에 접어들었다. 아버지와 비교하여 짧은 후계자 준비 기간과 어린 나이, 그리고 부족한 업적은 김정은 정권을 향한 전망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짧은 시간 내에 권력엘리트의 재편에 성공하였으며, 조직사상적 기반도 구축함으로써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본 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지난 10년 동안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활용된 주요 통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이 통치 담론을 통해 어떻게 정권을 유지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후계자와 통치 담론의 문제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지도사상을 제시하고, 국가와 인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¹⁰⁸⁾ 특히 아버지인 김정일과 비교하여 충분한 후계자 준비 기간을 거치지 못한 젊은 나이의 김정은에게 지도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혁명과업의 후계자이자 새로운 수령으로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¹⁰⁹⁾

아래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김정은은 지도사상의 제시를 통해 수령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해야 하

108) “령도자에게 지워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지도사상을 제시하고 국가와 인민이 나아가갈 앞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데 있다.” 오성길·장은옥, 『인민의 령도자 1』 (평양: 평양출판사, 2014), p. 39.

109) 북한에서는 “지도사상은 국가의 발전방향을 가리켜주는 라침판이고 당 활동의 근본 지침이며 인민들의 더없이 고귀한 사상적 량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의 책, pp. 42~43.

는 상황에 놓였다.

“수령은 우선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발전 풍부화시켜 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준다. (중략) 혁명의 지도사상을 올바르게 밝히는 것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혁명의 지도사상을 올바르게 밝혀야 인민대중에게 혁명투쟁의 목표와 방향, 그 로정과 수행방도를 올바르게 제시해주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다.”¹¹⁰⁾

즉 김정은은 지도사상의 제시를 통해 인민들에게 수령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강화를 통해 정권의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강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권력집단은 제도, 조직, 재정, 인력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통치 담론을 생산하고 유통한다.¹¹¹⁾

본래 담론은 말 혹은 문장의 형태로 발화되거나 문자의 형태로 서술된 문서 등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사회에서 형성되고 유통되는 다양한 문자와 서술 등의 집합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담론에 대해 푸코(Michel Foucault)는 “의명이며 역사적이고 한 시대를 특징짓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늘 경청되는 규칙의 총체이며, 특정 시대의 사회·경제·지리·언어의 영역에서 발화 기능을 행사하는 조건의 총체”로 정의했다.¹¹²⁾ 여기에서 담론의 ‘언어행위’는 권력을 위해 지배와 복종의

110)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광명백과사전3: 정치, 법』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9), pp. 225~226.

111) 배성인, “김정일 정권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담론과 담론의 정치,”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p. 190. 재인용: 김에스라, “김정은 시기 정치담론 동학에 관한 연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p. 18.

112) Bryon J. Wilfert, “Les notions philosophiques: dictionnaire,” Auroux Sylvian,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¹¹³⁾ 이처럼 권력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담론을 통치 담론 혹은 정치 담론이라 지칭하는데, 여기에서 통치 담론은 좁은 의미에서는 일상 대화부터 연설문, 신문의 사실이나 기사, 판결문, 정부의 공식 문서 등을 포함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특정한 집단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적 지식 혹은 이데올로기로도 볼 수 있다.¹¹⁴⁾ 통치 담론에서 이데올로기는 인민대중에게 일관된 사고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권력집단에게 정치적 리더십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¹¹⁵⁾

실제로 김정은에 앞서 새로운 수령으로 등장하였던 김정일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난으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과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로 인하여 시작된 북핵 위기로 인한 대외적 고립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선군사상’을 통해 정치적 리더십과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바 있다. 따라서 김

Encyclopédie philosophique universelle, vol. 2, Tome 1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0), p. 666, 재인용: 김에스라, “김정은 시기 정치담론 동학에 관한 연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 16.

113) Foucault, Michel, *The Archeology of Knowledge* (London: Tavistock, 1972);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저, 이영철 역, 『철학적 탐구』 (서울: 서광사, 1994); 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Christian Delacampagne) 저, 조현진 유서연 역, 『20세기 서양 철학의 흐름』 (서울: 이재이북스2006); 존 오스틴(John L. Austin) 저, 김영진 역, 『말과 행위』 (서울: 서광사, 1992), 재인용: 구갑우, “제2차 북미 핵갈등의 담론적 기원: 2002년 10월 3일-11월 26일, 말의 공방과 담론의 생태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4호 (2014), p. 198.

114) 이기형,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4권 3호 (2006), pp. 109~110.

115)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통권 84호 (2014), pp. 67~68; 강명구와 박상후는 통치 담론을 최고지도자나 지배권력층이 자신들의 이해 통합과, 사회구성원으로부터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상징과 가치체계의 생산과정을 비롯하여 대중과 반대세력의 대응까지 포괄하는 통태적 과정의 전반이라고 설명한다. 강명구·박상후,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신한국에서 세계화까지,” 『한국사회학』, 제31집 (1997), p. 125.

정은에게도 통치 담론의 제시는 정권의 안정화를 위해 중요한 과업 일 수밖에 없다.

우선 김정은은 2012년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식적인 지도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내세웠다. 셔먼(Franz Schurmann)은 사회주의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순수이데올로기’와 ‘실천이데올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¹¹⁶⁾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은 시기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순수이데올로기로 볼 수 있다.¹¹⁷⁾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이 순수이데올로기인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김정은에게는 이를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역할이 남았다.¹¹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이 권력세습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정치적 리더십과 권력의 정당성 확보를 통해 정권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인민 동원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실천담론 차원의 통치 담론으로 ‘김정일애국주의’와 ‘백두의 혁명정신’ 그리고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살펴볼 것이다.¹¹⁹⁾

116)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pp. 18~24.

117)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pp. 79~80.

118) “수령은 지도이념을 부단히 발전 풍부화시키고 혁명의 역사적 뿌리인 혁명전통을 옹호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을 공고 발전시키고 전 민중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더욱 공고히 하며 정권을 부단히 강화하여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의 중체를 위력하게 마련해 나간다.” 김재천, 『후계자 문제의 이론과 실천』 (평양: 발행처 불명, 1989), p. 10.

119) 각 통치 담론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 김창희,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2권 3호 (2013); 김근식,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강혜석, “김정은 시대 통치 담론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9권 3호 (2019); 유영식, “북한 ‘국가주의’ 탐

나. 김정일애국주의

2012년 5월 12일 노동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한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서 출발한다.¹²⁰⁾ 북한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민이 주인인 조국과 향토, 사회주의 제도, 인민에 대한 사랑과 충실성 등을 담고 있다.¹²¹⁾ 즉,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당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데,¹²²⁾ 이러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김정일은 김정일의 삶과 업적을 연결시켰다.¹²³⁾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

색-우리 국가제일주의”;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 (2020); 임수진, “백두 구호를 통한 김정은정권의 정치사회화 전략 분석: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77집 (2019).

- 120)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 가치 높이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한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일해나가자,” 『로동신문』, 2012.5.12; “우리 당이 주장하는 애국주의는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이며 이것은 부르조아 애국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부르조아적 애국주의와의 계선을 똑똑히 그어야 합니다.” 주학석, “근로자들 속에서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 『근로자』, 1971-11(제356호) (1971), pp. 47~51.
- 121) 최성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 재인용: 송기호, “북한 민족주의의 기원과 지향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김일성 민족론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 31~32.
- 122)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는 또한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밀접히 결부되고 있다. 왜냐 하면 우리 당은 우리 민족과 우리 인민의 리익의 수호자이며 가렬한 투쟁 속에서 세련되고 단련된 우리 혁명의 수령이며 우리의 가장 믿음직한 길잡이기 때문이다. ... (중략) ... 그러므로 당이 없이는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독립도 있을 수 없다. 우리 인민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조국에 대한 사랑은 당에 대한 사랑과 충실성으로 표현되며 당에 대한 충실성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충실한 복무로 된다.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 근로자들의 충실성과 헌신성은 애국주의의 최고 표현이다.” 오운수, “생산과 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더욱 발양하자,” 『근로자』, 1959-4(제161호) (1951), pp. 59~65.
- 123)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생을 바치시여 몸소 실천적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애국주의는 그이의 가장 귀중한 애국유산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업적에는 김정일애국주의가 총집대성되어 있다.” “모두 다 열렬한 김정일애국주의자가 되자,” 『로동신문』, 2012.9.4.; “김정일애국주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물려주시는 고귀한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북한은 설명하고 있다.¹²⁴⁾

먼저 조국관은 김정일애국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개념이다.¹²⁵⁾ 다만 김정일애국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조국관은 수령 중심의 조국관으로 수령 중심의 조국관이란 수령과 조국을 동일화시켜 수령에 대한 사랑과 곧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는 수령을 사랑하는 것이 조국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조국과 수령을 동일시하여 이루어진 것이다.¹²⁶⁾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애국주의의 조국관을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연결한다.

“수령중심의 조국관에 기초하고있는 김정일애국주의는 수령을 조국 민족의 운명으로 굳게 믿고 따르며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정신적 유산이며 실천의 본보기이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자』, 『로동신문』, 2013.11.6.

- 124) “김정일애국주의는 가장 숭고한 조국관과 인민관에 기초하고 숭고한 후대관으로 일관된 애국주의인 것으로 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할 귀중한 사상정신적 량식으로 된다.” 허은미,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 량식,” 『정치법률연구』, 2013-1(제41호) (2013), pp. 11~12.
- 125) “사회주의 애국주의의 최고 정화인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 있는 애국주의이다.” 박영훈,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 있는 애국주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59권 1호 (2013), pp. 37~40;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대화”(2012년 7월 26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 126)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은 곧 수령이라는 가장 숭고한 조국관, 수령 중심의 조국관에 기초하고있는 애국주의이다.” 이성환·박길성, 『조국변영의 위대한 기치 김정일애국주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3), p. 27; “김정일애국주의는 또한 조국은 곧 수령이라는 숭고한 견해로부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최대의 애국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영훈,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적 특징,” 『정치법률연구』, 2012-4호(제40호) (2012), pp. 6~7; “조국은 곧 수령이라는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 있는 김정일애국주의는 오늘 우리군대와 인민이 부강조국을 건설하는 투쟁에서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힘있게 떠밀어주는 위력한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된다.” 강감민, “김정일애국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대를 이어가며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사상정신적량식,”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3호 (2015), pp. 18~21.

서는 수령에게 최대의 충정을 다바쳐야 한다는 숭고한 사상감정인 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수령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하는 근본바탕으로 된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일애국주의는 곧 수령결사옹위정신이라고 말할수 있다.”¹²⁷⁾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은 곧 수령이고 사회주의조국의 품은 수령의 품이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곧 수령에게 충정다하는 것이라는 수령중심의 조국관, 주체의 조국관에 기초하고있는 것으로하여 사람들에게 조국의 귀중함을 깊이 체득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참된 삶과 가치를 안겨주고 빛내주는 수령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는 것이다.”¹²⁸⁾

또한 김정일애국주의는 수령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에서부터 시작되어 김정일의 삶을 통해 위대한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김정은이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김일성에서 시작하여 김정일에 의하여 계승된 김정일애국주의의 계승 발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김정은이기에 김정은이 혁명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¹²⁹⁾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오시였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김일성 조국으로 빛내이기

127) 이성환·박길성, 『조국변영의 위대한 기치 김정일애국주의』, p. 78.

128) 양혜영,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 유산,” 『정치법률연구』, 2013-3(제43호) (2013), pp. 12~14.

129) 강혜석,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p. 323.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였다.”¹³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리상이 현실로 꽃피나고 있으며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이 대를 이어 길이 빛나고 있다.”¹³¹⁾

“김정일애국주의의 최고체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생전에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구상하고 실천해오시던 모든 사업들을 이 땅우에 현실로 펼쳐나가고계신다.”¹³²⁾

다음으로 인민관 역시 김정일애국주의의 핵심 요소이다.¹³³⁾ 인민관을 통해 김정일애국주의에서는 인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 것을 애국의 신조로 지니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을 믿고 그에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번 싸워이긴다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인민을 믿고 그들과 운명을 함께 하시였다.”¹³⁴⁾

김정일애국주의에서는 이러한 인민을 위한 헌신의 모습을 애국으

130) 박영훈,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 있는 애국주의,” pp. 37~40.

131) “김정일애국주의는 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동력,” 『로동신문』, 2012.5.19.

132) “김정일애국주의는 《마식령속도》창조를 위한 정신력의 근본핵,” 『로동신문』, 2013.7.19.

133) “김정일애국주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대화”: “김정일애국주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최고 정화로 된다.” 리성환·박길성, 『조국변영의 위대한 기치 김정일애국주의』, p. 40.

134) 박영훈,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적 특징,” pp. 6~7.

로 연결하고 있다. 아래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김정일애국주의는 애국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국과 인민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진정한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애국적인 행동을 하는데 있다. 애국적인 행동이란 곧 인민에 대한 헌신이다. 인민의 부름앞에 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애국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조국과 인민이 하나로 련결되어있는것만큼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는가 하는데 따라 조국에 대한 사랑의 열도가 규정되게 된다.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만이 열렬한 애국자가 될수 있다. 애국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¹³⁵⁾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조국관과 마찬가지로 인민에 대한 애국 역시 수령에 대한 충성으로 연결되어, 수령결사옹위에 대한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¹³⁶⁾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조국은 곧 수령이고 사회주의조국의 품은 수령의 품이며 조국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곧 수령에게 충정다하는 것이라는 수령중심의 조국관, 주체의 조국관에 기초하고있는 것으로하여 사람들에게 조국의 귀중함을 깊이 체득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의 참된 삶과 가치를 안겨주고 빛내주는 수령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원동력으로 되는 것이다.”¹³⁷⁾

135) 이정범,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인민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애국주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0권 3호 (2014), pp. 15~17.

136) “조국은 곧 인민이며 인민을 위한 헌신을 떠난 애국이란 있을 수 없다.” 박영훈,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적 특징,” pp. 6~7.

137) 양혜영,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 유산,” pp. 12~14.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는 애국심이며 충실성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는 애국심이며 충실성의 높이는 애국심의 높이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야말로 애국심의 최고표현으로 된다.”¹³⁸⁾

“김정일애국주의는 참다운 애국을 수령에 대한 충정과 결부시킴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이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애국의 념으로 지니고 수령결사옹위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도록 확고히 담보하고 추동해준다.”¹³⁹⁾

마지막으로 김정일애국주의에서는 후대관을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숭고한 후대관은 김정일애국주의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이며 본질적내용의 하나이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바로 이 구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후대관이 집약되어있다. 자기 대에는 비록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조국의 앞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훌륭한 것을 창조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자는 것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후대관이었고 인생관이었으며 애국의 철학이었다. 숭고한 후대관으로 일관된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힘을 키우는 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는 숭고한 리념이다.”¹⁴⁰⁾

위의 글만 본다면 김정일애국주의의 후대관은 후속세대에 대한

138) 박영훈,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 있는 애국주의,” pp. 37~40.

139) 정영선,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간직하여야 할 정신력의 근본핵,” 『정치법률연구』, 2017-4호(제60호) (2013), pp. 22~23.

140) 김용일,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후대관으로 일관된 애국주의,” 『사회과학원학보』, 2012-4(제77호) (2012), pp. 23~24.

관심을 통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아래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는 후대관을 통해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김정은의 세습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후대들에 대한 참된 사랑은 매 세대가 국력을 시대의 첨단에 올려세우는데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나라를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지금과 같이 국력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시기에 오늘의 1년을 놓치면 후대들은 50년, 100년을 뒤서게 된다. 선조들은 우리에게 락후한 식민지농업국가를 물려주었지만 우리는 후대들에게 반드시 강성하고 문명한 나라를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강요한 애국의 신념이었다.”¹⁴¹⁾

“혁명의 계승자문제를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가장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는 여기에 김정일애국주의의 숭고성이 있으며 참다운 가치가 있다. 김정일애국주의에 맥박치고있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관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 세기를 이어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김정일애국주의의 최고체현자이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으로 부강조국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다.”¹⁴²⁾

다. 백두의 혁명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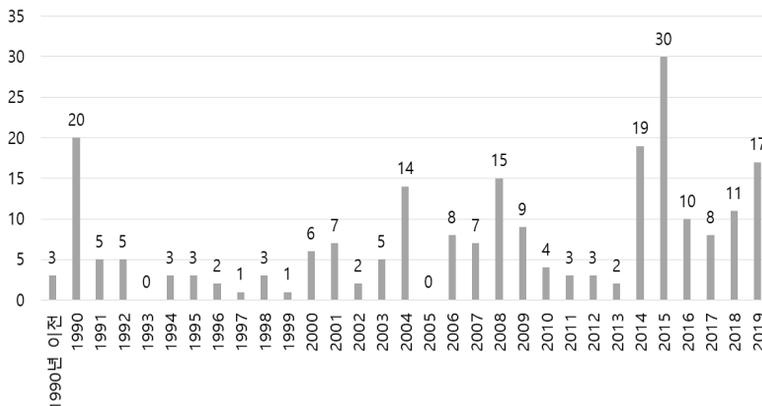
백두의 혁명정신은 1978년 1월 31일 『로동신문』의 사설 “당의 부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혁명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자”를 통해 처음 등장했다. 다음의 <그림 III-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백두의 혁명정신은 1978년 등장 이후 1990년,

141) “김정일애국주의에 맥박치고 있는 숭고한 후대관,” 『로동신문』, 2012.6.10.

142) 김용일,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후대관으로 일관된 애국주의,” pp. 23~24.

2004년, 2008년 등 일부 연도에 보도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오랜 시간 언급 빈도가 높지 않다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2014년부터 언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 노동신문 백두의 혁명정신 보도 빈도 추이



출처: 김에스라, “김정은 시기 정치담론 동학에 관한 연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p. 135의 〈그림 5-1〉을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노동신문 DB를 활용하여 보완함.

주: 백두의 혁명정신 또는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제목에 포함된 기사의 빈도임.

주: 1990년 이전은 1978년 2건, 1985년 1건.

백두의 혁명정신은 사상과 정신력에 혁명의 승리가 좌우된다고 설명하면서,¹⁴³⁾ 이 사상과 정신력은 수령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충성에서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혁명의 승리는 곧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승리이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의 사상과 령도만을 따르려는 드물지 않는 신념에서 불굴의 의지도 발양되고 무비의 영웅성도 분출된다.”¹⁴⁴⁾

143) “혁명의 승리는 사상과 신념의 승리, 정신력의 승리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선 군조선의 변영기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14.1.16.

144)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18.3.12.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실성으로부터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투지가 생기며 혁명투쟁에서 무궁무진한 힘이 발휘된다.”¹⁴⁵⁾

앞서 살펴본 김정일애국주의와 마찬가지로 백두의 혁명정신에서도 수령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충성은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이어진다. 아래의 글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신뢰하며 충성으로 결사옹위하는 것이 혁명의 승리를 위한 사상이자 정신인 것이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자기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의 정신이며 자체의 힘으로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며 억척만변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이다. 조선혁명의 깊고도 억센 뿌리를 마련하는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창조되고 장구한 혁명의 전로정에서 빛나게 계승발전되어온 정신, 우리 시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모든 사상정신적특질이 다 담겨진 정신이라는데 백두의 혁명정신의 비상한 견인력이 있고 무궁무진한 생명력이 있다.”¹⁴⁶⁾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정신은 바로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 (중략) ...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철저히 보장하는데 혁명의 승리가 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이 있다.”¹⁴⁷⁾

145) 진문경, “백두의 혁명정신의 사상적 기초,” 『철학연구』, 2012-1 (제128호)(2012), pp. 9~10.

146)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 기둥이다,” 『로동신문』, 2008. 4. 12.

147) 김성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 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 『정치법률연구』, 2015-2호(제50호)(2015), pp. 19~20.

수령결사옹위정신의 강조와 더불어 백두의 혁명정신도 김정일에 국주의와 마찬가지로 혁명과업의 계승자로서 김정은의 영도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선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수뇌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갈수 있게 하는 정신이며 여기에서 기본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¹⁴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으로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할수 있게 하는 혁명정신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정신은 바로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 사상과 령도, 단결의 중심으로서 혁명투쟁에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을 내놓으며 혁명적인 조직을 내오고 거기에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며 인민대중을 혁명대중으로 불러일으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나간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는데 혁명의 승리가 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이 있다. 이로부터 혁명과 건설에서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는 수령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는 원수들의 책동으로부터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임무이며 혁명이 계속되는 한 영원히 계승되어야 할 중대한 사업이다.”¹⁴⁹⁾

위의 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령결사옹위의 필연성을 제기

148) 문성세,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의 강毅한 정신력의 역센 뿌리,” 『철학연구』, 2012-4(제131호)(2012), pp. 17~18.

149) 김성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 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 pp. 19~20.

하면서 이와 더불어 수령의 영도가 중요한 이유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이 상징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의 정세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애초에 북한은 백두의 혁명정신의 등장배경을 항일무장혁명투쟁의 시기로 설명하면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탄생한 정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⁵⁰⁾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탄생한 백두의 혁명정신을 김정은 정권에서 통치담론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오늘날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지금 우리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국은 엄혹하며 우리 조국은 사상최악의 역경을 단독으로 강행돌파해나가고 있다.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은 제재압살책동을 극대화하고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에 매달리며 최후발악하고 있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한 오늘의 장엄한 진군은 전체 인민이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 속에서 승리를 낙관하며 만고의 항쟁사를 창조한 항일투사들처럼 살며 투쟁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⁵¹⁾

“오늘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우리 투쟁의 앞길에는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방해 책동으로 하여 엄중한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 있다. 최근 연간 사회주의 보루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새인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긴장 격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전쟁위험은 더욱 커졌다.”¹⁵²⁾

150) “백두의 혁명정신은 바로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던 가장 엄혹하고 시련에 찌든 력사적 시기에 창조되고 발휘된 혁명정신이다.” 진문정, “백두의 혁명정신의 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58권 1호(2012), pp. 36~40.

151)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18. 3. 12.

152) 김미옥,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최후승리를 위한 강위력한 사상정신적 보검,” 『정치법률연구』, 2015-3(제51호) (2015), pp. 18~19.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상정신적 무기로 백두의 혁명정신을 제시하고 있는데,¹⁵³⁾ 앞서 언급하였듯이 백두의 혁명정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라는 점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은 결국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와 권력의 안정화를 위해 활용된 통치담론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백두의 혁명정신은 이전까지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만 불려왔던 것과 달리 김정은 시기 들어 백두의 칼바람정신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2014년 10월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 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며 온 세상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절대로 바꾸지 말아야 할 제일 귀중한 재보”라고 언급하면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¹⁵⁴⁾ 『로동신문』에는 2014년 12월 24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간직하고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어갈 신념의 맹세 령군봉에 메아리친다”를 통해 처음으로 등장했다.¹⁵⁵⁾

기존의 백두의 혁명정신도 미국을 비롯한 외세에 대한 투쟁정신을 고취하였으나,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이를 더욱 강조하면서 외세와의 대결에 있어 사상과 신념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백두의 칼바람정신의 등장은 체제결속력을 높임으로써 김정은의

153)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혁명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사상정신적 무기가 다름 아닌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다.” 봉덕,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안고 살아야 할 영원한 혁명정신,”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4호 (2015), pp. 10~13.

154) “[김정은 시대의 신조어(끝)] “새 것, 새 것, 또 새 것”을 강조한 김정은,” 『중앙일보』, 2018. 4. 26. <<https://news.joins.com/article/22572223>> (검색일: 2021. 6. 12.), 재인용: 김에스라, “김정은 시기 정치담론 동학에 관한 연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p. 139.

155) 위의 글, 재인용: 김에스라, “김정은 시기 정치담론 동학에 관한 연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p. 139.

지배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¹⁵⁶⁾

“백두의 칼바람을 안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가장되는 침략전쟁 도발 책동에는 초강경 대응전으로, 유화전략에는 혁명적 원칙으로 대답하며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관계 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¹⁵⁷⁾

“백두의 칼바람은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 신념을 더 굳게 버려 주고 모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따스한 바람이지만 원수들에게는 돌풍이 되어 철추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다.”¹⁵⁸⁾

라. 우리 국가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2017년 11월 20일 『로동신문』의 정론 “신심드높이 질풍노도 쳐나가자”를 통해 처음으로 등장했다.¹⁵⁹⁾ 11월 30일 다시 한번 『로동신문』에서 언급되었던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156)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을 대를 이어 고수해나갈 때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수 있다.” 리광용,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주체혁명위업 완성을 담보하는 가장 귀중한 정신적 재보,” 『정치법률연구』, 2016-1(제53호) (2016), pp. 15~16.

15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15.1.3.

158) 김미옥,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최후승리를 위한 강위력한 사상정신적보검,” pp. 18~19.

159) “하늘을 나는 우리의 경비행기며 강원 땅에 높이 솟은 발전소 언제, 우리 인민들 누구나 즐겨찾는 《칠썩》 상표 양말과 귀여운 우리 아이들이 메고 다니는 《소나무》책가방으로부터 려명거리종합상업구 매대에 쌓인 《매봉산》 구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주렁지는 창조와 행복의 모든 열매들은 다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눈부신 실천으로 구현해오신 그이의 위대한 손길에서 마련된 것들이다.” (강조는 필자) “신심드높이 질풍노도쳐나가자,” 『로동신문』, 2017.11.20.

2019년 1월 전까지 『로동신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으나,¹⁶⁰⁾ 2017년 12월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민주조선』과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사회과학원학보』, 『근로자』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다루었다.

이후 북한은 2019년 1월 1일 『로동신문』을 통해 노래 ‘우리의 국기’를 공개하며 이를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 및 보급에 나섰다. 김정은은 친필로 “노래가 대단히 좋다, 전체 인민의 감정이 담긴 훌륭한 노래 창작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만족하게 생각한다. 널리 보급할 것”이라고 『로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우리의 국기” 악보에 서명하기도 했다.¹⁶¹⁾ 이 외에도 김정은은 인민군 창건 71주년 경축공연에서 공훈국가합창단의 우리의 국기 공연에 대해 직접 앙코르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¹⁶²⁾ 북한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우리의 국기’ 악보를 형상화한 새 우표를 발행하는 등 북한은 ‘우리의 국기’를 통해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대대적으로 선전 및 보급하기 시작했다.¹⁶³⁾

통치 담론으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는 국가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우월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조국의 존엄과 위상을 더 높이 떨쳐나가려는 각오와 의지이다.”¹⁶⁴⁾

160)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경사, 위대한 조선인민의 대승리,” 『로동신문』, 2017.11.30.

161) “애국의 한마음으로 피끓이며 새해 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맹세,” 『로동신문』, 2019.1.5.

162) “김정은, ‘진군절’ 경축공연 보며 ‘엄지 척’·‘기립박수,’” 『연합뉴스』, 2019.2.9.,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9045200504>> (검색일: 2021.10.1.).

163) “〈우리의 국기〉 형상한 새 우표 발행,” 『조선중앙통신』, 2019.5.28.

16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민주조선』, 2017.12.10.

위의 글과 같이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국가의 강대성과 우월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의 위대성과 관하여 자립적 민족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으로써 인민 중심의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였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위대성으로 ‘수령’의 위대성을 강조하고 있다.¹⁶⁵⁾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우선 불세출의 정치원로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여 대를 이어 수령 복을 누리는 긍지와 자부심이다. 민족의 운명, 국가의 운명은 수령에 의하여 결정된다.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한 인민은 언제 가도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으며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 수 없다. 수령의 위대성이자 곧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이고 국가의 강대성이다.”¹⁶⁶⁾

앞서 살펴본 김정일애국주의의 수령과 국가를 동일화시켜 수령에 대한 사랑과 국가에 대한 사랑을 일치시키는 수령 중심의 조국관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제일주의에서는 국가와 수령을 동일화시킴으로써 수령의 위대성을 국가의 위대성으로 연결하는 것이다.¹⁶⁷⁾

또한 우리 국가제일주의에서는 수령에 의한 영도의 위대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령의 영도 계승 역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업적이기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165)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로동신문』, 2019.1.8.

166) 김정철,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적 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 64권 4호 (2018), pp. 40~45.

167) “조국의 위대성은 곧 수령의 위대성이다. 수령이 위대하면 작고 뒤떨어진 나라도 발전된 나라로, 권위있는 강국으로 될 수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제일주의이다.” 『민주조선』, 2019.5.4.

“사회주의국가정치체제의 계승 문제는 관건적이면서도 해결하기 힘든 문제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계승 년대에는 분파가 생겨나고 좌절과 혼란을 겪었다. 바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데로부터 지난 시기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무너지는 역사적 비극이 초래되었다. ... (중략) ... 다른 나라들에서 수령을 개인으로 보면서 령도의 계승 문제를 최고 직책을 넘겨받는 식으로 대처할 때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의 앞날을 내다보며 참다운 후계자를 내세우고 조직사상적 기초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축성했다. ... (중략) ... 오늘 세계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전변상에 대해서도 감탄하고 있지만 강력한 국가정치체제가 편파 없이 계승되고 있는데 대하여 더 부러워하고 있다. 그것은 계승성이 확고한 국가에 무한한 발전성과 창창한 전도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난문제로 되고 있는 계승 문제를 리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할 것이야말로 주체조선의 더없는 자랑이며 긍지이다.”¹⁶⁸⁾

결국 우리 국가제일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가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연결됨을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통치 담론을 통해 김정은은 권력세습과 일인지배체제의 정당성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이며 우리 수령제일주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근본 핵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우리 공화국의 강대성과 존엄의 상징이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는 국력 강화의 결정적 요인이다.”¹⁶⁹⁾

168)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중요한 내용,” 『로동신문』, 2019.1.22.

169) 장동국,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는 데서 나오는 중요 요구,”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2018-3호(제154호) (2018), pp. 19~21.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두 번째 내용은 국가의 발전에 관한 내용이다.¹⁷⁰⁾

이미 북한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에 앞서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하며 경제발전을 위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이에 우리 국가제일주의에서는 경제발전을 통한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해 자강력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 요구는 다음으로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주의 기치,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국가의 우월성과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는 것이다. … (중략) … 사회주의 조국의 번영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기적은 하늘이 주는 우연이 아니라 자강력이 안아오는 필연이다. 제 힘이 제일이고 자강력이 제일이다. 사회주의강국 건설은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이며 자력갱생에 조국과 민족의 존엄이 있고 튼튼한 번영이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밝힌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을 위한 투쟁에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선 지금이야말로 자강력제일주의 구호를 더 높이 들어야 할 때이다.”¹⁷¹⁾

자강력제일주의는 2016년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는데,¹⁷²⁾ 자강력제일주의에 대해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

170)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적 내용은 또한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이다. … (중략) …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내세우는 기본취지는 전면적인 국가부흥 시대에 맞게 더욱 분발하여 천하제일 강국을 일떠 세우기 위한 총돌격전에 매진하자는 데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 『로동신문』, 2019.1.8;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 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업은 또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것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 나가는 데서 나서는 과업,” 『로동신문』, 2019.1.27.

171)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본요구,” 『민주조선』, 2017.12.27.

172)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며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길입니다.” “신년사,” 『로동신문』, 2016.1.1.

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라고 규정했다.¹⁷³⁾ 김정은은 이러한 자강력제일주의의 구현을 위한 투쟁방식으로 자력갱생과 간고분투를 언급하였는데,¹⁷⁴⁾ 이후 2019년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를 구호로 제시하는 등 자력갱생을 앞세워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독려하고 있다.¹⁷⁵⁾

“자력갱생은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를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한 전진 방향, 기본투쟁방식이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는 데 현존하는 난관을 정면돌파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획기적 전진을 이룩하며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최고의 높이에 올려세우는 길이 있다.”¹⁷⁶⁾

“자력갱생은 우리 국가제일주의 시대를 끝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한 전진 방향이고 기본투쟁방식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은 예측과 망국의 길이며 자력갱생만이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하고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길이다. 현존하는 난관을 뚫고 경제건설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해나갈 수 있는 묘술도 자력갱생에 있고 시대의 지향과 문명의 높이에 어울리는 혁명적이며 고상한 사회주의 문화를 창조해나갈 수 있는 비결도 우리 식에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담보도 주체적 힘, 내적 동력 강화에 있다.”¹⁷⁷⁾

173) “조선로동당 제 7 차 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5.8.

174)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입니다.” “조선로동당 제 7 차 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5.8.

175) “신년사,” 『로동신문』, 2019.1.1.

176) “위대한 김정은동지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로동신문』, 2021.4.2.

177)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중요요구,” 『로동신문』, 2021.5.15.

김정은은 2016년 제7차 당대회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이후 2018년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2016년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목표에 미달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발전의 침체 가운데 김정은은 자력갱생을 내세운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통치 담론으로 활용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인민들을 동원하고자 한 것이다.

Ⅲ. 김정은과 엘리트 및 인민의 관계

한병진 계명대학교
오경섭 통일연구원



1.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령과 엘리트

가. 이론과 가설: 신생 독재와 세습 독재의 대비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령과 엘리트 관계에 대한 분석은 권력의 원천은 다수의 선택에 자신의 선택을 일치시키는 조정행위라는 근본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¹⁷⁸⁾ 권력을 구성하는 조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엘리트는 일시적으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개인독재 탄생의 비밀이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령 엘리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김정은이 우리에게 익숙한 개인독재자들과 다른 근본적 차이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바로 권력을 세습한 점이다. 독재 연구에 지금도 많은 영감을 주는 고전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세습 군주와 신생 군주의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주로 신생 군주의 지배기술을 자신의 책에서 논하고 있다. 그는 관습의 도움을 받는 세습 군주의 경우 “어지간한 근면함”만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정은은 전형적인 세습 군주이다.¹⁷⁹⁾

할아버지 김일성은 느슨한 엘리트 연합의 집단독재의 1인자로 시작하여 개인독재 권력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신생 군주인 셈이다. 이와 반대로 김정은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절대권력의 자리를 이어받은 세습 군주이다. 김일성과 김정은이 권력을 축적하는 속도에서 보이는 큰 차이가 여기에서 비롯한다. 김정은이 세습한 권력질서를 다시 한번 마키아벨리의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의 엘리트는 관습적 특권을 누리는 귀족이 아니라 군주의 호의와 은사에 전

178) 한병진·임석준, “조정, 독재권력 형성과 변동의 미시적 기초,” 『현대정치연구』, 제7권 1호 (2014), pp. 142~163.

179) 니콜로 마키아벨리, 강정인·김경희 옮김(2011), 『군주론』 (서울: 까치, 2011), p. 15.

적으로 기대는 가신이다.¹⁸⁰⁾

하지만 여전히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하듯 권력투쟁의 기본 원리는 신생 독재와 세습 독재에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엘리트를 상대해야 하는 독재자가 보편적으로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엘리트의 집합적 도전의 가능성이다. 필자는 엘리트의 집단행동(실패)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모델을 제안한다.¹⁸¹⁾ 이 모델과 세습 독재의 제도적 환경을 결합한 가설을 제시하고 이에 비추어 김정은이 독재 권력을 구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I-1〉 엘리트의 집단행동과 독재정치질서

엘리트 B		
	도전	충성
도전	$y/[1-p(\text{집단독재})],$ $y/[1-p(\text{집단독재})]$	$0, x/[1-p(\text{개인독재})]$
충성	$x/[1-p(\text{개인독재})], 0$	$z/[1-p(\text{개인독재})],$ $z/[1-p(\text{개인독재})]$

엘리트 A

위의 표를 논의해 보자. 분석의 편의상 두 명의 엘리트가 하는 정치 게임을 상정하고 있다. 엘리트는 도전 혹은 충성한다. 만약 함께 도전하면 엘리트는 독재자와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집단독재를 세울 수 있다. 혼자 도전하면 그는 숙청된다. 혼자 충성하면 일단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이 큰 개인독재를 가진다. 엘리트가 얻는 1회 보상

180) 위의 글, pp. 33~34.

181) 한병진, “독재의 권력투쟁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 소련, 중국, 이라크, 시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9권 2호 (2020), pp. 39~64.

의 크기는 혼자 충성한 개인독재의 $x >$ 집단독재의 $y >$ 모두 충성한 개인독재의 z 의 순으로 차이가 난다.

다소나마 합리적인 엘리트의 계산은 단순히 1회 보상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연구자는 전제한다. 독재정치 본성상 미래의 보상은 불확실하다. 엘리트가 누리는 미래의 확실성 정도(p)는 독재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권력을 분담하고 있는 집단독재에서는 p (집단독재)가 높다. 이와 달리, 개인독재에서는 독재자의 사적 호의에 대한 엘리트의 판단이 확률 값을 결정한다. 그러나 여전히 미래에 대한 확실성 정도는 집단적 처벌이 가능한 집단독재가 개인독재를 앞선다. $p(\text{집단독재}) > p(\text{개인독재})$ 로 볼 수 있다.

엘리트가 오늘 예상하는 미래의 보상을 포함한 총 기댓값은 각각 $x/[1-p(\text{개인독재})]$ 와 $y/[1-p(\text{집단독재})]$ 이다. 엘리트 상호작용의 성격은 이 중 어느 쪽의 값이 더 높은지에 달려 있다. 만약 $x/[1-p(\text{개인독재})]$ 가 $y/[1-p(\text{집단독재})]$ 보다 높으면 죄수의 딜레마게임으로 상대의 선택과 관계없이 충성이 합리적이다. 이와 달리 $y/[1-p(\text{집단독재})] > x/[1-p(\text{개인독재})]$ 인 경우 조정게임이다. 각자의 합리적 선택은 상대가 어떤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에 달려 있다.¹⁸²⁾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p(\text{집단독재})$ 와 $p(\text{개인독재})$ 의 값이 엘리트의 상호작용에 결정적이다. 독재자의 은덕으로 오랫동안 출세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p(\text{개인독재})$ 의 값이 올라가면 $x/[1-p(\text{개인독재})] > y/[1-p(\text{집단독재})]$ 로 협력의 가능성은 사라진다. 특별히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한 판으로 끝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다. 협력의 가능성은 없다.¹⁸³⁾

그런데 일단 독재자의 신임을 믿은 엘리트 사이에 충성 경쟁이 일

182) 위의 글, pp. 45~46.

183) Robert Axelor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84), pp. 27~54.

어나면 독재자는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제 충성 경쟁이라는 균형(충성, 충성)에서 집단 도전이라는 균형(도전, 도전)으로 함께 동시에 이동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엘리트는 죄수의 딜레마 대신 조정의 딜레마를 경험한다.¹⁸⁴⁾

따라서 신생 독재자는 집권 초기 아직 독재권력이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권력의 의지를 숨겨야 한다.¹⁸⁵⁾ 권력을 계승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술책이 동원될 수 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이 다양한 책략을 몸소 제시한다. 파벌을 안배하는 인사정책과 용인술, 공개적 이유를 명확히 하는 점진적 숙청, 사적 만남을 통해 흑이나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술수 등을 사용했다. 이러한 김일성의 위장술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1956년 4월 당대회 전까지 소련과의 지도자 박창옥은 자신에 대한 김일성의 오해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소련 대사와의 대화에서 분명히 내비친다.¹⁸⁶⁾

그렇지만 위장의 기간에서 신생 독재자와 세습 독재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 엘리트의 집단독재에서 시작하는 신생 독재자는 개인의 절대권력이 관습화된 세습 독재자에 비해 훨씬 조심해야 한다. 자신의 권력욕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오랫동안 선호를 위장하고 인사 정책 등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오랜 기간 형성된 절대복종의 관습 덕분에 세습 독재의 엘리트는 정치적으로 허약하다. 결국 신생 독재에 비해 세습 독재에서 엘리트를 현혹하는 위장의 기간이 훨씬 짧다(가설 1).

다음의 가설에서도 우리는 세습 독재자가 신생 독재자에 비해 누

184) 한병진, 『독재의 법칙: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탐욕과 배신의 정치사』 (파주: 고풍출판, 2021), pp. 169~170.

185) 위의 책, pp. 164~165.

186)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 정체성, 구조』 (서울: 한울, 2010), pp. 312~314.

리는 전략적 이점을 감안해야 한다. 독재자와 엘리트의 상호작용으로 권력투쟁을 분석할 경우 모두가 알고 있다고 모두가 믿는 공동지식(common knowledge)의 문제가 중요하게 떠오른다.¹⁸⁷⁾ 절대권력에 대한 야심을 숨기기 위해서 독재자는 공식 규칙을 변경하는데 조심한다. 절대적 지위를 분명히 하는 공식 규칙의 변경, 도입은 독재자에게 불리한 공동지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¹⁸⁸⁾ 제도의 변경이 제공하는 정보는 애매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신생 독재자는 매우 천천히 공식규칙을 변경한다.¹⁸⁹⁾ 그런데 이미 엘리트의 관습적 조정 균형을 누리는 세습 독재자는 신생 독재자와 비교할 때 절대권력을 공식화하는 공식 제도의 도입에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다(가설 2).

세 번째로 개인 이상화 관련 가설 역시 속도의 문제가 핵심적이다. 개인독재를 꿈꾸는 독재자는 수위를 조절한 개인 이상화를 집권 초기부터 꾸준히 수행한다.¹⁹⁰⁾ 개인 이상화는 개인독재의 강력한 무기이다. 개인 이상화가 권력투쟁 결과의 사후적 추인이라는 주요 독재정치 연구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¹⁹¹⁾ 이러한 주장은 권력의 원천이 조정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서 유래한다. 개인 이상화는 엘리트의 조정을 개인독재의 방향으로 밀어붙인다. 다양한 독재자의 개인 이상화를 심층 분석한 역사학자는 연구자의 가설

187) Kyle A. Thomas, Peter DeScioli, Omar Sultan Haque, and Steven Pinker, "The Psychology of Coordination and Common Knowle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7, no. 4 (2014), pp. 657~676.

188) 한병진(2020), 독재의 권력투쟁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 소련, 중국, 이라크, 시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p. 46.

189) Michael Suk-Young Chwe, *Rational Ritual: Culture, Coordination, and Common Knowledge*, pp. 4~18.

190) 한병진, "독재의 권력투쟁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 소련, 중국, 이라크, 시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pp. 49~50.

191) Milan W. Svob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 57.

과 유사한 결론을 맺고 있다. “승배와 공포”에서 공포만을 강조한 경향을 비판하면서 개인 우상화는 전제정치의 한가운데 위치한다고 평가한다.¹⁹²⁾ 그렇지만 집단독재에 대한 엘리트의 기대가 아직 만연한 신생 독재에서 성급한 신격화는 엘리트의 집단반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신생 독재와 달리 개인 우상화에 오랫동안 익숙한 세습 개인독재에서는 수위가 빠르게 올라간다(가설 3). 이 가설 역시 다음의 김정은 정권 분석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절대복종이라는 엘리트의 조정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세습 독재자는 강력한 최소 징벌(minimum punishment)의 억압을 유지한다(가설 4). 최소 징벌은 아주 낮은 단계의 정치적 반대행위에 가해지는 처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형법에 따라 마약 소지 및 운반 등에 엄격한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¹⁹³⁾ 고도로 발달한 국가폭력을 이용한 무자비한 처벌과 감시는 사소한 공개적 불손 행위도 사전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이에 어떠한 소통도 새로운 공동지식도 불가능하다. 이미 집단반발 능력을 상실한 엘리트에게 극단적 최소 징벌 앞에서 그저 공포만을 느낄 뿐이다. 이는 세습 개인독재에서 엘리트의 조정을 확실히 묶어두는 방식이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가설을 요약해 보자. 세습 독재자는 느슨한 엘리트 연합의 집단독재에서 개인독재를 구축하는 신생 독재자를 많은 부분에서 닮는다. 무엇보다 위장술의 필요성은 아직 충성파로 교체를 완성하지 못한 세습 독재자에게도 여전하다. 하지만 이미 절대복종으로 엘리트가 오랫동안 조정된 세습 독재에서는 주기가 훨씬 짧다. 위장술과 숙청, 헌법 및 제도 변경, 개인우상화의 수위 상승

192) 프랑크 디코터, 고기탁 옮김, 『독재자가 되는 법』(파주: 열린책들 2021), p. 21.

193) Mehdi Shadmehr, “Extremism in Revolutionary Movement,” *Games and Economic Behavior*, vol. 94, no. C (2015), pp. 97~121.

등이 더 압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한다. 동시에 엘리트의 공동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징벌의 수준을 극단적 수준으로 유지해서 소통과 결사의 어떠한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는다.

나. 세습 수령의 위장술: 세습 초기 조선노동당의 복원

권력의 세습이 급작스럽고, 후계자가 젊어 경험이 부족하고, 국내 외 정세가 북한에게 불리했던 2011년 겨울은 북한 엘리트 모두에게 불확실한 시기임에 분명해 보인다. 문자 그대로 안개 정국이었다. 극장국가로 북한을 세밀하게 관찰한 인류학자들은 노동당의 정치적 기능이 회복되는 것 같은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사회주의 정치의 정상적 상태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 섞인 예상을 조심스럽지만 내놓았다.¹⁹⁴⁾ 사후적으로 판명 난 것처럼 이러한 잘못된 예상은 예리한 외부 관찰자만의 문제가 아닌 듯하다.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내부자 역시 상황을 크게 오판했다. 권력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모두 맞본 장성택의 행동은 처음부터 수령제에서 크게 벗어나버렸다. 2013년 겨울, 법정에 끌려온 장성택의 판결문에는 2011년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될 당시 장성택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손”하게 행동했다고 적시되어 있다.¹⁹⁵⁾

김정은 권력세습 초기의 핵심 특징은 노동당의 외양적 복원이다. 정기적으로 주요 회의가 열리고 정치국이 복원되는 등 아버지 김정일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김정일 시대에 당이 제도적, 정치적으로 쇠락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은 집권 초기에 노동당의 외양

194)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서울: 창작과비평, 2013), p. 227.

195) “‘건성건성 박수에 오만불손한 행동’... 장성택 패씨죄,” 『연합뉴스』, 2013.12.13., <<https://www.yna.co.kr/view/MYH20131213004500038>> (검색일: 2021.12.9.).

적 복원은 모두에게 특별해 보였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2011년, 2012년 당시 젊은 독재자, 추종 세력을 구축한 노련한 엘리트,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상대적 후퇴, 군부의 파벌화가 더해지면서 내부 최고 엘리트마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 노동당의 정치적 지위가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서 수령 김정일이 가진 권력을 과소평가하는 엘리트의 실수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실수를 저지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장성택이다. 그럼 노련한 정치인 장성택마저 판단착오를 일으키게 한 노동당의 복원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김정일 시대의 노동당에서 시작해 보자. 당시 노동당은 정치 무대에서 크게 후퇴했다. 정치국의 조직적 위상은 떨어지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대신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됐다. 황장엽의 말을 빌리면 당시 “정치국 회의는 개점휴업” 상태였다.¹⁹⁶⁾ 정치국원들이 아닌 김정일의 측근들인 당비서와 전문부서 부부장들의 역할과 지위가 높아졌다.¹⁹⁷⁾

김정일이 노동당을 경시하는 경향은 선군정치 이전부터 분명했다. 사실 대부분 절대권력은 회의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열리는 회의 등 분명한 의사결정제도는 엘리트의 집단행동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엘리트는 정기적 모임과 소통을 통해 집단행동을 위한 공동지식을 마련할 수 있다. 주기적 회의의 부재는 바로 독재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공동의 정보를 엘리트에게 알려준다.¹⁹⁸⁾

196) 이종석, 『새롭게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p. 261~262.

197)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의 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 (2002), pp. 349~365.

198) Douglas C. North and Barry R. Weingast, “Constitutions and Commitment: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Governing Public Choic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49, no. 4 (1989), pp. 803~832.

뒤이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핵심 회의체인 조선노동당의 감시 감독 기능을 허물어버렸다. 예를 들어 군사 부문을 감독하는 당 조직인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관할이었던 군수산업 관련 제2경제 부문이 1998년 이후 국방위원회로 이관됐다. 이는 선군노선의 주체인 군부가 당의 통제권 밖에 있음을 의미한다. 홀대받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 수는 1980년 19명에서 1999년에 14명으로 줄어들었다.¹⁹⁹⁾

더욱이 김정일은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한 번도 당대회를 열지 않았다. 김정일 시대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 대신 아주 가끔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일은 참석하지 않고 담당 비서가 김정일의 지시를 낭독하기만 했다. 회의 대신 김정일이 전화로 개별 간부에게 직접 지시하는 식이었다.²⁰⁰⁾

선군정치는 노동당의 추락을 더욱 부채질했다. 국가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한 1998년 헌법 개정 이후, 선군노선과 군 우대 정책은 2009년 초 공표된 신헌법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헌법 조문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명시하였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절대적 지위를 고려할 때 군부에게 보내는 수령의 분명한 (일시적) 약속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 시대에 당은 군에 밀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확고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정부에 대한 당의 압도적 우위가 당연시되는 일반적 공산주의 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당이 추락하는 또 다른 증거이다. 1994년 정무원 책임제, 정무원 중심제의 체제를 도입하여 김정일은 내각의 권한을 강화했다.²⁰¹⁾ 이후

199) 이종석, 『새롭게 쓴 현대 북한의 이해』, p. 262.

200) 위의 글, pp. 270~271.

201) 한병진, “북한, 결국 변할 것인가? 김정은 정권의 현상유지 편향,” p. 28. (검색일: 2021.9.23.).

1998년 헌법 개정에서 만들어진 내각 책임제, 내각 중심제 덕분에 내각의 독립성이 강화됐다.²⁰²⁾

결국 김정일이 구축한 공산 질서는 당의 지배와 감시를 위한 당과 국가 사이의 인적 제도적 높은 결합을 보여주는 공산주의의 일반적 양상에서 크게 벗어났다. 당·정·군 엘리트가 자신의 임무와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김정일에게 직접 책임지는 매우 분산적인 체제였다.²⁰³⁾ 이러한 현상을 과대평가한 이는 당시 북한을 후기전체주의라는 주장마저 하고 있다.²⁰⁴⁾ 그런데 당독재에 기초한 후기 전체주의에서는 당과 정부 사이의 조직적 인적 결합이 강하다.²⁰⁵⁾ 당 조직과 정부 조직이 일대일로 대응하며 당 주요인사가 정부 주요 보직을 겸직하고 있고 핵심 요직을 차지한 자들은 모두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다. 김정일의 분할 지배는 이와 상관없다.²⁰⁶⁾ 더욱이 수령의 절대성을 감안할 때 김정일의 북한을 후기전체주의로 평가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단 당·정·군 사이의 관료적 갈등이 외부자의 눈에 보일 정도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93년 12월 제6기 21차 중앙당 전원회의 이후 작동을 멈추어버린 조선노동당은 권력 계승기에 극적으로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 44년 만인 2010년 조선노동당 제3차 대표자회의에서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추대됐다. 이를 시발로 당·정·군의 분산 대신 당 중심으로 국가조직이 재편되기 시작했다.²⁰⁷⁾ 공식 제도의 큰 변화는 2010

202) 위의 책, p. 28.

203) 위의 책, pp. 269~271.

204) Patrick McEachern, *Inside the Red Box: North Korea's Post-totalitarian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pp. 18~50.

205) 한병진, “북한, 결국 변할 것인가? 김정은 정권의 현상유지 편향,” p. 28. (검색일: 2021.9.23.).

206) 위의 글, p. 28.

207) 위의 글, p. 28.

년 3차 당대표자회의와 김정일 사후 열린 2012년 4월 당대표자회의에서 나타났다. 무엇보다 선군정치 후퇴가 뚜렷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국방위원회에 양도했던 많은 권한을 되찾아왔다. 3차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30년 만에 이루어진 당 규약 개정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 분야의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 지도하는 최고군사기관”으로 지위가 올라갔다.²⁰⁸⁾ 이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분명히 하는 결정으로 당의 위상 회복에 대한 기대를 모두가 가질 만했다. 무엇보다 김정은을 후계자로 추대한 2010년 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이 결정이 이루어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은 선군노선으로 비대해진 군부가 아들 김정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두려워한 듯하다.

제3차 및 제4차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구성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군사 업무 관련 주요 인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²⁰⁹⁾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격상은 외양적 당 복원의 가장 분명한 시작이었다. 결국 계속된 선군정치 후퇴는 2016년 헌법 개정을 통해 모두에게 분명히 선언됐다.

계승 초기 보다 확실한 당의 외양적 부상은 정치국의 위상 강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일성의 북한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 질서에서 정치국 위원이 최상위 서열을 차지하는 정상적인 정치 제도는 김정일 시대와 크게 대비된다. 정치국의 몰락을 보여주는 눈에 띄는 많은 징표들이 있었다. 2001년 4월 최고인민회의의 10기 4차 회의 주석단 서열에서 국방위원들이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보다 앞서 배치됐다.²¹⁰⁾ 정치국 중심의 서열 파괴 조짐은 이미 1996년 7월 김일

208) 위의 글, p. 29.

209) 위의 글, p. 29.

210)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의 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p. 358.

성 사망 2주기 중앙추모대회부터 분명했다. 여기서 주요 군부 인사들의 이름이 정치국 후보위원보다 앞서서 불렸다. 군부 핵심은 정치국 위원급으로 격상되었고 결국 1998년 군부 핵심인사가 권력 서열에서 정치국 위원에 앞섰다.²¹¹⁾ 한마디로 정치국이 서열의 중심에 서는 일반적 공산주의 정치질서가 선군정치로 허물어졌다.

조직 구성 측면에서도 우리는 정치국의 유명무실화를 확인할 수 있다. 1980년 10월 정위원 19명, 후보위원 15명으로 시작한 정치국은 사망 등으로 사라진 인물들을 대체하지 않으면서 1999년 정위원 7인과 후보위원 8인으로 보잘것없는 조직으로 전락했다.²¹²⁾

이는 2010년과 2012년 당대표자회의 직후 만들어진 정치국과 크게 대비된다. 당시 후계자 김정은의 측근이라 믿어지는 인물 모두가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의 명단에 포진했다.²¹³⁾ 김정일 시대와 달리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정치국회의, 당 중앙전원회의,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대체로 정기적으로 개최됐다. 이러한 당의 재부상은 기존 지배엘리트를 현혹하기에 충분했으리라 본다. 회의체 부상을 관찰하면서 “엘리트의 불안감을 희석하는” 조치로 평한 북한 전문가의 견해가 적절해 보인다.²¹⁴⁾

여기에 더해 김정은의 처신 역시 후흑(厚黑)의 전형을 보인다. 김정일 생전 김정은과 리영호가 서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북한 전문가 라종일이 전하고 있다. 당시 김정은과 장성택의 외면적 친밀도는 이보다도 훨씬 높았다는 평가도 덧붙이고 있다.²¹⁵⁾ 숙청되기 몇 달 전까지도 장성택이 김정은을 수행한 기록이

211) 이종석, 『새롭게 쓴 현대 북한의 이해』, pp. 275~277.

212) 위의 책, p. 262.

213) 한병진, “북한, 결국 변할 것인가? 김정은 정권의 현상유지 편향,” pp. 31~32. (김색일: 2021.9.23.).

214) 박형중, “권력세습과 통치연합 재편,”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pp. 96~97.

눈에 띈다. 2013년 10월 전국 도 대항 체육경기대회를 장성택은 김정은과 함께 관람했다.²¹⁶⁾

권력세습기에 김정은이 내보낸 신호의 소음은 10대 원칙의 부분적 개정에서 더욱 심해진다. 수령과 엘리트의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헛갈리게 할 수 있을 정도였다. 10대 원칙 개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세습을 정당화하고 당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엘리트 내부 파벌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했다. 시점이 아직 장성택의 숙청이 있기 몇 달 전인 2013년 6월이었음은 세습 독재에서의 정치적 기류 변화 주기가 짧다는 연구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김정은이 간부들을 모아놓고 개정된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에 대해 공개 연설을 했다. 기존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에서 살짝 이름을 바꾼 북한에서 신성시 되는 10계명에 아버지 김정일처럼 김정은은 아직 자신의 이름을 넣지는 않았다. 김일성 혁명사상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경되었고 백두혈통이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세습체제를 공식화했다. 제3조 4항에 ‘백두산 절세위인들’이라는 표현을, 제10조 2항에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라는 문구를 추가 삽입하여 부자 세습을 당연시하였다.²¹⁷⁾

그런데 변경된 10대 원칙의 내용은 이제부터 복잡해진다. 무엇보다 당에 대한 강조가 곳곳에 보인다. 제3조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해야 한다” 제4조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한다”고 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장술을 펼치는 독재자

215) 라종일, 『장성택의 길: 신정神政의 불온한 경계인』 (서울: 알마, 2016), p. 241.

216) 위의 책, p.245.

217)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사전, “유일영도체계,”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know/view.do?id=31963&eqDiv=%EC%95%84&mid=SM00000536&limit=10&eqViewYn=true>> (검색일: 2021.9.16.).

라는 연구가설에 부합하는 변화로 기존 제4조 8항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를 엄격히 구별하며”를 제4조 7항의 “당의 방침과 지시를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와 엄격히 구별하며”로 변경했다. 노동당이 수령을 대신하고 있다. 이 역시 노동당을 통한 엘리트의 지위 향상이라는 착각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문구 수정이라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제9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영도 밑에”는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로 수정되었고, 간부 임용의 기준인 제9조 7항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에 대한 충실성과 실력”으로 바뀌었다. 이는 혁명적 수령관을 핵심으로 하는 주체사상에 비추어볼 때 가히 혁명적 수정으로 노동당의 부각이라는 당시 기사제목이 과장스럽지 않을 정도였다.²¹⁸⁾

하지만 동시에 엘리트의 정치적 능력을 더욱 방해하는 문구 수정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엘리트의 집합적 저항 능력은 파벌 형성의 정도에 달려 있다.²¹⁹⁾ 역사적으로 소련 혁명 직후 당내 갈등을 억압하기 위해 레닌이 도입한 공산당 내 파벌 금지 조항은 엘리트의 집단 행동력을 파괴하고 공산당 조직원리인 민주집중제에서 민주가 없는 집중만을 만들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10대 원칙 6조의 문구 수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개별적 간부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거나 아부아침하면서 이상화하는 현상을 철저히 반대한다”는 기존 문구는 “개별적 간부들에 대한 환상, 아부아침, 이상화를 배격하며 개별적 간부의 직권에 눌러 맹종맹동하거나 비원칙적으로 행동하는 현상을 없애야 한다”로 보다 분명하고 자세하고 길게 변경됐다. 이

218) “북 ‘유일사상 10대 원칙’ 첫 개정 세습·노동당 부각(종합2보)”, 『연합뉴스』, 2013.8.12., <<https://www.yna.co.kr/view/AKR20130812087352014>> (검색일: 2021.9.16.).

219) 파벌의 형성 정도가 개인독재화에 결정적 변수라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Barbara Geddes, Joseph Wright, and Erica Frantz,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pp. 25~41.

에 더해 6조 5항에 “당의 통일단결을 파괴하고 좀 먹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요소와 동상이몽, 양봉을 위하는 현상을 반대하며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는 문장이 새롭게 추가됐다.²²⁰⁾

김정은의 절대권력을 실질적으로 선언한 장성택 숙청이 있기 불과 몇 달 전에 이루어진 10대 원칙의 부분적 수정의 전체적 방향성은 노동당의 외양적 복원 현상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세습 초기의 사태 전개는 주요 엘리트 다수를 오만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리영호가 사적으로나마 김정은의 지시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실수도 이러한 맥락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공개적으로 오만불손을 표출한 장성택의 실책은 그의 정치 역정에 비추어 더욱 대비된다. 자신의 인생 역정을 돌아본다면 북한에서 본인을 포함한 모든 엘리트는 수령의 가신일 뿐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밖에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는 2004년 정부 관료들에게 요란한 파티를 열어 준 사실이 김정일 귀에 들어가 교화소에서 격리 조치-혁명화를 받는 곤욕을 치렀다. 수령만의 권한인 술 파티라는 선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한 때나마 김정남을 지지했던 과거를 염두에 둘 때 더 몸을 낮추는 처신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그가 오만해질 근거 역시 충분했다. 김정은으로 후계 사업이 속도를 높이는 2010년 김정일의 지시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당 행정부의 최대 경쟁조직인 노동당 조직지도부 주장들의 개인적 불운이라는 행운까지 겹쳤다. 이로 인한 오만과 오판 때문에 그는 2013년 12월 종파, 파렴치범, 동상이몽, 불경죄로 몰려 무서운 죽음을 맞는다. 사실 북한 주민과 엘리트 사이에 “1번 동지” 혹은 “나와 다니는 장군님”으로 불릴 때 이미

220) *Ibid.*, p. 263.

그의 비극적인 죽음이 예정되었는지도 모른다. 엘리트의 조정으로 독재정치를 이해할 경우 분명한 2인자로 인식되는 인물은 확실한 제거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당의 외양적 복원은 사회주의의 정상화가 아니라 군부에 대한 김정일과 김정은의 두려움에 따른 조치임이 사후적으로 분명해졌다. 군에 대한 독재자들의 두려움은 사실 보편적이다. 쿠데타의 위험성 때문에 독재자들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올려주는 조치를 가능한 피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예외적인 개인독재가 아사드의 시리아다. 인종적 종교적 분열과 갈등, 소수와 알라위의 집권 등에 따른 아버지와 아들 아사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²²¹⁾ 김정은의 북한은 예외가 아니었다. 2012년 리영호가 제거된 이후 총정치국, 총참모부 등 핵심 보직의 인사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다수의 숙청은 잔혹하게 진행됐다. 이 결과 군부에서 리영호에 비견할 실력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군의 주요 간부가 상당한 비율로 교체됐다.

이러한 군부 숙청에도 불구하고 선군노선에 대한 공허한 찬양은 김정은의 절대권력을 대내외에 공표한 2016년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행한 김정은의 보고에서 여전히 가장 앞자리를 차지한다.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라는 부제목으로 시작하면서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하여 조선혁명의 백승의 진로인 선군혁명노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관습적 연속성을 유지하여 엘리트층을 기존 조정 균형에 묶어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독재자의 언술이다. 자신의 군부 숙청이 과거와의 급격한 단절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세습

221) Nikolas Van Dame, *The Struggle for Power in Syria: Politics and Society under Asad and the Bath Party* (New York: I.B. Tauris, 2011), pp. 31~60.

독재자의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다.²²²⁾

요약하면 2009년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의 최대 과제는 김정일 집권 말기에 형성된 파벌의 소탕이다. 고난의 행군에 따른 국가기구의 혼란, 선군정치, 김정일의 건강 악화 등으로 김일성의 주체사회주의화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파벌의 힘이 강력해졌다. 파벌의 힘이 클수록 독재자는 더욱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파벌은 내부적으로 집단행동력을 갖춘 집단이기에 소수 파벌 집단이 협력에 성공하면 독재자에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마오쩌둥과 김일성, 스탈린 등이 상당한 위장술을 펼친 상황적 맥락과 동일하다. 계승 초기 조선노동당의 외양적 복원은 선군정치의 혼란을 틈타 강력해진 엘리트에 대비하는 김정은의 위장술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엘리트의 절대복종이라는 오랜 조정 균형을 향유한 세습 독재의 위장술은 오래가지 않았다. 2013년 장성택 숙청까지 걸린 시간은 김일성의 시간에 비해 매우 짧았다. 계승 초기 북한의 이러한 정치적 역동성은 계통 발생을 짧은 주기로만 반복하는 세습 독재라는 연구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수위를 높이는 개인 우상화와 극단적 수준의 최소 징벌: 개인독재의 공동지식의 공고화

마오쩌둥은 죽으면서 자신의 공식 후계자 화궈핑에게 과거의 방침에 따라 서두르지 말고 일을 처리하라고 당부한다. 권력질서는 계약이 아닌 관습이기에 관습적 힘을 빌려 통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²²³⁾ 유훈 통치는 계승 초기 기존의 조정 균형을 유지하는 힘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옛것에 새것을 덧입히는 삼심육계 전략

222)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5.8.

223) Gordon Tullock, *Autocracy*, pp. 151~166.

중의 하나인 차시환혼(借屍還魂)과 일맥상통한다.

권력은 조정이기에 독재자는 개인 우상화를 아직 절대권력에 미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시도한다. 개인 우상화는 독재자가 선전 매체 등을 동원하여 자신의 존엄과 압도적 지위에 대한 공동지식을 만드는 노력이기 때문이다.²²⁴⁾ 특별히 관습이 만들어내는 조정의 제약적 힘을 감안할 때 개인독재의 계승이 권력투쟁 없이 끝나는 것은 기존 엘리트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권력 계승기의 권력투쟁은 엘리트의 새로운 정치질서로의 조정을 위한 전략적 공간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탈린 사후 소련과 마오쩌둥 사후 중국이다. 스탈린의 대공포와 대숙청에 운 좋게 살아남은 소련 엘리트는 NKVD의 수장 베리아를 체포, 처형하고 비밀경찰 조직의 이원화 등으로 물리적 안전에 대한 합의를 분명히 했다. 스탈린 격하 운동은 개인독재에 환멸을 느낀 엘리트의 지지를 구하기 위한 야심가들의 당연한 선택이었다. 화귀평과 범시 논쟁을 벌이면서 덩샤오핑은 당을 파괴하는 개인독재에 반대하는 다양한 정치세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 이렇듯 권력 계승기 권력투쟁은 새로운 조정 균형을 위한 공동지식을 만드는 계기를 부여한다. 개인 우상화 금지, 국가폭력의 제한, 최고지도자 선출 규칙 등에 대한 합의가 권력투쟁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데 권력투쟁이 없다면 엘리트가 공동지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그리고 개인독재로의 엘리트의 조정은 여전히다. 경로의존이다.

개인독재화의 최대 무기는 개인 우상화이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도 금수산 태양궁전의 개보수에 소중한 재정을 쏟아부은 이유이다. 거대한 건축물과 의례와 집회를 통해 독재자 개인의 절대성을 끊임

224) 한병진, “독재의 권력투쟁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 소련, 중국, 이라크, 시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p. 46.

없이 선전 선동한다. 선거의 압력에 직면한 선거독재는 경제정책 등에서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개인독재의 생존에서는 정책 대신 선전이다.²²⁵⁾

그렇지만 계승 초기의 김정은 역시 자신의 개인 이상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무리수를 피했다. 자신의 개인 이상화를 위해 레닌을 먼저 이상화했던 스탈린의 지혜처럼 김정은은 가계 이상화에 전념하는 모습이였다.²²⁶⁾ 막스 베버의 세 가지 정당성 분류 중 전통적 정당성을 크게 닮았다. 개인의 비범한 능력으로 복종심을 끌어내는 카리스마적 정당성과 거리가 있었다. 이는 김정은의 공식 직함에서 잘 드러난다. 2013년 조선노동당 4차 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은 김정일이 맡았던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직을 그대로 남겨두고 대신에 노동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을 맡았다. 2012년 조선노동당 규약과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하면서 조선노동당을 김일성-김정일의 당으로 규정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사상으로 새롭게 명시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최고 강령으로 정했다. 그리고 새롭게 수정된 10대 원칙에도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았다. 자신의 개인적 카리스마를 강조하는 무리한 시도 대신 아버지의 위상을 할아버지 김일성과 동급으로 올리는 데 집중했다.²²⁷⁾ 그래도 당 규약에 김정은 제1비서의 영도를 명문화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 이상화는 한순간도 늦추지 않았고, 수위를 조절할 뿐이었다.

김정은 시대 사상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필자의 가설에 부합한다. 2012년 ‘애국’과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다.²²⁸⁾ 당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조국

225) 한병진, 『독재의 법칙: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탐욕과 배신의 정치사』, pp. 201~211.

226) 프랑크 디뢰터 지음, 고기탁 옮김, 『독재자가 되는 법』, pp. 162~165.

227) 애나 파이필드, 이기동 옮김, 『마지막 계승자』 (서울: 프리뷰, 2019), pp. 160~161.

228)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

과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 부강번영, 사회주의 수호 등 체제 관련 가치에 방점을 둔 김정일애국주의 교양이 주를 이루었다.²²⁹⁾ 이는 김정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이상화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는 의미이다. 김정은의 권력 안정화기로 분류할 수 있는 2016년 이전 아버지, 김정일, 영웅, 백두 등 김일성, 김정일 이상화와 권력승계와 관련한 단어의 빈도가 높다고 연구 결과는 보고하고 있다.²³⁰⁾

계승 초기 김정은은 담화 연설에서도 김일성의 조선, 김정일의 유훈, 김정일애국주의를 자주 표현했다. 김정일의 유훈을 강조하는 2012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은 곧 위대한 김정일 동지이다.”라는 핵심 문장이 등장한다.²³¹⁾ 권력승계 직후부터 꾸준히 김정일 유훈 관철을 강조한 김정은은 2015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까지 “김정일 유훈 관철 사업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설정해서 무조건 관철할 것”을 명령한다.

계승 초기 김정은이 전통적 정당성에 의거한다는 분명한 증거는 김일성을 따라한 김정은의 외양이다. 계승 초기 “전반적으로 풍기는 분위기가 빈티지 김일성”이라는 북한 전문 외신기자의 상세한 묘사처럼 김정은은 엘리트와 인민들 사이에 김일성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려 매우 노력했다.²³²⁾

주체사상의 핵심 주장에서처럼 북한 정권은 권력 유지에서 공동 지식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다른 독재정권의 추종을 불허한다. 자주성과 의식성이 물질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주체사

화연설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55.

229)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로동신문』, 2012.8.3.

230)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분석』, p. 57.

231) 위의 책, pp. 69~70.

232) 애나 파이필드, 『마지막 계승자』, p. 129.

상은 “사상사업을 중심으로 틀어쥐어야 한다고” 즐기치게 강조한다. 이를 연구자의 용법으로 재해석하면 새로운 조정을 위한 공동지식이 발 들일 틈이 없도록 하는 전략적 지침이다. 신년사, 총화보고, 결정문 등 주요 문건을 살펴보면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에는 어떠한 변함도 없다.²³³⁾

가설에서처럼 사상사업의 수위는 개인독재 권력의 상승에 발맞추어 올라간다. 김정은 개인에 대한 우상화는 주요 엘리트에 대한 숙청이 마무리되면서 본격화된다. 2016년 7차 당대회는 사상사업에서 근본적 전환을 역설하면서 “유일관리제의 원칙”을 강조하고 “당과 인민을 김정은 사상으로 무장시켜 한몸처럼” 움직이도록 하는 사상사업을 천명했다.²³⁴⁾ 사상사업의 방식, 내용, 강조점은 김일성, 김정일의 전성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김정은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 김일성-김정일주의와 당의 노선과 정책의 신념화, 수령의 권위를 허무는 현상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신념화 양심화 도덕화 생활화 등 주체의 북한에서 항상 익숙했던 용어와 단어들이다.²³⁵⁾ 사상사업에서 “김정은의 사상과 어긋나는 자그마한 요소나 특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북한의 상투적 표현에서 느껴지듯이 수령의 권위에 대한 사소한 침해에 대한 최소 징벌은 극단적이었다. 철저한 복종이라는 공동지식을 흔들 수 있는 사소하지만 관찰 가능한 불경 행위는 죽음을 불러왔다.²³⁶⁾ 이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공개적 장소에서 불경죄를 저지른 장성택, 현영철 등 최고위직 엘리트들의 무자비한 처

233)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4.2.26.

234)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5.8.

235) 위의 글.

236)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분석』, p. 80.

형이다. 이렇듯 북한의 김정은은 공동지식의 유지가 절대복종의 현상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전임자들만큼이나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라. 김정은의 잦은 공식 제도 개정: 절대적 개인독재 조정 균형의 마무리

서론에서 논의했듯이 독재정치에서 제도 변경은 단순한 독재자의 자기만족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다. 제도 변경은 내용이 애매모호하지 않고 구성원 다수가 동시에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지식이 쉽게 생긴다. 대표적인 예가 헌법이다. 쿠데타 혁명 등에 성공한 집단의 지도자는 헌법을 제정하는 식으로 조력자에게 보상을 약속할 수 있다. 3선 금지, 7년 단임제 등의 헌법은 단순한 정치적 치장이 아닌 셈이다. 공식 제도는 엘리트 사이에 공동의 기대를 만든다.²³⁷⁾ 독재정치에서 공식 제도는 정보와 초점의 효과(information effect and focal effect)를 제공하고, 결국 엘리트의 조정을 한쪽으로 몰아간다.²³⁸⁾

따라서 충분히 많은 충성파를 꾸리지 못한 상태에서 절대권력을 공식화하는 헌법 개정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앞서 게임 모델에 따르면 독재 의지에 대한 정보의 불명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독재자가 엘리트의 집단 반발을 피하면서 안전한 독재권력을 구축하는 핵심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김일성은 숙청을 완전히 마무리한 이후에야 국가주석직을 신설하여 절대권력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남북정상회담으로 새로운 희망을 부풀리는 속에서

237) 한병진, 『독재의 법칙: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탐욕과 배신의 정치사』, pp. 184~185.

238) Henry Hale, "Formal Constitutions in Informal Politics: Institutions and Democratization in Post-Soviet Eurasia," *World Politics*, vol. 63, no. 4 (October, 2011), pp. 581~617.

신헌법을 공표했다.²³⁹⁾ 그만큼 김일성은 공식제도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일말의 정치적 반발마저 회피하고자 했다.

개체 발생이 계통 발생을 되풀이하듯 계승 초기 김정은은 자신의 절대권력을 명시한 헌법을 피했다. 김정은은 2012년 당 제1비서로 북한의 최고지도자에 다소 못 미치는 명칭의 직책에 앉았다. 그리고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북한에서 헌법에 버금하는 10대 원칙에서 수령의 절대성을 더욱 강조하는 대신 당의 지위를 높이는 문구를 여러 곳에 삽입했다. 사실 2013년 장성택 숙청에서 극적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만방에 김정은의 절대권력을 분명히 했지만 후계자의 절대적 지위를 명기하는 헌법 개정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그렇지만 신생 독재자인 할아버지와 달리 세습 독재자 김정은은 훨씬 빨리 안전하게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독재권력을 구축했다. 다시한번 절대복종의 조정 균형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은 세습 독재의 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준파벌의 수장들에 대한 숙청을 순차적으로 빠르게 마무리하면서 김정은은 공식 제도를 시시각각으로 바꾼다. 전형적인 독재의 통치술이다. 리영호, 장성택 등을 포함하여 2백 명 이상이 숙청당했고 수많은 이들이 혁명화와 복권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 이를 통해 절대권력의 기반을 다진 김정은은 엘리트와 인민이 절대충성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못하도록 2016년 드디어 자신의 절대성을 분명히 하는 헌법을 새롭게 개정한다. 헌법 개정에 바로 앞서 2016년 5월 6-9일 제7차 당대회에서 이루어진 당 규약 개정의 방향은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²⁴⁰⁾ 조선노동당 규약에서는 김정은의 당이라는 문구가 처음 등장했고

239) 임혁백, “유신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의 마키아벨리적인 시간(상),” 『한국정치연구』, 제13집 2호 (2004), pp. 223~258.

240)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대화연설분석』, p. 83.

김정은의 공식 직책은 당 제1비서에서 당 위원장으로 변경됐다.²⁴¹⁾

제1비서의 직책을 폐지하는 것을 신호탄으로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위원회는 헌법을 수정하여 국무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를 대체하게 했다. 그리고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와 함께 선군노선 시절 헌법 조문에 삽입되었던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수정됐다. 김정은의 7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강조한 선군노선의 계승 발전²⁴²⁾이라는 평가와는 큰 차이가 나는 수정이었다. 이 개정은 선군노선의 정치적 유산, 파벌로서의 군부를 완전히 청산하는 공식 신호탄이었다. 당연히 김정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로 규정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자리에 앉았다.

이제 세습 독재자의 조심성 혹은 은밀성은 완전히 사라졌다. 2016년 이후 북한 정치제도의 핵심 특징은 헌법 및 주요 제도의 잦은 개정이다. 2019년 4월 헌법 개정에 ‘국가를 대표하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그리고 2021년 1월 8차 당 대표자회의는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했다.²⁴³⁾ 이 와중에 비서국은 정무국이라는 명칭으로 개편됐다.

잦은 공식 명칭과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이다. 권력의 원천은 조정이며 조정의 핵심은 공동지식이라는 연구의 전제에 일치하는 행위이다. 얼핏 사소해 보이는 헌법의 주기적 변경은 엘리트와 주민 모두를 절대복종의 조정 균형에 묶어두고자 하는 김정은의 필사적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241) 위의 글, p. 83.

242)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5.8.

243)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결정서: 조선로동당 총비서 선거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1.11.

이제 계승 초기 준파벌의 정치적 위협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판단한 김정은은 헌법 개정뿐만 아니라 핵심 권력기구마저 급진적으로 재편해버렸다. 헌법 개정만큼이나 정부조직 변경은 반대의 공동지식을 유발하는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1964년 소련 총서기장 흐루시초프의 실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의 무분별한 정부 조직 개편은 모두의 공분을 한꺼번에 불러일으켰다.²⁴⁴⁾ 최근 들어 김정은은 해당 간부들이 조직의 비리와 일탈을 속였다는 이유로 수령의 핵심 무력인 호위사령부를 다수의 조직으로 분할해버렸다.²⁴⁵⁾ 정치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중간간부를 비롯한 조직 구성원 모두의 미래를 흔들며 버리는 조치이다. 승진과 출세의 전망을 어둡게 하여 중간 간부의 불만을 키울 수 있다. 중앙·지방정부 제도를 함부로 없애고 신설하다 권력을 잃은 소련의 총서기장 흐루시초프와 김정은의 차이는 절대권력의 정도에 있다.

북한 헌법이 절대권력의 공동지식을 공식화하면서 이에 걸맞은 변화가 뒤를 이었다. 2016년 이후 조선노동당의 회의체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²⁴⁶⁾ 절대권력을 가진 자가 회의를 싫어하는 일반적 경향에 일치하는 사태 전개이다. 결국 계승 초기 보여주었던 노동당의 외양적 복원마저 필요하지 않는 김정은의 자신감의 반명이라 평가할 수 있다.

김정은의 절대권력에 대한 명문화는 김정은의 정세 판단과 맞물려 있다. 2016년 7차 대회에서 한 김정은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244) 한병진, “독재의 권력투쟁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 소련, 중국, 이라크, 시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pp. 57~59.

245) “김정은 호위 수장 불륜에 격분… ‘서로 감시’ 경호팀 4개로 쪼갬다,” 『조선일보』, 2021. 2. 12.,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02/YQF75YSIZCMHLHP2FMCPHILAA/> (검색일: 2021. 9. 17.).

246) 박형중, “권력세습과 통치연합 재편,”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p. 100.

보고는 당에 대한 수령의 압도적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사업총화보고 아주 후반부에 배치된 당사업 보고는 “조선로동당은 당 건설과 당 활동에서 수령의 령도적 권위를 절대화하고 결사옹위하는 것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갔으며 그에 배치되는 현상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 확고히 보장되도록” 했다고 평가한다. “현대판 종파분자들을 제때 단호히 적발 숙청”한 점을 자랑스럽게 보고하고 있다. 보고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세우기 위한 과감한 투쟁을 북한 특유의 과장된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²⁴⁷⁾ 이렇게 준파벌의 잠재적 도전에 대한 걱정을 뒤로하고 절대적 개인독재로의 짧은 주기가 마무리됐다.

마. 김정은 집권 초기 엘리트의 전략적 상호작용: 오만과 오판의 죄수의 딜레마

세습 독재자의 경우 숙청의 그림자가 상대적으로 짧다. 신생 독재자는 일단 권력을 잡기 위해 거대한 승리연합을 만들어야 할 정치적 필요가 상당하다. 신생 독재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는 권력의 일인자로 올라서기 위해 자신이 의지했던 다양한 파벌을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한다.²⁴⁸⁾ 이에 반해 세습 독재자는 개인 우상화의 공동 지식과 절대권력의 개인독재로 조정된 소규모의 지배연합을 물려받았다. 이러한 전략적 이점으로 인해 세습 독재자는 신생 독재자보다 더 압축적이고 신속하게 숙청을 진행할 수 있다. 속도의 차이가 뚜렷하다.

세습의 이점과 함께 엘리트의 오만과 오판이 김정은의 빠른 성공

247)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5.8.

248) 한병진, “독재의 권력투쟁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 소련, 중국, 이라크, 시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pp. 43~44.

에 한몫했다. 계승 초기에 노동당의 외양적 복원으로 대표되는 위장술을 통해 엘리트층을 방심하게 만든 김정은의 성공과 대조적으로 북한 핵심 엘리트는 서로를 몰고 무는 투쟁을 벌였다. 협력은 전혀 없었다. 사후적으로 평가하면 젊은 김정은의 권력욕에 대한 엘리트의 과소평가이며 새로운 정치질서를 시도하기 좋은 계승기의 골든타임을 놓친 엘리트의 자멸이다. 북한 전문가의 분석은 엘리트의 자멸 과정을 잘 요약해주고 있다. 리영호 숙청이 있고 뒤이어 조직지도부의 조연준과 국가안전보위부의 김원홍 부장이 장성택의 숙청을 주도했다. 그리고 2016년 김원홍 부장을 당 조직지도부가 검열했다. 이에 앞서 2014년 5월에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황병서와 김원홍 부장이 당시 총정치국장인 최룡해를 해임하고 황병서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다시 2016년 최룡해는 당 중앙위 부위원장으로 복귀하였고 김원홍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황병서가 2018년 9월 제한적이나마 복권되면서 최룡해가 견제당했다.²⁴⁹⁾ 이렇듯 협력은 커녕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수전으로 김정은의 엘리트는 일관했다. 당연히 젊은 수령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집합적 도전도 불가능했다.

엘리트의 협력 실패에는 구원과 장성택의 오만이 큰 역할을 했다. 구원의 깊은 뿌리는 이미 많은 부분 김정일 총비서의 의도대로 심어졌다. 대표적으로 장성택의 당 행정부와 당 조직지도부의 갈등이다. 1995년 선군정치를 시작으로 당이 쇠퇴하면서 조직지도부로부터 행정부가 분리되고 장성택이 행정부장이 된다. 결국 장성택과 행정부의 위상이 리제강의 조직지도부를 능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다고 수령의 전통적 핵심 보위조직인 조직지도부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장성택의 세 번째 혁명화 조치의 이유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위반, 아랫사람들을 모으는 장성택의 개인적 실수 등이 거론된다. 주

249) 박형중, “권력세습과 통치연합 재편,” pp. 78~79.

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장성택의 오만과 실수를 놓치지 않은 리제강이 이끄는 조직지도부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장성택의 사람들은 분산 배치되고, 일부는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는 등 장성택은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²⁵⁰⁾ 이로써 조직지도부와 행정부의 역사적 양금이 북한 정치 내부에 깊숙이 내려앉았다.

그렇지만 곧 장성택은 김정일 와병 중에 재기에 성공했다. 김정은의 후계를 2009년 1월 8일(김정일의 생일) 소수의 측근에게 발표한 김정일은 뒤이어 2010년 9월 27일 자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김정은, 김경희, 최룡해, 현영철, 최부일,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을 인민군 대장으로 임명했다. 이보다 몇 달 앞선 2010년 6월 12기 3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장성택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김정일이 군부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느낄 수 있는 인사였다. 김정일에 의해 김정은의 후견인의 역할이 주어지자 장성택은 과감하게 선을 넘어버렸다. 김정일이 생사를 오가는 와중인 2009년 그는 당 행정부장으로 지방당을 공식적으로 순시했다. 이 외에도 수령제의 금기사항을 다수 위반해버렸다.²⁵¹⁾ 특히 2010년 들어 몇 가지 우연이 장성택의 오만과 착각을 부추겼다. 장성택의 천적인 당 조직지도부의 수장들이 몇 달을 사이에 두고 연속적으로 사망했다. 당 조직지도부 군사 담당 제1부부장 리용철이 2010년 4월 지병으로 사망했다. 그해 6월 교통사고로 장성택의 최대 숙적이었던 리제강이 사망했고, 후임 박정순 역시 2011년 1월 병사했다. 조직지도부 전체의 불운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분할통치를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당 행정부의 정성택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지만 국가안전

250) 라종일, 『장성택의 길: 신정神政의 불온한 경계인』, pp. 205~208.

251) 위의 책, pp. 235~236.

보위부, 인민보안부,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등 감시통제 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안전보위부는 장성택의 어떠한 영향력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김정은 시대 국가안전보위부의 김원홍 부장이 장성택의 몰락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전임 수장 우동측을 죽음으로 내몬 장성택 개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행정부와 군의 갈등 및 행정부와 조직지도부의 다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이다.²⁵²⁾

김정일의 분할통치술의 결과 어떤 세력도 압도적 힘의 우위를 가질 수 없었다. 이는 집합적 도전을 위한 엘리트의 조정에 아주 불리한 상황이다. 남로당파, 소련파, 연안파가 엇비슷한 세력을 가진 상황과 유사하다. 이런 세력의 배분 상태는 한쪽으로 힘을 모으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김정일의 와병 이후 급부상한 장성택은 협력과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는 북한의 모든 주요 권력기구인 군부, 국가안전보위부, 당 조직지도부와 심각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그의 권력자산은 막대했지만 제한적이었다. 당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사법, 검찰, 인민보안부 등 공안기구와 도 및 군 단위까지 설치한 행정부 조직이 장성택의 핵심 기반이었다. 그는 건설 및 외화벌이 사업, 경제특구, 외국인 투자 등을 관리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지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다른 경쟁세력을 압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권력 계승기 북한에는 장성택을 견제하는 세력이 굳건했다. 행정부와 이권 다툼을 벌인 군부를 비롯해서 국가안전부 제1부부장 우동측과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연준, 황병서, 김원홍 등 당시 실세들이 장성택에 맞서고 있었다.²⁵³⁾

252) 위의 책, p. 240.

253) 위의 책, p. 245.

김정은 초기 숙청 과정에서 장성택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장성택의 결정적 실책은 구원을 뒤로 하고 주요 파벌 엘리트와 협력을 달성하지 못한 정치적 어리석음이었다. 그의 이러한 선택 덕분에 북한 엘리트는 협력 대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툼을 이어갔다. 장성택의 오만과 과욕에 과거의 원한과 현재의 이권 다툼이 뒤섞이면서 김정은의 이이제이는 어렵지 않았다.

이제 개인독재로 가는 숙청의 역사가 그러하듯 이런 저런 사적 이해관계와 인식의 편향으로 독재자의 칼춤을 적극적으로 막아 나서지 않은 다양한 군상의 엘리트가 자기 목을 바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기서 장성택이 정점을 찍었다. 라종일의 묘사에 따르면 자금관리에 따른 갈등에서 선을 넘어서는 부하의 처신이 장성택 숙청의 발단이 됐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리제강의 대표적 인맥인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게 장성택을 검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구원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조연준을 도운 이가 바로 국가안전보위부의 김원홍이었다.²⁵⁴⁾

장성택 숙청 방식에서 김정은이 자신의 절대권력이 완성되었음을 헌법 수정 이전에 실제적으로 모두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뚜렷이 엿보인다. 장성택과 그의 부하의 숙청은 절대권력의 공개적 시연이었다. 2013년 11월 강건 군관학교 연병장에서 장성택의 측근인 리룡하와 장수길에 대한 사형 판결문 낭독 직후 그들은 고사 기관총과 화염방사기에 문자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수백 명의 당정군 간부들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²⁵⁵⁾ 그리고 12월 8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이 잡혀가는 모습이 TV로 보도됐다. 12

254) 위의 책, pp. 260~262.

255) 라종일이 자문인의 증언에 기반하여 상세히 묘사한 부분에 의거하고 있음을 밝힌다. 위의 책, pp. 264~266.

일에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장성택이 재판정에 들어선 모습이 신문에 실렸다. 이 모든 이례적 공개성은 절대권력에 대한 확실한 공동지식을 만들었다. 라종일은 장성택의 과도하게 연출된 처벌과 숙청을 “부처의 이익 갈등이 아닌 (김정은의) 권력을 모든 권력의 유일한 근원으로 세우는 문제”로 평가한다.²⁵⁶⁾ 이 평가처럼 국내외 만방에 공개된 장성택의 숙청은 김정은의 절대권력에 대한 더 이상의 불확실성을 남기지 않았다.

세습 이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김정은은 충성파로 지배연합을 재구축하기 위한 술책을 모두 사용한다. 숙청, 무차별적 자리 이동, 포섭이다.²⁵⁷⁾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60명 정도가 숙청됐다. 오경섭의 구분과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2012년에서 2016년을 거치면서 과반을 훌쩍 넘을 정도로 신진 인사가 지배연합에 진입했다.²⁵⁸⁾ 운 좋게 살아남은 자들의 자리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예를 들어 최룡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오진우의 자식들처럼 지배엘리트의 핵심들 다수가 자주 혁명화 조치를 받았다.

포섭의 전략은 주로 새로운 젊은 충성파를 충원하는 쪽에서 발견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3년에는 당세포와 세포비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²⁵⁹⁾ 2014년 들어 김정은이 당세포와의 접촉 빈도를 높이고 당세포비서 대회를 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전쟁 당시 김일성의 대중

256) 위의 책, pp. 242~243.

257) Bruce Bueno de Mesquita and 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Mahdavi Paasha and John Ishiyama, “Dynamics of the Inner Elite in Dictatorships: Evidence from North Korea,” *Comparative Politics*, vol. 52, no. 2 (2020), pp. 221~249.

258)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p. 167.

259)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대화연설분석』, p. 55.

당 노선을 연상시킨다. 허가이의 엘리트당 노선을 단호하게 막고 나선 김일성은 당원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승자의 편에 서고자 하는 조정의 이해가 압도적인 독재에서 새로운 신진세력은 당연히 대세를 열렬히 따르는 선택을 한다. 네트워크 효과이다.²⁶⁰⁾ 이는 현 독재자와 다른 엘리트 사이의 힘의 차이를 더욱 벌린다.²⁶¹⁾

요약하면 오랜 외국 생활에서 돌아온 젊은 세습 독재자와 노동당의 외양적 복원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엘리트는 김정일의 와병과 선군정치의 혼란기를 틈타 구축한 자신의 세력을 과신하고 수령제에서 수령이 누리는 조정권력을 과소평가했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수평적 협력을 통해 수령을 견제할 시도는 전혀 하지 못하고 수령의 호의를 등에 업고 혹은 수령을 포섭해서 정적을 처리하는데 몰두하면서 집합적으로 자멸하고 만다. 엘리트의 오만과 오판이었다.

260) 한병진, 『독재의 법칙: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탐욕과 배신의 정치사』, pp. 133~136.

261) 필자의 설명은 지배연합 후보집단을 늘리면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선택권 집단이론 (theory of selectorate)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Bruce Bueno de Mesquita et al.,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IT Press, 2003), pp. 77~103.

2. 이중적 인민 정책

모든 독재정권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권력을 안정시킬 수 있다. 독재정권은 인민들이 정권을 열렬히 지지하든지, 단순히 억압에 반응하든지 간에 인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한 생존할 수 있다. 정권에 대한 인민의 지지가 부족하면, 반대운동이 활발해진다.²⁶²⁾ 독재정권에서 독재자 사망 이후에 민주화 시위가 발생할 경우, 정권 교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안드레아 켄달-테일러(Andrea Kendall-Taylor)와 에리카 프란츠(Erica Frantz)는 독재자 사망으로 5년 내에 민주정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24%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²⁶³⁾ 그러나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후 정권 교체 가능성은 90%가 넘었고,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생한 국가의 50%는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실현했다.²⁶⁴⁾ 독재정권의 생존에는 대중의 지지와 분열되거나 약한 반대운동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²⁶⁵⁾ 독재정권은 생존을 위해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반대운동을 막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실행한다.

독재정권의 인민 정책은 이중적이다. 독재정권은 모든 인민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지지자들에게는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민들이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동인은 독재정권이 제공하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이다.²⁶⁶⁾ 지지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독재

262) Natasha M. Ezrow and Erica Frantz, *Dictators and Dictatorships: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s*, (New York: Bloomsbury, 2011), p. 55.

263) Andrea Kendall-Taylor, Erica Frantz, "When Dictators Die.", p. 165.

264) *Ibid.*, p. 165.

265) Natasha M. Ezrow and Erica Frantz, *Dictators and Dictatorships: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s*, pp. 55~58.

266) Ronald Wintrobe,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1st e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 4; Natasha M. Ezrow and Erica

정권에서 통치의 핵심이다. 독재정권은 지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 자원을 확보한다.²⁶⁷⁾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철저하게 억압하거나 세금을 부과한다.²⁶⁸⁾ 독재정권이 정치적 반대에 관용을 베풀 경우, 정권의 불안정이 심화하기 때문이다. 강압적인 독재정권은 시민단체를 허용하지 않고, 인민들의 정치·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불허한다.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면,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시위대를 향해 발포한다. 인민들이 독재정권을 반대하더라도, 반대 의사를 시위의 형태로 표출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한다.

권력승계 직후에 김정은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는 취약했다. 북한 인민들은 2009년부터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권력세습 이후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는 김정은에 대한 인민들의 반대를 막고, 인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었다. 김정은 정권이 인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권의 불안정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권력승계 직후부터 인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을 실행했다.

김정은 정권의 인민정책은 이중적이었다. 지지자들에게는 관대하고, 반대자들은 강력하게 억압·통제한다. 김정은 정권이 제시한 인민사랑과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지지자들을 향한 정책이다. 반면에

Frantz, *Dictators and Dictatorships: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s*, pp. 55~56.

267) Bruce Bueno De Mesquita, et al.,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Massachusetts: The MIT Press, 2005), p. 26;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quita, 알라스케어 스미스 지음, 이미숙 옮김, 『독재자의 핸드북』, p. 70, p. 144.

268) Ronald Wintrobe,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1st edition*, p. 4; Natasha M. Ezrow, Erica Frantz, *Dictators and Dictatorships: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s*, pp. 55~56.

적대 계층이거나 정권 위협 세력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감시·억압한다. 김정은 정권의 인민정책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정권 이후 발전한 이중적 인민정책을 실행하는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을 활용했다. 북한 정권이 인민정책을 실행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인민들을 지지자와 반대자로 구분해서 이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 김정은 정권은 기존 제도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민들의 반대를 억압하고,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을 실행했다.

둘째, 김정은 정권은 인민들에게서 김정은의 권위와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한 정책을 실행했다.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권위와 정통성의 확립은 중요한 과제였다. 김정은의 권위는 인민들이 김정은의 권위가 존재한다고 믿고, 그 권위가 적절하게 활용될 때 확립된다. 김정은의 정통성은 인민들이 김정은이 권위를 보유하고, 그 권위를 적절히 활용한다고 생각할 때 만들어진다.²⁶⁹⁾ 김정은 정권은 권력 세습 초기에 김정은의 권위와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행했다.

셋째, 김정은 정권은 인민중시정책을 표방했다. 인민중시는 권력 세습 초기부터 시종일관 강조됐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10년 동안 인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 김정은 정권의 인민중시정책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발전했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2월 제4차 당세포비서 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시했고, 2016년 제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규정했다.

김정은 정권의 이중적 인민정책은 김정은 정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 조선노동당이 80년 이상 통치하면서 제도화한 것

269) 필립스 쉬블리 지음, 김계동 외 옮김, 『정치학 개론: 권력과 선택』, (서울: 명인문화사, 2017), p. 17.

이다. 김정은 정권은 조선노동당이 구축한 이중적 인민정책의 제도와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김정은의 권위와 정통성을 확립하고, 인민중시정책을 실행했다. 김정은 정권은 지지자들의 지지를 결집하고, 반대자들을 억압하면서 정권을 안정시켰다. 이하에서는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실시한 이중적 인민정책을 기존 제도와 시스템 활용, 김정은의 권위와 정통성 확립, 인민중시정책으로 구분해서 분석한다.

가. 기존의 인민 통제 시스템 활용

독재정권이 인민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지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자들을 억압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지지자들이 받는 인센티브는 정부의 성과에 대한 배분과 같은 재정적인 것부터 신변의 안전보장까지 포괄한다. 지지자들이 얻는 이익은 보조금, 현금 지원, 공공재, 주택, 의료서비스, 직업 등이다. 반면에 반대자들에게는 이익을 배분하지 않거나 강력하게 처벌한다. 많은 독재정권은 정권에 반대하려는 의욕을 꺾기 위해서 억압을 사용한다.²⁷⁰⁾ 강력한 억압은 인민들의 정치적 반대를 막는 확실한 방법이다.

북한은 80여 년에 걸친 조선노동당의 통치를 통해서 지지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반대자들에 대한 억압시스템을 제도화했다. 북한 정권은 인민들을 지지자들과 반대자들로 분류했다. 김일성 정권은 1956년 반종파 투쟁이 끝난 후 당·정·군의 주요 기관과 지방 등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잠재적 위협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주민성분조사사업을 실시했다.²⁷¹⁾ 주민성분조사사업은 인민들을 김일성 정권

270) Milan W. Svob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 124; Natasha M. Ezrow and Erica Frantz, *Dictators and Dictatorships: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s*, p. 56.

271) 오경섭, “북한 전체주의 사회통제와 체제 내구성” 『세종정책연구』 5권 2호, (성남:

에 대한 지지자와 반대자로 구분했다.

주민성분조사사업은 1956년 반종파 투쟁이 끝난 후인 1958년 중앙당집중지도사업으로 시작됐다. 중앙당집중지도사업은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 남로당파·소련파·연안파와 관련이 있는 주민들과 그 가족들을 적발해서 숙청했다. 1958년 12월부터 1960년 12월 사이에는 월남자 가족, 치안대원 출신과 가족, 지주 등 자산계급, 일제 부역자, 종파분자 가족 등을 색출해서 숙청했다. 주민재등록사업은 1966년 4월부터 1967년 3월까지 진행했다. 북한 정권은 직계 3대와 처가·외가 6촌까지 내사해서 주민들의 성분을 분류했다. 주민성분분류사업은 1967년 4월부터 1970년 6월까지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을 기준으로 전 주민을 핵심 계층(약 28%), 적대 계층(약 45%), 동요 계층(약 27%)의 3계층 51개 부류로 구분했다. 북한 주민들은 출신성분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았다.²⁷²⁾ 김일성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인 적대 계층은 약 320만 명이었다. 적대 계층에서 인민재판으로 6천 명이 처형됐다. 또한 ‘내각결정 149호’는 적대분자와 반혁명분자로 규정된 1만5,000세대 약 7만여 명을 산간벽지의 149호 대상 지역에 강제 이주시켜 격리했다.²⁷³⁾

김일성 정권에서 도입한 출신성분은 김정은 정권까지 유지되면서 인민들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출신성분은 당원 선발, 입대, 당과 내각의 신입 간부 채용, 승진 등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지지자 집단인 핵심 계층은 출신성분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

세종연구소, 2019), p. 237.

272)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9』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138~140; 내외통신사,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사회』, (서울: 내외통신사 부설 북한문제연구소, 1995), p. 141., 재인용: 오경섭, “북한 전체주의 사회통제와 체제 내구성,” p. 237.

273) 박완신, “북한의 인권과 정치범수용소 실상,” 『통일로』, 56호, (안보문제연구원, 1993), p. 87., 재인용: 오경섭, “북한 전체주의 사회통제와 체제 내구성,” p. 237.

고, 반대자 집단인 적대 계층은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다. 핵심 계층에 속하는 북한 주민들은 당원 선발, 입대, 당과 내각의 신입 간부 채용, 승진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우대를 받았다.

당과 내각의 신입 간부들은 출신성분, 김정은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조선노동당은 대학 졸업생 중에서 당원을 선발하는데, 사회 성분(군 복무자나 노동자 출신 우대), 학업성적, 사상 동향, 대학 생활 등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이들의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는 학생들을 최종 인사 대상으로 결정한다. 사상 동향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대학 학생 간부와와의 신원확인에서 탈락한다. 신입 간부 선발 과정에서 우대받는 학생들은 당원과 사회 성분(군 복무자나 노동자 출신)이 우수한 학생들이다.²⁷⁴⁾

북한의 기관, 공장·기업소, 협동농장에서 승진은 출신성분에 따라 달라진다. 조선노동당은 「당 방침에 맞게 기층간부 선발사업을 집행할 때 대하여」라는 지시문을 통해서 성분별 승진 상한선을 정한다. 적대 계층 중에서 6·25 당시 포로 귀환자는 협동농장, 기관·기업소의 작업반장까지, 신민당 가입자는 4급 기업소 행정일꾼까지 가능하다. 이들은 성분 기준으로 볼 때, 입당이 어렵다. 그러나 현장에서 공로를 인정받으면 화선입당을 할 수 있고, 당세포비서를 맡을 수 있다. 승진 제한 기준은 본인의 직계 준비속까지 해당하고, 2대를 넘어가면 승진한계선도 상향조정된다. 예컨대 신민당 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손자 대에 이르면 2급 기업소 부지배인까지 승진할 수 있다.²⁷⁵⁾

북한 주민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인 외교관은 선발 과정에서 핵심 계층 자녀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외교관 양성 중등교

274) 최진욱, 『현대북한행정론』 (서울: 인간사랑, 2002), pp. 212~215.

275) 내외통신사,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사회』, p. 142.

육기관인 평양외국어학원에는 설립 초기에 혁명유자녀, 영웅 칭호 수여자, 영예군인 자녀 중에서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입학했고, 점차 입학 대상이 줄어들면서 1965년부터 간부 자녀들의 입학을 허용했다. 평양외국어학원 입학시험에는 핵심 계층 자녀들만 응시할 수 있다. 지역별 응시자 할당도 평양이 가장 많다. 평양에서도 중앙당 간부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인민학교의 경우 하급 간부 자녀들은 응시 자격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²⁷⁶⁾ 출신성분이 나쁘면, 외교관을 양성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어렵고, 외교관에 채용되기 어렵다.

북한 정권은 당과 내각의 승진 심사에서 김정은과 당에 대한 충실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외교관 승진 인사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사회성분·가정환경, 사회 정치 생활 경위를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하고, 근무연한·학력·경력·업무실적·도덕성을 평가한다. 대부분 승진 대상자들은 핵심 계층이고 당원이다. 이들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령과 당에 대한 충성심과 사회 성분이다. 사회 성분이 사무(대학생) 출신인 외교관들보다 제대군인 출신과 노동자 출신 외교관들의 승진이 더 빠르다.²⁷⁷⁾

북한 주민들은 국내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해외파견 노동을 선호한다. 해외파견 노동자도 당성과 출신성분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해외파견 노동자 선발은 당 위원회를 통해서 소수 당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당성과 사상, 출신성분 등이 우수한 사람들만 선발된다. 해외파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6촌 이내에 정치범·경제사범이 있는 경우, 출국 전 5년간 정치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5년간 거주지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이다. 당 위원회는 대상자의 가족관계·토대, 범죄 여부, 군사복무

276) 김진하 외,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p. 59~60.

277) 위의 책, pp. 62~71.

의 충실성, 수령에 대한 충실성 등을 검열한다.²⁷⁸⁾ 해외파견 노동자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외로 나갈 수 없다.

북한은 정치적 반대를 막기 위해서 인민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반대자들을 잔혹하게 처벌한다. 감시체계는 촘촘하게 구축됐다. 조선노동당은 당원들과 비당원들의 사상 동향을 감시해서 상급 당 조직에 보고한다. 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보위사령부 등 감시·억압기구들은 반체제·반정부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해서 처벌한다. 감시·억압기구들은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부터 지방당 간부들까지 전화를 도청·감청하고, 필요할 경우 미행을 하면서 감시한다.²⁷⁹⁾ 예컨대 외무성에서는 당 내부규율을 통해서 간부들을 감시·통제한다. 당 조직은 모든 간부와 당원들의 일거일동을 보고받았다. 외무성 국장급은 개인의 일정을 하루 전에 당 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고, 외무성 당 위원회는 부상급 이상 고위 간부의 구체적 행적을 매일 중앙당 조직부에 보고했다.²⁸⁰⁾

김정은 정권은 반대자들을 잔혹하게 처벌했다. 김정은은 리영호 군 총참모장을 처형했다. 리영호가 사석에서 김정은을 비판한 것이 도청에 걸렸다. 리영호는 “장군님(김정일)은 개혁개방을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 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²⁸¹⁾ 은하수관 현악단은 단장을 포함한 8명이 처형됐다. 단원들이 은하수관현악단 출신인 리설주에 대해 수군거리는 얘기가 보위부에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의 위상을 흔들 수 있는 리설주에

278) 이상신·오경섭·임예준,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p. 43~47.

279) 황장엽, 『황장엽 비록 공개: 어둠의 편이 된 햇별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1), pp. 68~73.

280)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태영호 증언』 (서울: 기파랑, 2018), p. 308.

281) 위의 책, p. 309.

대한 나쁜 소문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원들을 처형했다.²⁸²⁾

장성택과 당 행정부 간부들은 국가전복음모죄로 처형됐다. 장성택이 담당하던 당 행정부, 군부 54부, 보안성 9국, 보안성 산하 공병총국 간부들은 대대적으로 숙청됐다. 당 행정부 부부장과 과장급 15명이 총살됐고, 400여 명이 숙청됐다. 과장 이하 성원들은 모두 가족들과 함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됐다. 군부 54부도 300여 명 정도가 쫓겨났다.²⁸³⁾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을 거치며 구축된 전체주의 사회통제 체제를 통해서 반대자들을 강력하게 억압하고 처벌한다.²⁸⁴⁾ 북한 인민들은 강력한 억압으로 인해서 정권에 대한 불만이나 정치적 반대를 표현하지 못한다.

김정은 정권은 인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서 인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비사회주의의 현상도 확산하고 있다. 김정은이 제시한 사회적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난에 따른 불평불만,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현상 만연,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새 세대들의 사상 정신 상태의 심각한 변화, 계층간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부정부패 확산으로 인한 불만, 당국의 농민에 대한 분배 몫 불이행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 등이다.²⁸⁵⁾

김정은 정권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의 현상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했다. 2019년 12월 당 전원회의와 2021년 1월 당대회와 2월 당 전원회의에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을 단일 의제로 논의했고,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에 대응한 투쟁을 촉구했다. 김정은 정권은 “사회주의를 지키자”는 슬로건을 걸고, 인민 통제의 명분으로 삼았다. 당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로

282) 위의 책, p. 316.

283) 위의 책, pp. 332~333.

284) 오경섭, “북한 전체주의 사회통제와 체제 내구성”, p. 219.

285) 한기범, “김정은 인민시책 평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9.25.)

규정해서 통제했다. 비사회주의 단속 그루빠는 남한풍, 외부 문화 유입, 각종 상행위, 사회주의 이념에 반한 행위 등을 단속했다.²⁸⁶⁾

최근에는 청년층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0년 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됐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남한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유포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한국의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직접 보고 듣거나 보관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미국·일본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해당 국가의 문화 등이 반영된 미디어를 유입·유포할 경우 최소 노동교화형 10년, 최대 사형에 처한다.²⁸⁷⁾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북한 인민들이 한국·미국·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들의 영상이나 도서를 볼 수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한다. 북한 인민들이 자본주의사회의 정보를 접할 경우, 반체제·반정부 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들이 자본주의사회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 체제와 정권에 비판적 생각을 가질 위험이 있다. 김정은 정권은 청년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를 조직·운영하면서 외부 정보의 유입·유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²⁸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9월 28일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했다. 「청년교양보장법」은 청년층에 대한 사

286) 이철, “김정은 집권 10년 통치전략, 인민정책, 인민통제 평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9.25.); 한기범, “김정은 인민시책 평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9.25.)

287) “북한판 ‘연좌제’... “南 콘텐츠 유입·유포자 가족 정치범수용소行”, 『DAILY NK』, 2021.9.16.,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d%8c%90-%ec%97%b0%ec%a2%8c%ec%a0%9c-%e5%8d%97-%ec%bd%98%ed%85%90%ec%b8%a0-%ec%9c%a0%ec%9e%85%2%b7%ec%9c%a0%ed%8f%ac%ec%9e%90-%ea%b0%80%ec%a1%b1-%ec%a0%95%ec%b9%98/>> (검색일: 2021.9.20.).

288) 위의 글.

상통제체계를 확립하고, 청년층들이 외부의 자본주의 문화와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²⁸⁹⁾ 북한 사회에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청년층에 대한 사상 통제가 김정은 정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10년 동안 인민 통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중적 인민정책을 실행했다. 지지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반대자들은 억압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했다. 김정은 정권이 기존의 인민 통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인민들과 청년들에 의한 정치적 반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 김정은의 권위와 정통성 확립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의 권력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의 권위와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권력의 미란다(Miranda)와 크리덴다(Credenda)를 활용했다. 미란다는 권력에 대한 찬미이고, 크리덴다는 권력에 대한 신뢰이다. 이 둘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됐다. 지배자는 자기의 명령이나 지도를 받아들이도록 피지배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성적·정서적인 반응을 재생산한다.

미란다는 상징조작을 통해서 권력을 신비롭고 성스럽고 웅대하고 감탄할 만한 것으로 신성화하고 미화하는 행위다. 대표적인 상징 유형은 기념일과 기념 기간, 공공광장과 기념관, 음악과 노래, 깃발·훈장·조상(彫像)·제복, 일화(逸話)와 역사, 교묘한 성격의 의견, 시위행진·옹변·음악을 동원한 대중시위 등이다. 독재정권은 권력을 미화하기 위해 정치적 상징조작을 진행해서 피지배자의 복종을

289) 김일기, “김정은 집권 10년 인민정책과 인민 통제,”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 9. 25.)

끌어낸다.²⁹⁰⁾

크리텐다는 권력을 정당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서 그 존속에 동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정당화·합리화하는 행위다. 크리텐다는 지성인들이 권위의 지속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하는 이유를 담고 있다. 권력 집단의 공통적인 크리텐다의 규범은 정부에 대한 존경, 복종, 희생, 합법성의 독점이다. 피지배자들은 권력의 존속에 동의한다.²⁹¹⁾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의 권위와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권력의 미란다와 크리텐다를 활용했다. 김정은 정권은 권력세습 이후 권력의 미란다와 크리텐다를 정교하게 실행했다. 첫째,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와 정통성을 이용해서 김정은의 권위와 정통성을 확립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위와 정통성은 김정은의 권위와 정통성의 기반이었다. 김정은의 권위와 정통성은 김일성 가문의 후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백두혈통이라는 상징에서 찾았다.

2012년 이후 당의 공식회의에서 김정은 명의로 발표한 공식 문서를 텍스트마이닝으로 분석한 결과, 권력세습 직후인 2012~2015년 사이에 ‘김정일애국주의’, ‘유훈’ 등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특정 문서에서 개별단어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TF-IDF 분석에서는 ‘아버이’, ‘김정일’, ‘영웅’, ‘백두’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²⁹²⁾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신년사에서 우리 당과 혁명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시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당 활동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백두의 행군정신, 계속혁명의 정신으로 철저히 일관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

290) C. E. 메리안 지음, 신복용 옮김, 『정치발전론』, (서울: 청아출판사, 1987), pp. 134~135.

291) 위의 책, p. 143, p. 153.

292)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대화·연설 분석』, pp. 51~58.

다.²⁹³⁾ 김정일 유훈 관철도 강조했다. 2012년 신년사에서는 김정일의 유훈 관철을 요구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은 곧 위대한 김정일동지이다”라고 강조했다.²⁹⁴⁾ 김정은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김정일과 김정은을 일체화시켰다.

김정일의 혁명업적과 유훈은 영원히 고수해야 할 생명선, 혁명의 만년재로 규정됐다. 인민들에게는 김정일 유훈 관철을 위해서 대를 이어 김정은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고, 김정은을 결사옹위할 것을 요구했다.²⁹⁵⁾ 김정은은 2012년 1월 24일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했다. 북한은 만경대혁명학원에 백두산 3대 장군의 불멸의 업적이 어려 있다고 강조했다.²⁹⁶⁾ 또한 2015년 2월 19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김정일 유훈 관철을 제1차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관철할 것을 요구했다.²⁹⁷⁾

김정은 정권은 권력세습 초기에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을 잇는 백두혈통의 후계자라는 것을 강조했다. 김정은은 백두혈통의 후계자로서 김일성·김정일의 권위와 정통성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했다. 김일성 따라하기는 신격화된 김일성의 권위와 정통성을 활용해서 김정은의 권위와 정통성을 세우려는 의도로 기획한 상징조작이었다. 김정은은 김일성을 닮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김일

293)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2.1.1.

294) 위의 글.

295)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2.1.1.;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을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대화,” 『로동신문』, 2012.8.3.

296) “김정은 동지께서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시고 교직원, 학생들을 축하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12.1.24.

297)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됐다,” 『로동신문』, 2015.2.19.

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향수를 자극해서 김정은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를 유도했다. 김정은은 손뼉 치는 방식, 걸음걸이, 살찐 배, 겹으로 여미는 코트, 짧게 자른 옆머리, 이중 턱 등 행동·외모·복장 등에서 김일성을 따라 했다.²⁹⁸⁾

둘째, 김정은이 친인민적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했다. 김정은이 2008년 12월 후계자로 내정되기 전까지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존재를 몰랐다. 김정은은 2011년까지 거의 3년간 후계자수업을 거쳐 김정일의 권력을 물려받았다. 김정은 정권의 과제는 친인민적 이미지 구축을 통해서 인민들이 김정은을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김정은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민 생활과 관련한 건설사업을 진행했고, 인민들과 활발하게 접촉했다.

인민 생활과 관련한 건설사업에 대한 현지 지도는 <표 III-2>와 같다. 현지 지도 장소는 주로 평양이었다. 김정은 정권 유지에 평양 시민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2012년 창전거리, 2013년 은하과학자거리, 2015년 위성과학자거리와 미래과학자 거리에 살림집 건설을 진행했다. 또한 김정은은 옥류 아동병원, 류경 구강병원, 교육자 살림집과 은하과학자 살림집 건설, 미림 승마 구락부, 능라유원지, 문수물놀이장, 마식령스키장 건설, 연풍과학자 휴양소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²⁹⁹⁾

298) "To Sell a New Leader, North Korea Finds a Mirror Is Handy," *The New York Times*, Feb.1, 2012 <<https://www.nytimes.com/2012/02/02/world/asia/packaging-of-kim-jong-un-in-north-korea.html>> (검색일: 2021.6.8.).

299)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pp. 73~74.

〈표 III-2〉 2012년 인민 생활 관련 건설사업 현지지도

일시	현지 지도 장소	비고
4월 26일	만수교고기상점	김정일 유훈, 준공식 참석
5월 1일	릉라인민유원지개발사업	공사 진행
	만경대유희장	김정은 집초 제거 장면 연출
5월 26일	개선청년공원유희장	5번째 방문
	창전거리 류경원·인민야외빙상장 건설 사업	
5월 28일	중앙동물원	
5월 31일	창전거리 아동백화점·살림집	
	창전거리 창전소학교·경상탁아소· 경상유치원	
7월 2일	릉라인민유원지·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7월 3일	평양양말공장·아동백화점	
7월 16일	경상유치원	
7월 25일	릉라인민유원지	
7월 26일	릉라인민유원지 준공식	
7월 27일	류경원·인민야외빙상장	
9월 1일	해맞이식당	
9월 5일	창전거리 살림집 방문	
9월 8일	통일거리운동센터	
10월 7일	만경대유희장·대성산유희장	
11월 4일	류경원·인민야외빙상장, 로라스케이트장	

출처: 노동신문 참조 필자 작성.

김정은은 인민들과 활발하게 접촉했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26일 김정일 정권에서 건설을 시작한 평양 만수교고기상점 준공식에 참석했고, 5월 1일 만경대유희장을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12년 9월 5일 김정은·리설주 부부가 평양 만수대지구 창전거리에 입주한 평양기계대학 교원, 노동자, 신혼부부 가정을 방문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했다고 보도했다.³⁰⁰⁾

셋째,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이 어리다는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300) “北 김정은은 부부, 평양 가정집 방문,” 『연합뉴스』, 2012.9.5., <<https://www.yna.co.kr/view/AKR20120905197000014>> (검색일: 2020.8.14.).

노력했다. 김정은이 권력을 세습했을 때는 28세에 불과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이 최고지도자가 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북한 주민들에게 최고지도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중후한 모습이 각인돼 있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이 후계자였을 때부터 김정은이 어리지 않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신문은 김기남 선전선동 담당 비서와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2011년 5월 김정일과 함께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은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했다. 김기남은 83세였고, 최태복은 82세였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권력승계 이후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공개 활동을 진행하는 사진을 노동신문에 자주 실었다.

넷째,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에 대한 인민들의 자발적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사상교육을 진행했다. 인민들이 김정은 정권을 자발적으로 지지할수록 충성도가 높고,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도 적다. 사상 교양은 인민들에 대한 교육과 간부·당원들에 대한 교육으로 나뉜다. 우선 인민들에 대한 교육은 수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김정은은 인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의 목표가 인민들에게서 수령에 대한 충성을 확립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한 결론에서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명약은 혁명전통교양, 충실성 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등 5대 교양사업이라고 강조했다.³⁰¹⁾ 5대 교양사업의 목적은 수령에 대한 인민들의 충실성 확립이었다.

또한 간부와 당원들에게는 인민사랑 실천을 교육했다. 사상 사업의 주 내용은 당의 애민 정신이었다. 당원들은 이민주천 사상을 고수

301) “열혈의 충신, 신념의 강자들을 키우기 위한 사상사업을 더욱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자.” 『로동신문』, 2021.6.16.

하며, 친인민적·친현실적으로 당 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³⁰²⁾ 당의 첫째가는 경계대상·투쟁대상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이므로, 당 조직들은 그 사소한 요소와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³⁰³⁾

다. 인민중시정책

김정은 정권은 2012년 권력세습 이후 인민중시정책을 실행했다. 인민중시정책의 목적은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2012년부터 2020년 1월까지 발표된 김정은의 정치 분야 담화·연설에서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³⁰⁴⁾ 조선노동당은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했다. 간부들과 당원들에게는 인민사랑과 인민에 대한 멸사 헌신을 요구했고, 인민들에게 신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³⁰⁵⁾

김정은 정권은 집권 10년 동안 주요 연설에서 인민중시 정치 담론을 반복적으로 제시했다.³⁰⁶⁾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

302) 오경섭·김진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3): 정치 분야,” pp. 2~3. (검색일: 2021.10.20.).

303) 위의 글, p. 4.

304)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p. 53.

305) “조선로동당 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2015.10.11.;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상임군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4.2.26.; “신년사,” 『로동신문』, 2013.1.1.

306) 한기범, “김정은 인민시책 평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9.25.). 2012~2021년까지 인민중시 정치 담론의 주요 내용은 한기범 서면 자문 참조함.

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라고 밝혔다.³⁰⁷⁾ 2015년 10월 10일 당창건 70돐 열병식 연설에서는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스승으로 여기며 인민은 당을 어머니와 같이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이야말로 조선의 참모습이며 선군혁명의 천하지대본입니다”고 강조했다.³⁰⁸⁾

인민대중제일주의는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제기했고,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제시했다. 제8차 당대회에서는 당 규약에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가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당의 기본 정치방식이라고 명문화했다.³⁰⁹⁾ 영도 사상의 중핵은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고 선언했다.³¹⁰⁾ 김정은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우라고 요구했다.³¹¹⁾ 당과 국가는 인민적·대중적인 것을 최우선시·절대시하고,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당의 인민중시·인민존중·인민사랑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대중을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멸사복무하는 충복이 될 것을 요구받았다.³¹²⁾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민생 보장을 목표로 정치·경제·사회·군사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됐다. 정치 분야는 주로 민생현안 대책,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 간부 혁명화 등 통제정책이었

307)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2012.4.16.

308) “조선로동당 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2015.10.11.

309) 오경섭·김진하,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분석(3): 정치 분야,” p. 2.

310) 위의 글, p. 2.

311) 위의 글, p. 2.

312)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5.8.

다. 경제 분야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정책은 인민 생활 안정·향상, 육아 정책 개선·강화, 평양시 1만 세대 건설, 검덕지구 등 주요 대상 건설 등 정책과제와 민생현안이 포함됐다. 김정은은 경제 위기로 인한 식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자원인 예비물자와 전시 비축미 방출을 군에 지시했다. 사회 분야는 집단주의 강화, 코로나 비상 방역 강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 등이었다. 군사 분야는 당정책 관철 선도, 경제 건설 집행, 자연재해 대응 등 경제 과업이었다.³¹³⁾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김정은에 대한 인민들의 충성을 유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민 생활이 향상돼야 한다. 인민 생활이 궁핍한 상황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공허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담화·연설에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을 통한 인민 생활 향상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2012년 1월 1일 신년사에서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초미의 문제”라고 밝혔고, 2012년 4월 6일 담화에서는 인민 생활 향상을 강성국가건설의 핵심과제로 규정했다.³¹⁴⁾

인민 생활 향상의 핵심과제는 먹는 문제와 식량문제 해결이었다. 2015년 2월 18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중의 유훈이고 평생소원”이라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 가운데서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와 관련하여 주신 유훈부터 먼

313) 김인태, “김정은 집권 10년 통치전략과 인민정책 및 인민통제 평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자료, 2021.9.10.)

314)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2012.1.1.;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로동신문』, 2012.4.6.

저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³¹⁵⁾ 이듬해인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는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 부문에서 생산 돌격전을 힘 있게 벌려 인민 생활 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한다”면서 “5개년 전략 수행기간에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반드시 풀고 인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을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³¹⁶⁾ 김정은 정권은 인민 생활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8년 4월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총력 집중, 2018~2019년에 자립경제와 자력갱생, 2020년에 정면 돌파전, 2021년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안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까지 겹치면서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며 김정은은 인민들에게 사과하면서 감성에 호소했다. 그는 2017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인민들을 어떻게 더 높이 떠받들 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겁다”면서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겠다”고 자책한바 있다.³¹⁷⁾

김정은은 2019년 3월 6~7일 개최된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 대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면서 “전체 인민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는 것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평생 염원”이라고 강조했다.³¹⁸⁾ 2020년 10월 10일 0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는 “하늘 같고 바다 같은 인민들의 너무나 큰 믿음을 받기만 하면서 보답이 따르지

315)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 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 『로동신문』, 2015.2.19.

316)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서 주제105(2016)년 5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6.5.9.

317) “신년사.” 『로동신문』, 2017.1.1.

318) “참신한 선전선동으로 혁명의 전진동력을 배가해나가자.” 『조선중앙통신』, 2019.3.9.

못해 면목이 없다”며, “전체 인민 신임 속에 이 나라 이끌 중책 지니고 있지만 노력과 정성 부족해 생활 어려움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이라면서 “하늘 같고 바다 같은 우리 인민의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안기만 하면서 언제나 제대로 한 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³¹⁹⁾

또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는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찌기 있어본 적 없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은 우리 혁명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몰아왔다고 지적했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면 공식적으로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이는 대북제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수해·태풍 피해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³²⁰⁾

김정은 정권은 2021년에도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1년에 제8차 당대회를 개최했고, 3차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다. 2021년 6월 7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와 도당 위원회 책임간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들에서는 경제사업과 인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실무대책을 논의했지만 김정은 정권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권의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대북제재 속에서 자력갱생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실현함으로써 인민 생활을 향상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319) “김정은, 8,000자 연설 도중 울먹 “사랑하는 남녘동포 손 맞잡길.” 『중앙일보』, 2020.10.10., <<https://news.joins.com/article/23890905>> (검색일: 2021.6.10.).

320)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한 개회사.” 『로동신문』, 2021.1.6.

IV. 국정전략과 기관·인물 체계 개편

박형중 통일연구원



1. 서론

김정은은 2012년 4월 최고지도자로 공식 취임했다. 후계자 내정부터 최고지도자에 오르기까지 3년이 걸렸다. 김정은식 권력체계 구축은 후계자 내정 직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2년 최고지도자로 취임할 때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 김정은식 권력 체계가 완성된 시기는 2016년 5월 7차 당대회로 볼 수 있다. 김정은식 권력 체계 수립 과정에서는 세 가지 핵심문제가 제기됐다. 첫째, 국정 조직의 원칙을 선군에서 선당으로 변경, 둘째, 국정 전반에 걸쳐 세대교체를 단행, 셋째, 핵·미사일 능력 증강이었다.

김정은은 새로운 국정전략에 맞추어 국정체계를 꾸리고, 국정과제 해결에 부합하게 기관·인물 체계를 변화시켜야 했다. 이러한 권력 개편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 과정은 이른바 공포정치를 수반했고, 대외 긴장, 대북제재, 코로나19, 그리고 북한에 항시 존재했던 권력기관들 간의 알력 등의 역경 속에서 진행됐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 10년 동안 자기 특색의 권력 체계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성공적이었다.

이 글은 김정은 정권의 국정전략과 연계시켜,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의 기관·인물 재편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개별 국가의 국정전략에서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한다.³²¹⁾ 개별 국가의 국정전략은 첫째, 대내외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둘째, 집권 세력의 권세와 이권을 보장함으로써 집권의 영구화를 보장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개별 국가의 국정체제는 당면한 정책과제의 해결에 최적화되어야 하는 측면과 집권 세력의 집권을 영구화해야 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321) Paul Pierson, "Power i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Orfeo Fioretos, Tulia G. Falletti, and Adam Sheingate eds., *The Oxford Handbook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p. 162~183.

이 두 가지는 상충하기도 하고 조화를 이루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룬다면, 그 나라와 집권 세력은 번창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이 상충한다면, 양자 간의 모순이 생길 것이다. 특히 집권 영속화를 우선시한다면, 그 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쇠퇴의 길을 갈 것이다. 김정은 정권에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두 어려웠다.

이 글의 2절에서 김정은식 국정전략 확립 과정에서 드러난 엘리트들의 갈등을 다룬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당시 북한 정권 내부에는 두 개의 국정전략 대안과 그를 둘러싼 경쟁이 존재했다. 하나는 핵·미사일 능력 증강 및 수령독재 확립을 추구한 김정은식 노선이었다. 다른 하나는 친중 개방정책과 내각 중심 집단지도체제 수립을 지향한 김정일-장성택 노선이었다. 3절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권력구조 개편을 다룬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리영호 총참모장 숙청, 2013년 말 장성택 숙청을 토대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에 나섰다. 권력구조 개편은 세 가지 원칙으로 진행했다. 첫째, 선당의 원칙하에 군부 개편, 둘째, 세대교체 단행, 셋째, 핵·미사일 능력 증강에 부합하게 기관·인물 체계 재구성이었다. 4절은 2~3절에서 언급한 과정들과 동시에 진행된 김정은 시대 3대 공안 기관(조직지도부, 총정치국, 국가보위성) 간의 권세 및 이권 다툼을 분석한다. 이들 권력기관은 수령에 대한 충성을 구실로 자신들 권력기관의 권세와 이권을 확장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충돌한다. 이러한 갈등은 수령에 의해 조정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한다.

2. 김정은식 국정전략 확립과 엘리트 갈등 (2012-2013)

김정은은 2011년 12월 3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됐다. 2012년 4월 11일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는 김정은을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했고, 이를 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김정은은 명실상부하게 최고지도자가 됐다. 아울러 2009~2011년 권력세습 기간은 김정일·김정은의 이중권력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한편에서 선군시대 구세력이 존재하고, 다른 편에서 김정은 시대 신세력이 병존했다. 김정은 정권은 권력세습 이후 이중권력 상태에서 벗어났다. 국정 권력의 균형추는 김정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변화했다.

적어도 2012~2013년 사이에는 북한에 두 개의 상충하는 전략 노선이 존재했고, 각자 추진되고 있었다. 그 하나는 친중 개혁개방 및 대미·대남 타협 노선이다. 이 노선은 2009년부터 김정일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추진하던 노선이고,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에는 장성택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이 노선은 장성택이 주장했다고 알려진 내각 중심 집단지도체제 수립 노선과도 연계된다. 2012~2013년 시기 북한이 보여준 개혁개방 동향은 이러한 노선에 따른 것이다. 만약 김정일의 ‘유혼’이 있다면, 이 노선이 그에 부합한다. 이 노선은 2009년부터 김정일이 심히 아픈 몸을 이끌면서 인생을 정리하는 행보를 보였던 시기에 직접 관장한 노선이기 때문이다.

이 노선을 추진하려면, 핵심적으로 2·29 합의가 성공적으로 관리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2012년 4월 13일 북한은 장거리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는 북한이 사실상 2·29 합의 파기를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기술적으로 4월 13일 장거리미사일 실험은 4월 13일 훨씬 이전에 결정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경우 어떠한 연쇄적 악순환(북한 도발 → 국제사회의 대북 비난 및 제재 강화 → 북한의 반발과 이에 대응한 더 큰 도발)이 벌어질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4월 13일 장거리미사일 실험 결정은 늦어도 3월 중에 내려졌을 것이다. 이는 김정일-장성택 노선에 대해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결정이다.

다른 하나의 노선은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주축으로 하는 노선이다. 김정은 정권 출범 10년이 지난 현재(2021년 10월)의 시점에서 볼 때, 이 노선이 김정은 시대 정책의 근간을 이뤘다. 이 노선을 채택한 측은 핵·미사일 능력 증강의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을 주장했을 것이다. 그들은 2009년 이후 지속된 남북 및 미북 간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갈등에 따라 높아진 안보 위협에 대처해야 하고, 조만간 ‘국가 핵무력 완성’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했을 것이다.³²²⁾

또한 이 노선 채택을 주장한 측은 이 노선을 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초래될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즉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증강 노선을 채택할 경우, 중국과의 대립 및 대미·대남 대결이 악화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친중 바탕의 개혁 개방 노선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핵·미사일 능력 증강 노선은 첫째, 대외 대결 및 긴장 강화, 둘째, 경제 고립에 따른 자력갱생 강화, 셋째, 대외 긴장과 내부 어려움을 통제할 목적의 ‘수령유일영도’ 강화, 넷째, 국가의 개인과 경제에 대한 통제 강화를 정당화하는

322) 정보사령부, 『2014 북한연보』 (정보사령부, 2015), pp. 228~229 참조, 재인용: 이호령·천명국·손효종, 『김정은시대의 권력엘리트 변화와 특징』, (국방연구원, 2020), p. 59. 유사한 분석으로 다음을 참조. 장진성, “장성택, 북 내각 중심제로 바꾸려 했다,” 『자유아시아방송』, 2014.9.2.,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7a5c9c4c131c758-babbb2e4d55c-c774c57cae30/unfinishedstory-09022014085120.html> (검색일: 2021.10.4.); “장성택 처형 전말 공개,” 『자유아시아방송』, 2014.8.5.,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7a5c9c4c131c758-babbb2e4d55c-c774c57cae30/co-jj-08052014112629.html> (검색일: 2021.10.4.).

이데올로기적 표상으로서의 ‘사회주의’ 강조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김정은 체제에서 주류 집단은 2012년 4월 4차 당 대표자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북한이 앞으로 취할 국정전략 노선으로 핵·미사일 증강 노선을 결정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당내에 장성택이 중심이 되어 아직 김정일-장성택 노선을 지향하는 세력이 존재했으며, 이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집권 블록은 핵·미사일 증강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대내외 정책 조치를 취했다. 김정은 집권 블록은 2·29 합의 직후 3월 중 어느 시점에 2·29 파기 결정을 내렸을 것이며,³²³⁾ 동시에 아마도 앞으로 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대강의 시간표를 작성했을 것이다.

북한은 2012년 4월 11일 4차 당대표자회 이후 핵·미사일 능력 증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했다. 즉 4월 13일 장거리미사일 실험(과 실패), 7월의 핵정책 전면 재검토 결정, 12월 12일 ‘은하 3호’ 장거리미사일 실험 성공,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2013년 3~4월 북한의 핵전쟁 위기 조성, 3월 31일 경제·핵 병진노선의 채택, 4월 1일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 제정 등이다.³²⁴⁾

이러한 사태 진전은 지배연합의 구성과 국정노선의 성격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2012년 4월 김정은 정권 출범 당시는 지배연합 구성과 국정노선이 김정은 노선을 견지하는 세력을 주축으로 하고 김정일-장성택 노선을 추종하는 세력을 소수파 보조 세력

323) 아니면 2·29 합의에 대한 북한의 동의 자체가 처음부터 시간별기를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324)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사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법령),”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know/view.do?id=31969&mid=SM00000536&limit=10&eqViewYn=true>> (검색일: 2021.10.6.).

으로 구성된 연합 정권이었다. 그렇지만 2012~2013년을 경과하면서 김정일-장성택 노선 자체와 그 추종 세력의 입지는 구조적으로 좁아졌다. 결국 2013년 12월 장성택 세력의 축출과 함께 김정일-장성택 노선은 폐기됐다.³²⁵⁾ 김정은은 김정일-장성택 노선 지지 세력을 축출한 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노선을 추진했고, 그에 부합하게 정책과 진용을 꾸렸다.

325) 김정일-장성택 노선의 핵심 중의 하나가 친중 개방·개혁노선이라고 한다면, 장성택 숙청과 함께 친중 개방 노선은 폐기됐다. 그렇지만 내부 개혁 노선의 일부, 예를 들어 농업에서의 포전관리제, 그리고 2014년 5.30 담화에 입각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등은 수용됐다. 그렇지만 만약 김정일-장성택식 친중개방 노선과 내부 개혁 노선이 결합했다면, 내부 경제 개혁은 훨씬 심대해야 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이 핵/미사일 본격 공세가 시작된 2016년부터 경제정책의 풍향 또한 바뀌었다. 2016년 신년사와 5월 당대회는 자력갱생, 내각의 경제 장악 강화, 당의 동원적 역할 강화 등을 강조했다. 국가의 거시 경제 정책이 이러한 방향이라면, 그 이전 시기에 추진된 일련의 개혁성 조치는 상당 부분 사실상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향은 (이 글의 서술시점인) 2021년 말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2013년 11월 지정된 지방급 경제개발구 13개를 포함, 김정은 집권 이후 지정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는 (2016년 12월 31일 시점에서) 무려 21개에 달한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북한 지식사전』, “경제개발구(경제특구),”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know/view.do?id=31932&mid=SM00000536&limit=10&sc=T&sv=%EA%B2%BD%EC%A0%9C%ED%8A%B9%EA%B5%AC&eqViewYn=true&odr=news&eqDiv=>> (검색일: 2021. 10. 4.). 그렇지만 핵/미사일 증강 노선이 포기되지 않는 한, 또는 친중/친남 개방 노선과 결합하지 않는 한, 이러한 개발구 지정은 현실에서 사실상 무의미하다. 2015년 공식화되었던 ‘사회주의기업관리책임제’도 2016년 자력갱생 및 내각 통제 강화의 정책 도입 이전과 이후에, 그 형식상 내용은 불변이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 상당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3. 김정은식 국정체제 확립과 기관·엘리트 개편 (2014-)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은 집권 이후 권력구조와 정책 변화가 개략적으로 동시에 발생했다는 것이다.³²⁶⁾ 김정은 정권의 출범 이후 2012년 4차 당대표자회를 전후하여, 핵·미사일 증강 노선이 사실상 기축 노선으로 정착한다. 이 노선의 궁극 목표는 ‘국가 핵무력 완성’이었고, 3단계(1단계: 2012~2013년, 2단계: 2014~2015년, 3단계: 2016~2017년)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³²⁷⁾ 그런데 이러한 정책 단계에 발맞추어 의미 있는 엘리트 교체가 발생했다.

1단계는 2012~2013년에 김정은식 핵·미사일 능력 증강 노선을 국정노선으로 확고히 정착시키는 시기였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진용은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꾸러졌다. 이 시기 동안 엘리트 변동의 핵심은 리영호(2012.7)와 장성택(2013.11)의 숙청이었다. 그리고 군 경력이 없는 최룡해가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것(2012.4)이었다.

2단계는 2014~2015년에 단거리 중심의 신형 방사포와 신형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국을 사정거리로 두는 무기체제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핵·미사일 관련 전략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하던 시기였다. 2012~2013년에 군부 개편의 주요 사업이 완성됐고, 장성택 일파의 숙청으로 김정은식 권력체제의 대강이 완성됐다. 이러한 동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2014년 4월의 진용 개편이다. 2014년

326) 권력구조 개편 또는 엘리트 교체를 정책노선의 개편 및 그 정책 실현을 위한 진용 구축으로 해석하는 논의로서, 박형중, “권력세습과 통치연합의 재편,” 오경섭 외,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pp. 55~102; 이승열,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 통치관료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이호령, “김정은시대의 권력엘리트 변화와 특징,” 국문 KIDA Brief (서울: 국방연구원 2021).

327) 이호령·조남훈,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발 추이와 대응 방향”, 『주간 국방논단』 제 1691호 (2017.10.16.), p. 4.

북한의 외교 안보 5대 기관장 중에서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을 제외하고 4개 부처 기관장이 교체됐다.³²⁸⁾ 인민무력부장이 김격식에서 장정남으로, 총참모부장이 김격식에서 리영길로, 총정치국장이 최룡해에서 황병서로, 인민보안부장이 리명수에서 최부일로, 외무상이 박의춘에서 리수용으로 교체됐다.

3단계는 2016~2017년 다양한 종류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그리고 3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2017년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을 달성했던 시기였다. 2016년 5월 개최된 7차 당대회는 ‘국가 핵무력 완성’에 매진하는 데 적절한 노선과 진용을 갖추기 위한 행사였다. 2010년 4차 당대표자회와 비교할 때,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약 60%를, 후보위원은 72%를 교체했다.³²⁹⁾ 7차 당대회 이후에도 중앙위원들이 지속해서 보선(교체)된 것을 고려하면, 2020년 말 기준 2010년과 비교할 때, 당 중앙위원의 약 80%가 교체됐다.³³⁰⁾

추가로 미북과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직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대대적인 인물교체 및 노선 변경이 있었다. 북한은 2018~2019년 2월에 걸쳐 남북·미북 긴장완화를 추진했던 시도가 실패한 후 2019년 4월 7기 4차 전원회의, 12월 7기 5차 전원회의, 그리고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이러한 가운데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의 대량 교체는 2019년 7기 4차 및 6차 전원회의에서도 발생했다. 미북과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개최된 7기 4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원 14명 중 10명이 교체되어 72%의 교체율을 보였다. 아울러 2019년 당 중앙위 핵심 직위자 교체는 41.8%

328) 이호령·천명국·손효중, 『김정은시대의 권력엘리트 변화와 특징』, p. 60.

329) 위의 글, p. 30.

330) 위의 글, p. 31.

였고, 이는 김정은 집권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³³¹⁾ 8차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의 66.4%가 교체됐다(250명 중 166명 교체, 84명 유임). 정치국의 경우, 당대회 직전과 비교 시 30명 중 20명 유임, 10명 교체로 3분의 1이 교체됐고, 7기 1차 전원회의 당시와 비교 시 28명 중 6명 유임, 22명 교체로 78.6%가 교체됐다.³³²⁾

한편, 김정은 집권 후 권력구조 및 엘리트 교체에서 일차적 대상은 군부였다. 권력구조 차원의 변화에서 기본 원칙은 선군 원칙을 대신하여 선당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선군시대에는 북한군의 군사 사업에서 군 지휘관 주도 원칙을 견지했다면, 김정은 집권과 더불어 당기구 중심의 군 통제 원칙을 (재)수립한다는 것이다.³³³⁾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과거 국방위원회를 대신하여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사업의 중심 기관으로 설정됐다. 후계자 시절 김정은은 2010년 3차 당 대표자회에서 선군의 상징인 국방위원회가 아니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등장했다. 당 규약 개정을 통해 그간 국방위원회가 주도하던 국방사업 전반이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이전됐다.³³⁴⁾ 또한 김정은은 부위원장 자격으로 역시 기능이 강화된 총정치국의 업무를 담당했다.³³⁵⁾ 2012년 9월 ‘전시사업세칙’은 전시사업의 총괄지도 기관을 국방위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변경했다.³³⁶⁾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통적으로 병종

331) 위의 글, p. 36.

332) 이기동,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와 권력구조 변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1-2 (2021.1.28), p. 8. <<https://www.sejong.org/board/1/egoread.php?bd=3&itm=&txt=&pg=1&seq=5802>> (검색일: 2021.10.4.).

333) 고재홍, 『북한의 군(軍) 통제 연구: 견제와 균형의 지속』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pp. 139~140.

334) 위의 책, p. 149.

335) 위의 책, pp. 145~146, pp. 155~156.

사령관들이 주축으로 구성됐다.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선거된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 직책으로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만을 포함했다.³³⁷⁾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구성된 중앙군사위원회에는 국가보위상, 사회안전상, 경찰총국장이 추가로 포함됐다.

둘째, 당 관료를 통해 군사 지휘관을 통제하는 당 우위의 군 통제가 확립됐다. 선군시대에는 야전군 출신 장령이 총정치국장에 임명됐고, 군 장령 출신이 당의 주요 부부장 등 주요 당직을 차지했던 경향이 바뀌었다. 2010년 3차 당대표자회 이후 민간 출신 고위 당료에게 군사 장령 지위가 부여됐고, 고위 장령 지위가 부여된 당료 출신이 총정치국장 등 군부에 대한 당적 통제 직책에 임명됐다. 대표적으로 2012년 4월 당료 출신인 최룡해가 차수 계급을 받고 총정치국장에 임명됐다. 이후 2014년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었던 황병서가 차수 계급을 받고 총정치국장에 임명되어 2018년 2월까지 재직했다.³³⁸⁾

2018년 5월 평양시 당 위원장 출신 김수길이 대장 계급을 받고 총정치국장에 임명됐다.³³⁹⁾ 황병서는 차수였지만, 그 후임인 김수길과 권영진은 대장으로, 총정치국장의 위상은 낮아졌다. 2015년 4월 30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후임에 조직지도부 출신으로 총정치

336) 2004년 전시세칙은 모든 사업을 국방위원회에 집중하고 최고사령관 김정은의 결론에 따라 행하도록 했다. 이 세칙은 당에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 2012년 전시사업 세칙은 모든 사업을 당 중앙군사위에 집중하고 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의 결론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호령·천명국·손효중, 『김정은시대의 권력엘리트 변화와 특징』, p. 60. 위의 책, p. 153.

337) 위의 책, p. 154.

338)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의 김정각이 총정치국장이었다. 그는 차수이며 원래 야전군 출신이다.

339) 김수길은 2021년 1월 강원도당비서로 임명됐다. 그 후임자는 권영진 대장이다(임명당시는 상장). 그는 원래 야전군 출신으로 보인다.

국 부국장을 역임한 박영식이 임명됐다.³⁴⁰⁾ 아울러 군대 내 정치사업에서 총정치국과 당 위원회, 그리고 정치위원의 역할이 강화되고, 군사업무에서 이들이 군사 지휘관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³⁴¹⁾

셋째, 김정은 집권 이후 군사 지휘관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위상과 역할이 하락했다. 고재홍과 이호령의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³⁴²⁾ 첫째, 숙청이 군사 지휘관에 집중됐다. 이에 비해 군대 내 정치기관 보직자들의 지위는 훨씬 안정적이었다. 둘째, 군 수뇌부에 속하는 인물들이 빈번하게 교체됐다.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평균 재임 기간은 1년에 불과했다. 셋째, 일선 군단급 지휘관이 대량으로 교체됐다. 넷째, 강등·강직과 복권이 광범하고 빈번하게 발생했다. 고위 지휘관과 총정치국 간부에 대한 강등·강직 복권은 김정은의 권한이지만, 그 이하 급의 처분은 총정치국 주관이었다. 2015년 이후 강등과 복권은 2012~2014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³⁴³⁾

다섯째, 군사 지휘관의 당적·계급적 위상이 김정일 시대와 비교할 때 하락했다. 예를 들어 군단장은 군단정치위원보다 한 계급 높았던 것이 7차 당대회 이후 거의 동급이 됐다.³⁴⁴⁾ 군의 위상 약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는 정치국원 중에서 군엘리트의 비중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7·8차 당대회를 비교하면 정치국원은 28명에서 30명으로 증가했는데, 그중 당 관료 비중은 15명(53.6%)에서 18명(60.0%)로, 행정부 인사 6명(21.4%)에서 7명(23.3%)으로, 군 인사

340) 박영식의 후임은 군사 지휘관 출신으로 임명됐다. 2018.6 노광철 대장, 2019.12 김정관 대장, 2021.7 리영길 대장.

341) 위의 책, pp. 155~156.

342) 위의 책, pp. 159~169; 이호령·천명국·손효중, 『김정은시대의 권력엘리트 변화와 특징』, pp. 75~89.

343) 위의 책, p. 76.

344) 고재홍, 『북한의 군(軍) 통제 연구: 견제와 균형의 지속』, p. 160.

7명(25%)에서 5명(16.7%)으로, 당 인사의 비중은 6.4%p 상승하고 행정 인사의 비중은 1.9%p 상승, 그리고 군 인사의 비중이 8.3%p 감소했다.³⁴⁵⁾

여섯째, 전반적으로 군의 위상이 낮아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핵과 미사일의 비대칭 전략무기 그리고 포병 관련 인물들과 군수공업 관련 인물들의 당적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 이는 김정은 치하의 군부 개편이 단순히 군부 위상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군부 재편의 성격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³⁴⁶⁾

군사 엘리트의 보직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발생했던 시기는 2012~2013년이였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 약 1년 반 동안 당·정·군 보직 인물 변화는 평균 40%가 넘었는데, 특히 군 인사 변동은 60%를 상회했다.³⁴⁷⁾ 이 시기 군부에서는 군 최고위층뿐 아니라 주요 군단장급도 대거 교체됐다. 김정일 선군 시대에는 최고위 군부 직책이 사실상 종신제였던 것에 비해,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군부 최고위층의 재임기간은 1년 정도에 불과했다.³⁴⁸⁾ 2012~2017년 동안 군 총참모장은 5명, 인민무력부장은 6명, 작전국장도 6명이 교체됐다.

북한군 군단장의 대규모 교체는 (2021년 9월까지) 4번 발생했다. 첫 번째 경우는 가장 대규모 교체로 2012년 7월 리영호 해임 이후 동년 하반기부터 2013년 중순까지였다. 이 기간에 전방부대 군단장들이 모두 교체되고 후방군단장들도 상당수 바뀌었다.³⁴⁹⁾ 첫 번째 교체 이후 1년이 안 되어 두 번째 교체가 장성택 처형 직후인 2014년

345) 이기동,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와 권력구조 변화,” p. 8.

346) 이호령·천명국·손효중, 『김정은시대의 권력엘리트 변화와 특징』, pp. 83~85.

347) 위의 글, p. 61.

348) 고재홍, 『북한의 군(軍) 통제 연구: 견제와 균형의 지속』, p. 163.

349) 위의 책, pp. 164~165.

초순경에 발생했다. 주요 군단급 지휘관들이 교체됐을 뿐 아니라, 2014년 4월 총정치국장 최룡해가 황병서로 바뀌었고, 당 조직지도부 과장 출신인 박영식이 조직부국장으로 임명됐다. 비군인 출신인 박영식은 1년 후에 인민무력부장으로 임명됐다. 세 번째 교체는 2015년 8월 북한 목함지뢰 도발 이후에 발생했다. 군단장 보직 전환이 있었는데, 앞서 경우와 비교할 때 소규모였다.³⁵⁰⁾ 네 번째 교체는 2021년 2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루어졌다. 해군사령관과 공군사령관이(대장급 대신) 중장급으로 임명됐고, 27명이 대좌에서 소장(별 1개)으로 승진했다.³⁵¹⁾

김정은 집권기 이와 같은 상당한 규모와 심도의 군부 재편은 북한 군대의 군사적 효율성과 정치적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과대 팽창한 상층 장령 집단을 구조 조정하는 의미가 있었다. 선군시대에는 주기적으로 장령 승급이 대규모로 이루어져 상층 장령 집단의 규모가 팽창했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상층 장령 집단의 규모가 줄고, 또한 그 구조가 피라미드화했다. 이호령에 따르면, 2012~2020년 동안 북한 장령집단 1,600명 중 30% 이상이 교체됐고, 부장급 이상 핵심 직위자의 80% 이상이 교체됐다.³⁵²⁾ 장령 숫자는 2015년 1,822명으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가 2020년에 1,689명으로 줄었다. 2018년 상장 숫자는 전년 대비 48%, 중장 숫자는 35% 감소했고, 소장 숫자는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즉 군부 상층의 구조가 피라미드화했다.

350) 위의 책, pp. 164~165.

351) “김정은, 군 간부 대거 세대교체 … ‘당근과 채찍’ 쥐고 기강 잡기,” 『연합뉴스』, 2021.2.25.,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075800504>> (검색일: 2021.10.4.).

352) 이호령·천명국·손효중, 『김정은시대의 권력엘리트 변화와 특징』, p. 83.

둘째, 군부의 위상 격하, 당 통제 확립, 그리고 빈번한 보직 교체는 다음의 3가지 경향을 타파하는 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1) 선군 군부의 권세와 이권 증가에 따라 군부 자체가 특권 집단화된 경향, 2) 개별 간부 보직의 장기 고정화에 따라 공적 기관이 사적인 독립 소왕국화되어 가는 경향, 3) 군의 외화별이 사업 개입 강화에 따른 부패 만연과 내부 이권 파벌 형성이다. 특히 빈번한 보직 교체는 군부가 외화별이 이권사업에 깊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발생하고 결성된 군부 내 파벌들을 해체하는 효과가 있었다.³⁵³⁾

군부가 외화별이 사업에 개입하면서 자기 사람 심어 넣기, 뇌물 상납 구조, 상호 비리 감싸기 등을 통해 족벌주의·파벌주의가 형성됐고 이들 간에 알력과 경쟁도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총참모부 줄기, 인민무력부 줄기, 총정치국 줄기가 존재했다. 이러한 알력과 경쟁은 기관 내부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들끼리도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했고, 때로 위협스럽게 분출했다. 대표적으로 김정일 말기에는 장성택 및 행정부, 김정은 치하에서는 김원홍 및 국가안전보위부와 타 기관 간의 관계가 그러했다. 이들 두 기관은 공히 수령의 비호를 등에 업고 또는 수령을 호가호위하면서 업무권한과 이권을 패권적으로 팽창시켰고, 그 과정에서 주변 타 기관들과 때로는 격심한 수준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³⁵⁴⁾

군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기관책임자 또는 군 지휘관의 재임 기간이 길어질수록 외화별이 이권 및 여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측근들과 공고한 ‘알쌈’ 형성 또는 해당기관의 기관장 ‘소왕국’화 또는

353) “김정은, 군부 족벌·파벌 제거 안간힘,” 『자유아시아방송』, 2013.2.27.,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partisan-02272013141632.html> (검색일: 2021.10.4.).

354) Michael Madden, “38 North Special Report: Recent Changes in Kim Jong Un’s High Command,” 38 North (July 3, 2018). <<https://www.38north.org/2018/07/mmadden070318/>> (검색일: 2021.10.4.).

족벌주의·파벌주의가 번성하며, 타 기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좁은 이익을 강하게 주장할 개연성이 높아진다.³⁵⁵⁾ 군부 상층 지휘관을 빈번하게 교체하고 그들의 지위를 빈번한 강직·강등·복권 등을 통해 불안정하게 만들면 군부 내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한 기관 자체의 독립 소왕국화 그리고 기관 내부 기존의 파벌·족벌을 파괴하며,³⁵⁶⁾ 동시에 새로운 형성을 방지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³⁵⁷⁾

또한 이는 해당 지휘관이 자신이 관장하는 기관의 기관본위주의와 기관이익의 포로가 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김정은의 입장에서 지휘관의 직책수행 성과에 관한 단기 책임을 묻는 것도 용이해진다. 이러한 경향은 단기적으로 내부 개편의 고통을 초래하지만 단중기적으로 각급 기관의 본연의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관 및 기관 간부의 직업적 전문성과 관료적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³⁵⁸⁾

셋째, 군부의 세대교체 또는 인사 적체의 해소이다. 김정일 시대에 북한군 장성들은 사실상 종신 보직제와 원로 우대제가 시행됐다.

355) 이에 관해서는 이글의 다음 절 서술 참조할 것.

356) 박형중, “권력세습과 통치연합 재편,” p. 132.

357) 2021년 9월 사회안전상으로 장정남이 임명됐다. 그는 과거 인민무력상(2013.5~2014.6)을 역임한 바 있다. 장정남의 사회안전상 전임자(2020.11~2021.9) 리영길은 총참모장 출신이고, 국방상으로 이직했다. 무력부장 출신 장정남의 사회안전상 임명의 이유는 두 가지로 거론된다. 그 하나는 사회안전성의 기능적 강화이다. 즉, “반(半)사민, 반군대라는 안전성의 해이성을 타파하고 제2의 수뇌부 보위군으로 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한다. 두 번째는 사회안전성의 독립 소왕국화 경향 타파이다. 즉 “(내부 잡도리를 강화하여) (사회)안전성의 가족주의, 집안 감싸기 근원을 송두리째 뽑으려는 것이다.” “강등됐던 박정천, 권력 핵심에 오른 이유… ‘유일 무이한 포 능력자’, 『연합뉴스』, 2021.9.14., <<https://www.dailynk.com/%EA%B0%95%EB%93%B1%EB%90%90%EB%8D%98-%EB%B0%95%EC%A0%95%EC%B2%9C-%EA%B6%8C%EB%A0%A5-%ED%95%B5%EC%8B%AC%EC%97%90-%EC%98%A4%EB%A5%B8-%EC%9D%B4%EC%9C%A0-%EC%9C%A0%EC%9D%BC%EB%AC%B4%EC%9D%B4/>> (검색일: 2021.10.4.).

358) 허규호·안경모,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의 역할과 성격 변화에 대한 연구: 전문직업주의의 부상을 중심으로,” pp. 69~191.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원로급은 물론 일선 사단장들도 집단으로 제대시켰다.³⁵⁹⁾ 2013년 5월 50대 초반 장정남이 70대 중반 김격식 인민무력부장을 대체했다.³⁶⁰⁾ 리명수 총참모장(2016.2~2018.6)은 전임자이자 후임자였던 리영길(2018년 당시 63세)과 21세 차이가 났다.³⁶¹⁾ 2021년 9월 총참모장에 임명된 림광일은 56세였다. 2012년 이후 대좌에서 소장(별 1개)으로 진급한 인원은 348명이었다. 이는 통일부 인명록에 등재되어 있는 전체 장령 1,440명의 24%에 해당한다.³⁶²⁾ 다시 말해 대규모의 장령 교체는 북한 군부의 세대교체와 함께 인사 적체의 대규모 해소를 의미한다.

넷째, 변화한 군사정세와 새로운 군사전략에 부합하는 군사 체계의 수립을 지향하는 인적 재편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군사태세와 편제는 상당한 변화를 경험했다.³⁶³⁾ 북한은 핵·미사일·포병·사이버 능력을 현격히 증가시킴에 따라 전략군을 강화하고, 핵과 재래식 군비의 병용, 포병과 사이버전의 역할을 높이는 군사태세를 수립했다. 아울러 북한은 조국통일론 등을 거론하면서 대남 비대칭 그리고 공세적 군사태세를 강화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인적 개편 및 주요 인물의 부상은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게 이루어졌

359) 고재홍, 『북한의 군(軍) 통제 연구: 견제와 균형의 지속』, p. 142.

360) “北박정천 화려한 복귀… 차수 강등됐다 ‘권력핵심’ 상무위원으로(종합),” 『연합뉴스』, 2021.9.7.,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7074351504>> (검색일: 2021.10.4.).

361) “북한, 군 수뇌부 3인방 전원 교체 … 세대 교체 분석도,” 『서울신문』, 2018.6.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03500071>> (검색일: 2021.10.4.).

362) 정성장 외, 『2019 북한 동향과 분석』 (성남: 세종연구소 2020), p. 189.

363)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2017년 봄(통권 제115호), pp. 131~170; 유판덕, 박영택, “북한 ‘핵무력’과 재래식 군사력 강화 방향 및 공세적 운용과의 관계 연구 - 김정은 시대(2012~2019)를 중심으로,” 『한국국가전략』, 통권 제13호 (2020.7), pp. 149~182; 김열수, 김정규, “남북한 군사전략 비교와 함의,” 『新亞細亞』, 22권 2호 (2015년, 여름), pp. 10~37.

다.³⁶⁴⁾

다섯째, 북한군에 대한 당의 지배 또는 북한군에 대한 총정치국의 통제가 강화됐다. 최용해·황병서·김수길과 같이 비군인 고위 당료 출신이 총정치국장을 역임했고, 비군인이자 조직지도부 및 총정치국 출신 박영식이 인민무력부장직을 수행했다. 총정치국은 북한군의 대규모 인사개편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오중흡 7연대 칭호 쟁취운동’을 매개로 부대평가에서도 역할을 높였다.³⁶⁵⁾ 한편, 2016년 2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인민군위원회 연합회의 확대회의는 인민군대의 노동당에 대한 절대복종 체계를 구축했다.³⁶⁶⁾

4. 3대 공안기관 간 권세와 이익 갈등

선군시대에 김정일은 수령독재 유지와 관련해 군부에 가장 의존했고 따라서 군부에 다른 기관을 능가하는 권세와 이권을 배정했다. 그렇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군부 대신에 조직지도부, 총정치국, 국가안전보위의 3대 공안기관이 수령독재 유지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기관으로 등장했다.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이행한 후 권력기관들 사이에 권세와 이익의 서열에 변화가 생겼다. 김정일 시대에는 실제적인 권세와 이득 배분에서 선군군부와 장성택의 행정부가 상위 서열을 차지하면서 경쟁했고,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가 하위 서열에서 경쟁했다. 김정은 시대에는 조직지도부, 총정치국,

364) 이호령·천명국·손효중, 『김정은시대의 권력엘리트 변화와 특징』, p. 62, p. 82, p. 85.

365) 고재홍, 『북한의 군(軍) 통제 연구 : 견제와 균형의 지속』, p. 156, p. 164.

366) 정성장 외, 2019 북한 동향과 분석 (성남: 세종연구소 2020), p. 189; “김정은은 ‘군대는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가라’”, 『동아일보』, 2016.2.5. (검색일: 2021.10.4.).

국가안전보위부가 3대 핵심 권력기관이었다. 이들이 상위 서열에서 경쟁하고, 군부는 하위 서열로 밀려났다.

김정은 시대의 3대 공안기관은 김정일 시대 권력 기관들 사이의 관계와 같이 김정은 수령 권력의 세습과 안착의 성공이라는 목표를 공유했다. 그러나 3대 공안기관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알력 관계를 노정했다. 3대 기관은 각기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각자의 방법으로 수령권력의 운영과 자신의 업무를 진행했고, 동시에 이를 핑계로 또는 이를 기회로 각 기관의 권세와 이권을 확장하고자 힘을 다했기 때문이다. 각 기관은 수령독재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자기 기관의 권능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권 사업을 전개해 재정을 조달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와 사업을 전개했다. 또는 수령독재의 공고화에 기여한 것에 비례해서 권세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상황을 구성하고자 했다.

수령은 권세와 이권을 3대 공안기관들 간에 선택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통해 그들 간의 충성경쟁과 득세경쟁을 관리했다. 수령은 시기별 정세의 특성에 따라 특정 공안기관을 국정운영의 중추로 활용하는 한편 그 역할과 공헌 비중에 합당한 권세와 이권을 차별적으로 후하게 분배했다. 그런데 특정 시기에 중추기관을 장기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게 3가지 폐단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첫째, 중추 공안기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강해지고 그리하여 수령 권력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 우려를 유발했다. 둘째, 중추 공안기관이 불법과 강권을 통해 다른 기관들의 공적 업무 영역, 그리고 권세와 이권을 침해하면서, 국정체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공안기관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했다. 셋째, 중추 공안기관의 무고(誣告)와 숙청이 수령체제 안정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존재했는데, 이는 수령 체제의 정치적 불안 유발

요인이었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해 약간 자세히 설명한다. 원래 중추 공안기관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는 정치적 무고와 숙청을 통해 수령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공포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중추 공안기관은 수령독재 유지에 불가결한 악역을 수행했다. 중추 공안기관이 누리던 권세와 이권은 이러한 악역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중추 공안기관이 공포 유지라는 수령의 의도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자체가 또는 그에 더하여 그를 핑계로 경쟁 기관을 약화시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권세와 이권을 팽창하는 과정에서, 수령독재체제 자체 또는 수령 자신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잠재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중추 공안기관이 행했던 공포 조성 과 유지라는 업무는 수령독재체제 유지와 관련해 수령이 원했던 바이지만, 수령은 그것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반드시 면제되어야 했고, 대신 그 집행기관인 중추 공안기관이 속죄양이 되어야 했다. 이러한 경우 수령은 그동안 중추 공안기관에 돌려 지내던 다른 경쟁 공안기관을 동원하여 기존의 중추 공안기관을 공격해 약화시켰다. 그리하여 중추 공안기관의 교체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수령은 정세 변화에 맞추어 권력기관들 사이의 권세 및 이권 분배 양상 또는 기관들 사이의 서열을 재조정함으로써 전체 수령체제의 안정을 도모했다. 이러한 전체 과정은 한편에서는 권력기관의 수령에 대한 충성경쟁이자 동시에 권력기관의 수령포획경쟁이라는 양면 게임이었다. 충성경쟁은 더 많은 공을 세워 수령의 선택을 받고자 하는 권력기관들 사이의 경쟁이 존재함을 말한다. 반면 수령포획은 수령의 해당 기관에 대한 의존성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의 권세와 이득을 확장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수령을 둘러싸고 권력 기관들 사이에, 많은 경우에 제로섬 경쟁이 벌여

진다.

김정은은 2012~2013년에 3대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선군시대 권력체계를 대신하는 새로운 권력체계의 기본 틀을 잡는 데 성공했다. 이후 이 3대 권력기관 사이에 충성경쟁 및 득세 경쟁, 이들 3대 기관의 각각 다른 주변 기관에 대한 강박과 패권 추구가 전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7~2018년 국가보위부를 관장하던 김원홍과 총정치국을 관장하던 황병서가 몰락했고, 두 기관의 위상도 낮아졌다. 한편 동 기간에 조직지도부의 위상과 역할에도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 이러한 과정을 서술한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에서 2013년 말 장성택 숙청까지 김정은 정권 초반의 권력 재편 과정에서 조직지도부와 국가안전보위부가 핵심적 역할을 했고, 최고의 권세와 이권을 향유했다. 조직지도부는 선군시대에는 군부의 권세 확장 때문에 위축됐고, 2008년 김정일 와병 이후에는 장성택과 행정부의 세력 팽창 때문에 위축됐다. 조직지도부는 김정은 권력세습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고, 2013년 유일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의 수립 및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과 행정부의 폐지를 배경으로 급속히 위상을 강화했다. 2014년경 조직지도부 출신들은 핵심 권력의 요직을 차지했다.

2014년 4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던 황병서가 총정치국장에 취임했다. 그는 정치국 상무위원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겸임했다. 장성택 숙청을 주도했다고 알려졌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조연준은 정치국 후보위원, 역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김경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었다. 이 두 인물은 당시 조직지도부의 실세로 알려졌다. 당비서 겸 정치국 후보위원인 김평해,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이재일과 최휘도 조직지도부 출신이었다. 또한 지방당 책임비서 12명 중 4명 즉 평안남도 박태성, 평안북도 이만건, 양강

도 이상원, 강원도 박정남도 조직지도부 출신으로 알려졌다. 조직지도부가 이처럼 득세하는 과정에서 조선노동당 자체가 재편됐다.

2012년부터 2015년 중반까지 처형된 핵심 간부는 70명에 달했다. 그중에서 60명이 당 간부였고, 나머지가 군부와 내각의 인사였다.³⁶⁷⁾ 2014년 3월에는 김여정이 공식 무대에 등장했다. 김여정은 당 중앙위 책임일꾼 중의 한 명으로 2014년 3월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투표 행사에 참여했다. 그가 다른 인물들과 함께 호명된 위치는 당 부부장급의 위치였다.³⁶⁸⁾ 김여정은 2014년경 당 서기실장,³⁶⁹⁾ 조직지도부의 건의에 따라 조직지도부 부부장에 임명되었고,³⁷⁰⁾ 2015년경에는 선동선전부 부부장,³⁷¹⁾ 2016년경에는 “(김정은) 행사 조직과 관리의 총지휘책임자”³⁷²⁾ 등으로 알려졌다.

장성택 숙청 이후 행정부의 권한은 조직지도부에 흡수됐다.³⁷³⁾ 행정부는公安·사법 기관을 관할했는데, 이 업무는 신설된 조직지

367) “金, 권력핵심 黨부터 장악… 처형 70명 중 60명이 黨간부,” 『동아일보』, 2015.5.16.,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50516/71275119/1>> (검색일: 2021.10.4.).

368) “김정은 동생 김여정, 北매체 공식 등장,” 『동아일보』, 2014.3.1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40310/61561232/1>> (검색일: 2021.10.4.).

369) “김여정이 김정은 비서실장… 北 장관급 黨서기실장 활동,” 『동아일보』, 2014.3-3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40331/62125547/1>> (검색일: 2021.10.4.).

370) “北엔 ‘조피아’… 김정은도 절절,” 『동아일보』, 2014.6.26.,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40626/64667770/1>> (검색일: 2021.10.4.).

371) “김정은 집권 4년, 北 권력지도,” 『동아일보』, 2015.12.17.,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51217/75408578/1>> (검색일: 2021.10.4.).

372) “北 김여정, 2인자 최룡해에게 반말” 『동아일보』, 2016.5.2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60520/78199406/1>> (검색일: 2021.10.4.). 김여정이 “김정은의 현지 시찰, 관람, 각종 대회 참가 인원을 선발하고 자리를 배치하는 등 행사 전반을 조직하고 감독해 왔다”고 했다.

373) “北조직지도부 조연준, 장성택 외화벌이 라인 완전 장악,” 『DailyNK』, 2015.9.30., <<https://www.dailynk.com/%E5%8C%97%EC%A1%B0%EC%A7%81%EC%A7%80%EB%8F%84%EB%B6%80-%EC%A1%B0%EC%97%B0%EC%A4%80-%EC%9E%A5%EC%84%B1%ED%83%9D-%EC%99%B8%ED%99%94%EB%B2%8C/>> (검색일: 2021.10.4.).

도부 7과로 이관됐다. 7과는 조직지도부의 지도 아래에 놓여 과거 행정부와 같은 정도의 실질적 권한은 없고 실무적·행정적 기능만 수행했다.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자 당 내부 통제 담당인 조연준은 장성택이 관장하던 공안기관과 외화별이사업을 모두 장악했다.

김정은 정권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은 조직지도부와 김원홍이 담당했던 국가안전보위부였다. 국가안전보위부가 득세한 배경은 두 가지였다. 첫째, 김정은의 후계자 시절과 권력세습 이후, 국가안전보위부의 기능이 현저히 증시됐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조선노동당과 함께, 김정은 권력의 2대 기둥으로 간주됐다. 김정은은 비공개였지만 후계자 임명 이후 최초 직책으로 2009년 4월 국가안전보위부장으로 취임했다. 집권 이후에도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의 역할을 증시했다. 둘째, 보위부의 역할이 증시된 것과 함께 보위부장인 김원홍이 김정은의 높은 신임을 받았다. 김원홍은 2010년 3차 당대표자회 이후,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으로서는 군부 통제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 공로로 김원홍은 2012년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됐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자 조연준과 함께 2013년 12월 장성택 숙청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장성택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관장한 특별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안전보위부와 김원홍 부장의 권세와 이권이 팽창했다. 이는 양자가 다른 권력기관인 조직지도부, 총정치국, 그리고 인민보안부와 업무범위와 이권을 놓고 알력과 갈등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기관 간의 알력과 갈등은 시기마다 변동이 있었으나 그 기관 책임자인 김원홍, 황병서, 최룡해 간의 사적인 원한까지도 포함한 개인적 알력과 갈등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집권한 후 보위부의 권한이 현격히 상승했다.³⁷⁴⁾ 2012

374) “김정은, 고위층 숙청 직접 지시,” 『자유아시아방송』, 2015.4.15., <<https://www>.

년 1월 김정은은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반대파를 가차 없이 숙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4월 김원홍을 보위부장으로 임명하면서는 ‘보위부는 나의 오른 팔이며 친솔부대이므로 보위부를 군사화하라’는 명령도 하달했다. 그리하여 보위부가 중화기로 무장했다.³⁷⁵⁾ 2012년 김원홍이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된 직후 4월 16일부로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의 국경경비를 담당하게 됐다.³⁷⁶⁾ 국경경비는 원래 인민무력부 소관이었지만,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이관됐다.

국경경비대는 경비총국(5454부대)으로서 국경이 없는 황해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도에 직할 여단을 두고 있었다. 국경경비대는 원래 보위부 산하이다가 2004년 4월부터 무력부가 관할했고, 보위사령부가 통제와 검열을 관장했다. 김원홍은 보위사령관에 재직할 적이 있었다(년도 미상). 2012년 10월 2일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김정일 동상 제막식이 있었다. 김정일 단독 동상은 김정일 사후 보위부에 처음 세워졌다. 김정은은 제막식에 참여하여 외부정보 유입 차단 그리고 강도 높은 적대분자 색출작업을 지시했다.³⁷⁷⁾

2014년 11월 18일 군 보위지도원을 양성하는 보위대학에 김일성-

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purge-04152015162002.html) (검색일: 2021.10.4.).

375) 위의 글.

376) 국경경비는 원래 보위부 소관이다가 2008년 4월부터 무력부가 관할해왔다가, 2012년 4월 16일부로 보위부로 재이관되었다. “김정은, 김원홍 보위부장에게 국경경비 맡겼다,” 『DailyNK』, 2012.4.20., <https://www.dailynk.com/%EA%B9%80%EC%A0%95%EC%9D%80-%EA%B9%80%EC%9B%90%ED%99%8D-%EB%B3%B4%EC%9C%84%EB%B6%80%EC%9E%A5%EC%97%90%EA%B2%8C-%EA%B5%AD%EA%B2%BD%EA%B2%BD/> (검색일: 2021.10.4.).

377) “김정은, 보위부 방문해 ‘적대분자 색출’ 지시,” 『DailyNK』, 2012.10.7., <https://www.dailynk.com/%EA%B9%80%EC%A0%95%EC%9D%80-%EB%B3%B4%EC%9C%84%EB%B6%80-%EB%B0%A9%EB%AC%B8%ED%95%B4-%EC%A0%81%EB%8C%80%EB%B6%84%EC%9E%90-%EC%83%89%EC%B6%9C/> (검색일: 2021.10.4.).

김정일 동상 제막식이 있었다.³⁷⁸⁾ 두 인물의 동상이 세워진 것은 2012년 10월 김일성종합군사대학 이후 두 번째였다. 제막식에서 김원홍은 연설했다. 김원홍은 2014년 3월 보위부 청사 내에서 당 간부, 인민보안성 및 인민력부 장성 30명을 총살했다.³⁷⁹⁾ 이 사건은 김정은이 김원홍에게 2013년 12월경, 장성택 종파 일당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전까지 청산하라고 한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종파 청산의 이행 속도가 느리다고 김원홍을 심히 질책했다.

장성택 숙청 이후, 국가안전보위부 내부에서는 분란이 있었다.³⁸⁰⁾ 그 하나는 장성택의 당 행정부에 빼앗긴 국가안전보위부 이권을 되찾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부장인 김원홍에 대한 불만이 존재했다. 둘째, 보위부의 주도권을 놓고 보위사령관 출신 외부 사람인 부장 김원홍과 보위부 내 2인자이자 원래 보위부 출신인 정치국장 김창섭 사이의 알력이 존재했다.

국가안전보위부 내부에는 장성택에게 빼앗긴 무역회사를 찾지 못한 것을 두고 김원홍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장성택이 관장하던 행정부의 '54부'가 해체됐고, 산하 무역회사들은 형식상 내각으로 넘어갔다.³⁸¹⁾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자금

378) “北, 보위대학에 金부자 동상 제막...김정은 충성 강조,” 『DailyNK』, 2014.11.19., <<https://www.dailynk.com/%E5%8C%97-%EB%B3%B4%EC%9C%84%EB%8C%80%ED%95%99%EC%97%90-%E9%87%91%EB%B6%80%EC%9E%90-%EB%8F%99%EC%83%81-%EC%A0%9C%EB%A7%89%EA%B9%80%EC%A0%95/>> (검색일: 2021.10.4.).

379) “김정은 간부사업은 너무 즉흥적,” 『자유아시아방송』, 2014.5.2.,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news_analysis/sisakorea-05022014101725.html> (검색일: 2021.10.4.).

380) “대홍단 감자연구소 우량품종 개발,” 『자유아시아방송』, 2014.2.24; “북 국가안전보위부 갈등 심화,” 『자유아시아방송』, 2014.3.14.,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nk_now/nktoday-02242014110107.html> (검색일: 2021.10.4.).

381) 장성택 숙청 후 그가 관장하던 이런 재배분에 관련해서, 다음 참조. “北, 수산물 등

담당 부서인 노동당 39호실이 이들 무역회사를 관리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장성택 숙청에 공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국가안전보위부가 관장하던 무역회사인 신흥무역을 되찾지 못했다. 또한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후방총국 소속 두 개의 수산사업소가 부리던 원양어선 4척이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산하 수산관리국에 넘어갔다.

한편 2012년 4월 최룡해는 당 간부 출신이지만 차수 계급을 받고 총정치국장에 임명됐다. 그의 임명과 활동은 군부 내에서 큰 반발에 직면했다. 총정치국이 앞장서 군부를 선군 원칙에서 선당 원칙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2012년 7월 15일 군부 내 유력자인 총참모장 리영호가 숙청됐다. 이후 군부 재편은 탄력을 받고 가속화됐다. 리영호 숙청 직후, 김정은은 7·29 극비 방침을 내고, ‘당의 영도체계에 도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고 어떤 직위에 있든 추호도 용서치 말라’고 했다.³⁸²⁾ 이 방침에 의거, 당시 당과 군의 고위 간부 및 지방 간부들에 대한 대량 교체가 진행됐다. 2013년 2월에는 중앙당 조직지도부가 군단과 사단에 당 생활지도소조를 파견했다.³⁸³⁾ 당 생활지도소조는 군부 내에 만연한 관료주의와 권력남용, 그리고 파벌 조성 등을 전면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 상당 수의 장성들이 해임·교체됐다.

총정치국장 최룡해의 역할에 대한 군부의 불만은 리영호 숙청 이

경제이권 사업 군부로 대거 이동,” 『서울신문』, 2013.12.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223004010>> (검색일: 2021.10.4.); “김정은·軍 잇단 이상기류… 숙청 리영호 온천 연금,” 『조선일보』, 2012.11.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19/2012111900203.html> (검색일: 2021.10.4.).

382) “김정은, 당·군 대대적 물갈이 지시,” 『자유아시아방송』, 2012.11.2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military-11292012091627.html> (검색일: 2021.10.4.).

383) “김정은, 군부 힘빼기 ‘특별 조사팀’ 가동,” 『자유아시아방송』, 2013.2.6., <https://www.rfa.org/korean/in_focus/militarypower-02062013162022.html> (검색일: 2021.10.4.).

후에도 지속했다.³⁸⁴⁾ 불만의 내용은 그가 군대 내 관료주의와 족벌주의를 척결한다는 이유로 사찰 조직을 만들어 파견하고, 능력 있는 군사 지휘관들을 대거 바꾸고 있다는 것, 군 병중에 상관없이 장교들을 마구잡이로 배치함으로써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것 등이었다. 최룡해가 군대 내에 김정은 위대성 선전을 위한 예술선전대를 대대적으로 조직한 것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총정치국장 최룡해는 2014년 5월 황병서로 교체됐다. 신임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1990년대부터 조직지도부에서 군사 분야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2005년 5월부터 조직지도부 부부장, 2014년 4월부터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었다. 최룡해가 교체된 이유로 몇 가지 추정이 존재했다. 첫째, 군의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³⁸⁵⁾ 김정은 제1비서는 2014년 1월 인민무력부 후방총국을 방문하고 군인들의 식생활 문제 해결에 관해 토의했고, 2월에 최룡해에 책임을 물어 ‘사상검토’ 처분을 내렸다. 4월에는 향공부대 시찰에서도 같은 이유로 최룡해를 혹독하게 비판했고, 결국 최룡해가 총정치국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정은은 새로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황병서에게 장교들이 후방물자를 빼돌리지 말도록 하며, 만약 부대에서 영양실조가 발생하면 지휘관들을 무조건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둘째, 주민들 사이에는 최룡해가 김정은의 손전화 ‘1호 전화’를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³⁸⁶⁾ 셋째, 김정은이

384) “북 군부, 최룡해 간부사업에 불만,” 『자유아시아방송』, 2013.5.17.,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choiryonghae-05172013160831.html> (검색일: 2021.10.4.).

385) “북, 장교들 군대물자 빼돌리기 엄단,” 『자유아시아방송』, 2014.6.1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popular-06192014090631.html> (검색일: 2021.10.4.).

386) “북, ‘3.12 상무’ 신설,” 『자유아시아방송』, 2014.5.19.,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nk_now/nknow-05192014103624.html> (검색일: 2021.

최룡해를 믿지 못해서 좌천했다는 것이다. 믿지 못하는 배경은 중국 은행에 예치했다는 비자금 문제 그리고 여자 문제와 관련된 부화방탕한 생활로 김정은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이다.³⁸⁷⁾ 2014년 말경이 되자 군대 내에서 총정치국장으로서 황병서보다 전임자 최룡해를 더 높이 평가하는 주장이 나왔다.³⁸⁸⁾ 황병서는 훈련뿐 아니라 후방사업(보급사업)이 순전히 형식주의적이어서 군 지휘관들로부터 불신을 당한다고 했다. 8월경 황병서가 관장하는 후방총국은 초모생(신병)들에게 군량미에서 폐기된 밀가루를 내려보냈다고 했다. 7월 말 각 군부대에 미역과 다시마가 공급되었는데, 총정치국은 이를 김정은 현지 시찰에 보여주기 위한 ‘행사용’으로 후방창고에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최룡해는 연대, 대대, 중대 순으로 위로부터 뇌물을 받으면서 검열을 했는데, 황병서는 역으로 올라가면서 아래 단위부터 뇌물을 받는 식으로 검열을 진행해서 병사들의 생활이 더 악화됐다고 한다.

2014년 5월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난 최룡해는 근로단체 비서로 재직했다. 2014년 말~2015년경, 최룡해를 비롯한 빨치산 2세대 출신의 김정은 수행이 급증했다. 특히 2014년 10월경 김정은이 발목 수술로 인한 잠행에서 재등장한 이후 수행이 급증했다. 최룡해와 오백룡의 아들 오일정이 대표적이다.³⁸⁹⁾ 최룡해는 2015년 11월경 농장

10.4.).

387) “최룡해, 돈·여자 문제로 김정은 신뢰 잃어 좌천,” 『DailyNK』, 2014.7.9., <<https://www.dailynk.com/%EC%B5%9C%EB%A3%A1%ED%95%B4-%EB%8F%88%EC%97%AC%EC%9E%90-%EB%AC%B8%EC%A0%9C%EB%A1%9C-%EA%B9%80%EC%A0%95%EC%9D%80-%EC%8B%A0%EB%A2%B0/>> (검색일: 2021.10.4.).

388) “북한군, 황병서보다 최룡해 선호,” 『자유아시아방송』, 2014.11.7.,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kmilitary-11072014091554.html> (검색일: 2021.10.4.).

389) “빨치산 2세대 김정은 수행 급증,” 『자유아시아방송』, 2015.1.15.,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secondgeneration-01152015093300.html> (검색일: 2021.10.4.).

에서 혁명화 교육을 이수하는 처분을 받았다.³⁹⁰⁾ 그 이유는 백두산 발전소 토사 붕괴 사고의 책임 때문이라고 한다.

총정치국장 황병서는 2015년 2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급했다. 그의 승급과 함께 상무위원이던 최룡해가 정치국 위원으로 강등됐다. 2016년 5월 최룡해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자격으로 권력 핵심으로 재등장했다. 그의 지위는 2017년 10월 더 상승했다. 그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앙당 조직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조직부장으로 2019년 4월까지 재직했고, 2019년 4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됐다.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 2015년 4월 30일 고사충으로 평양 부근 사격장에서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 처형됐다. 국정원은 김정은에 대한 불만 표출, 지시 불이행과 태만, 군 행사에서 즐겼고 김정은에게 말대꾸한 것 때문이라고 했다.³⁹¹⁾ 다른 소식통도 현영철이 김정은이 참가한 훈련일꾼 대회 주석단에서 즐겼으며, 이것이 총정치국장 황병서에게 발각됐다고 했다.³⁹²⁾ 그는 인민군 보위사령부에 끌려가 3일 조사를 받고, 최고사령관 명령·지시·불복종 그리고 여타 여죄에 근거하여 배신자, 반당반혁명분자로 낙인찍혔다고 했다. 북한군

390) “최룡해, 백두산발전소 사고로 해임” 『자유아시아방송』, 2015.11.24.,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choiryonghae-11242015083232.html> (검색일: 2021.10.4.).

391) “‘불경죄’ 현영철, 평양서 고사충으로 총살당해,” 『DailyNK』, 2015.5.13., <<https://www.dailynk.com/%EB%B6%88%EA%B2%BD%EC%A3%84-%ED%98%84%EC%98%81%EC%B2%A0-%ED%8F%89%EC%96%91%EC%84%9C-%EA%B3%A0%EC%82%AC%EC%B4%9D%EC%9C%BC%EB%A1%9C-%EC%B4%9D/>> (검색일: 2021.10.24.); “국정원이 밝힌 北 현영철 처형 전말 ... “불경·불충죄” 연합뉴스, 2015.5.13. <<https://www.yna.co.kr/view/AKR20150513064500001>> (검색일: 2021.10.24.).

392) “북 현영철 처형 진짜 이유는...,” 『자유아시아방송』, 2015.6.2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hyonyoungchul-06292015145551.html> (검색일: 2021.10.4.).

정치 강연은 현영철이 수령영도 거부로 처형됐다고 하면서 그를 ‘수령의 영도를 거부하고 독단과 전횡의 군벌주의자’로 40년 전의 반당 반혁명 군벌주의자인 김창봉과 비교했다.³⁹³⁾ 또 다른 간부 대상 강연 제강은 현영철이 당의 사상과 (김정은) 영도에 불만을 가졌고, 유일적 영도체제를 불신해 처형됐다고 했다.³⁹⁴⁾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은 김정은의 신임을 업고 과도한 정치적 숙청과 월권행위를 했다. 이에 따라 김원홍과 총정치국장 황병서 그리고 김영철 등과 알력과 갈등이 존재했다. 황병서와 김원홍의 갈등은 2012년 4월 보위부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됐다.³⁹⁵⁾ 김원홍은 당시 조직지도부 부부장이던 황병서 부부를 수뢰 혐의로 연행해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황병서 부인이 사망했다. 2014년 4월 총정치국장에 취임한 황병서는 9월경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를 내세워 김원홍의 아들 김철을 외화 횡령과 경제 질서 혼란 주도 혐의로 내사했다.³⁹⁶⁾ 보위사령부 조사에 따르면 김철 등은 아버지 김원홍의 권력을 내세워 북한의 지하광물을 해외에 헐값에 넘겼다고 했다. 황병서는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를 국가안전보위부와 동급으로 격상시키

393) “北, ‘현영철 수령영도 거부로 처형’ 내부강연 진행” 『DailyNK』, 2015.5.15., <<https://www.dailynk.com/%E5%8C%97-%ED%98%84%EC%98%81%EC%B2%A0-%E8%88%98%EB%A0%B9%EC%98%81%EB%8F%84-%EA%B1%B0%EB%B6%80%EB%A1%9C-%EC%B2%98%ED%98%95-%EB%82%B4/>> (검색일: 2021.10.4.).

394) “北, ‘현영철 처형’ 강연제강 배포...이의 5명도 처형.” 『DailyNK』, 2015.5.19., <<https://www.dailynk.com/%e5%8c%97-%ed%98%84%ec%98%81%ec%b2%a0-%ec%b2%98%ed%98%95-%ea%b0%95%ec%97%b0%ec%a0%9c%ea%b0%95-%eb%b0%b0%ed%8f%ac%ec%9d%b4%ec%99%b8-5/>> (검색일: 2021.10.4.).

395) “황병서, 공포정치 무서워 김원홍 적극 견제하기 힘들어,” 『DailyNK』, 2015.7.19., <<https://www.dailynk.com/%ED%99%A9%EB%B3%91%EC%84%9C-%EA%B3%B5%ED%8F%AC%EC%A0%95%EC%B9%98-%EB%AC%B4%EC%84%9C%EC%9B%8C-%EA%B9%80%EC%9B%90%ED%99%8D-%EC%A0%81%EA%B7%B9/>> (검색일: 2021.10.4.).

396) “김정은 핵심 측근끼리 권력 암투,” 『동아일보』, 2014.9.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40902/66156795/1>> (검색일: 2021.10.4.).

고자 했다.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김원홍은 국가안전보위부가 김정은 경호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황병서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2015년 봄 현영철 숙청 직후 황병서 때문에 김원홍의 부하 4명이 처형됐다. 처형 이유는 김정은 참석행사에 불참했다는 것이었는데, 불참 이유는 황병서가 이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서였다. 김영철의 정찰총국이 영화사 소니를 인터넷상에서 공격하고, 그에 따라 미국이 보복하자, 이를 공작사고로 간주하고 김정은에게 직보했다.³⁹⁷⁾ 그 결과 김정은이 김영철을 강등 조치했다. 김원홍은 주도권을 놓고 갈등하던 보위부 2인자 김창섭 정치국장과 그 주변인들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측근을 앉혔는데, 이는 보위부를 개인 사조직화하는 것이라 비난받았다.

김정은의 신임과 김원홍의 위세를 등에 업고 보위부의 위상이 타 기관에 비해 높아졌고 조직과 업무 영역이 팽창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2015년 4월경 탈북자와 그 가족을 전문 감시하는 특별 부서를 조직했다.³⁹⁸⁾ 담당 인력은 중앙과 지방을 합쳐 400여 명에 달했다. 보위부 위상 강화의 피해자는 인민보안부였다.³⁹⁹⁾ 2016년 초 보위부는 그간 인민보안부에서 담당하던 일반경제사범 조사까지 자기 업무로 만들었다. 그간 10호 초소, 그리고 109 상무와 같은 합동 단속반은 보위부, 보안부, 인민군 보위사령부 합동으로 운영했는데, 여기서도 보위부가 중심이 되면서 다른 기관은 보조역할만을 하게 됐다. 109 상무는 소속은 인민보안부였지만, 행정책임자는 도 보안

397) “북 보위부장의 끝은 좋지 않다,” 『자유아시아방송』, 2015.6.26.,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news_analysis/sisakorea-06262015100920.html> (검색일: 2021.10.4.).

398) “북 보위부, 탈북자 감시 전담 400명,” 『자유아시아방송』, 2015.4.10.,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surveillance-04102015153206.html> (검색일: 2021.10.4.).

399) “북 보위부, 권한 더 막강해져,” 『자유아시아방송』, 2016.3.18.,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ch-03182016093532.html> (검색일: 2021.10.4.).

국장이었고 정치책임자는 도당 조직부 부부장들이었다.⁴⁰⁰⁾

뇌물 대상도 1차적으로 보위부 요원이었고 인민보안부 요원은 무시됐다. 일반주민들은 김정은 다음의 2인자로 총정치국장 황병서가 아니라 보위부장 김원홍을 꼽았다. 젊은 보위부원 앞에서 늙은 보안부 간부가 절절매게 되는 상황이 등장했다. 2016년에 들어서자, 김원홍 세력이 과거 장성택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말까지 나왔다.⁴⁰¹⁾ 보위부는 2012년 김정은의 지시로 외화벌이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런데 2015년 인민보안부가 가지고 있던 109 상무와 산하 외화벌이 기관인 대부 무역을 넘겨받아 돈벌이에 나섰다. 2015년 김원홍은 인민보안부가 준법 확립 실패, 범죄의 온상화, 그리고 간부들과 범죄자 결탁이라는 구실로 인민보안부의 권한과 이권을 빼앗았다. 2016년 보위부는 본부에 국내외 해외 컴퓨터망을 감시하는 조직도 신설했다. 보위부는 이를 위해 타 기관에서 일하던 컴퓨터 전문가를 끌어들이었다. 보위부는 국내 비밀보안과 해외 비밀작전을 이유로 국가보위부 내에 해킹부대를 신설했다. 해킹부대는 통일전선부와 정찰

400) “김원홍 숙청의 내막,” 『자유아시아방송』, 2017.3.13.,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nk_now/nktoday-03132017101131.html> (검색일: 2021.10.24.), 109 상무의 구성과 운영책임에 대해서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먼저 109 상무가 2004년 인민보안부 산하에 최초 조직되었고, 이후 그 구성이 5대 사법기관 즉 당, 보위부, 보안부, 검찰소, 재판소로 확대했다는 데는 의견일치가 있다. 그런데 그간 인민보안부 소속이던 109 상무가 2015년경 보위부 소속으로 바뀌고, 업무영역도 과거의 불법 영상물 유통과 시청의 단속에 참가하여 마약단속도 하게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다른 견해에 따르면, 여러 단계 합동으로 조직된 단체는 당 조직이 책임을 지며, 109 상무도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의 견해로, “북 109 상무, 단속 대상 확대,” 『자유아시아방송』, 2015.10.23.,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crackdown-10232015102305.html> (검색일: 2021.10.24.); 후자의 견해로, “북한 사상 미디어 통제 검열 조직 ‘109 상무’ 문건,” 조선닷컴, 2018.11.22., <<http://pub.chosun.com/client/news/print.asp?cate=C01&cate=&nNewsNumb=20181130063>> (검색일: 2021.10.24.).

401) “보위부 세력 확장 도를 넘어,” 『자유아시아방송』, 2016.3.21.,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nk_now/fe-ms-03212016095737.html> (검색일: 2021.10.4.).

총국만이 가지고 있던 부서였다. 아울러 김원홍은 내부적으로 기강 해이를 빌미로 정치부 부부장 임동철을 처형하도록 하고, 이에 불만을 표시한 지방지도과 간부도 마약 복용과 성문란 혐의로 처형했다. 이러한 여러 일 때문에 보위부가 김원홍의 사조직화되어 간다는 불만들이 나왔다. 국가안전보위와 인민보안부는 주민통제 주도권을 놓고서도 암투를 벌였다.⁴⁰²⁾

2016년 3월 말까지 양강도에서 137세대가 가족 동반으로 탈북했다. 보위부는 3월 20일 도별로 ‘내 조국의 국경과 해안을 철옹성으로 지키자’라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채택된 충성의 결의문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인민보안부 간부들이 볼 때, 그 의도는 탈북 단속 책임이 있는 인민보안부 산하 조직을 보위부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라 생각됐다. 국가보위부는 결의대회에서 국경과 해안경비를 자처했는데, 두 가지 모두 인민보안부 산하 인민내무군 소속이었다. 즉 결의문의 내용은 인민내무군을 국가보위부 산하로 옮긴다는 것이었다.

김정은의 ‘보위부 힘 실어주기’가 어디까지 갔는가는 2016년 초 보위부가 북창 화력설비 교체 이권을 따내는 것에서 나타났다.⁴⁰³⁾ 북창화력연합기업소는 북한에서 가장 큰 발전소이고, 평양시 일부와 자강도 군수공장에 전력을 공급했다. 이 발전소의 설비교체는 큰 이권이었기 때문에 이를 누가 관장하는가를 둘러싸고 권력기관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김정은은 김원홍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국가보위부가 이 공사를 맡도록 위임했다. 김원홍은 산

402) “가족탈북 급증에 보안부 사면초가,” 『자유아시아방송』, 2016.4.6.,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ms-04062016131733.html> (검색일: 2021.10.4.).

403) “김정은, 발전설비 교체 보위부에 위임,” 『자유아시아방송』, 2016.3.2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ms-03292016104626.html> (검색일: 2021.10.4.).

하 무역기관인 대부무역을 통해 교체용 신규 화력터빈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들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창화력연합기업소 노동자와 기술일꾼, 보위대학 학생 1천 명을 동원하면, 2016년 6월부터 8월 말까지 2개월 동안, 10만Kw 용량의 화력터빈 20기를 전부 교체하고 열설비 보수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장담했다. 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 전력공업성의 상부기관인 내각, 그리고 청년동맹, 인민군 총정치국, 인민보안부, 국가보위부 등이 경쟁을 해왔었다. 각 부처는 상위 부처를 동원하여 보수공사를 따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내각은 노동당 정치국, 인민군 총정치국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인민보안부는 노동당 7부, 청년동맹은 노동당 근로단체부, 국가보위부는 김정은 서기실을 동원했다. 이 경쟁의 와중에서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를 선택했다.⁴⁰⁴⁾

보위부는 북창화력발전소 보수에 필요한 설비를 수입하기 위한 외화를 내부 직원들에 할당하여 모금했다.⁴⁰⁵⁾ 각 시군 보위부장급 간부는 1만 달러, 과장급 간부는 1천 달러, 일반대원은 100달러씩 4월 10일까지 무조건 바쳐야 했다. 아울러 보위부는 김정은에게 올해 농사용 비료 수입을 책임지겠다고 장담했다가 자금 부족에 직면했다. 이에 간부들이 수감자 가족들에게 형벌을 감해주는 조건으로 3천 달러부터 1만 달러까지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보위부가 이러저러한 다른 이유로 인민들의 재산을 약탈해갔다.⁴⁰⁶⁾

404) 그런데 이와 다른 스토리도 존재한다. 국가안전보위부가 내각 전력성이 담당한 북창화력발전소 개보수 공사권을 탈취했는데, 이에 격분한 총정치국장 황병서가 이 사실을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11군단 병력을 동원하여 현장지휘부를 밀어버렸다고 했다. “북 보안부·보위부 왜 성으로 바뀌었나?,” 『자유아시아방송』, 2017.4.3.,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nk_now/nktoday-04032017094547.html> (검색일: 2021.10.4.).

405) “북 보위부 외화상납 독촉에 부원들도 불만,” 『자유아시아방송』, 2016.4.8.,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ms-04082016102837.html> (검색일: 2021.10.4.).

7차 당대회 며칠 전 중국 절강성 닝보시 소재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국으로 망명했다. 이 사건으로 체면이 상한 보위부는 김정은에게 추가 외화 상납을 통해 체면을 만회하고자 했다. 보위부는 돈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만들어 씩씩 재산 일부를 압수하되, 그들에게 처벌을 내리지는 않는 방식으로 인민들을 수탈했다. 예를 들어, 돈주의 집을 수색해 불법 회계장부를 압수하고 가택 수색에서 나온 자금을 압류하고, 돈 찾는 시도를 하지 말도록 겁을 준다든지, 불법 환전꾼의 집을 습격 수색하여 보유 현금을 압수한다든지, 불법 사금 채취 돈주의 작업장과 가택을 수색하여 보유 자금과 귀금속을 압수한다든지의 방법이다.

2016년 6월 북한 헌법 개정에 의해 그간 국가안전보위부가 국가보위성, 2010년 이래 인민보안부는 인민보안성으로 개칭됐다. 인민보안성은 2020년 5월 사회안전성으로 재차 개명됐다. 국가안전보위부는 1993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이후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다. 사회안전성은 2000년에 인민보안성으로 개명되었는데, 이후 형식상으로는 내각 소속이나 실제로는 3대 무력기관의 하나로서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와 함께 국방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왔다. 두 기관은 공히 2016년 국무위원회 산하로 바뀌면서, 각각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으로 개칭됐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부가 성으로 되는 것은 지위 격하를 의미했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명칭 유지 시절, 김원홍 부장과 최부일 부장은 내각 총리 박봉주에 준하는 생필품과 식료품을 중앙으로부터 공급받았다. 그러나 부가 성으로, 부장이 상으로 바뀌면서는 내각 산하 상과 같은 수준의 공급을 받게 됐다. 이처럼 양자의 지위가 격하된 이유는 양자가 사법권을 둘러싸

406) “북 보위부, 주민 강탈행위 극성,” 『자유아시아방송』, 2016.6.13.,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nk_now/northkoreanow-06132016092903.html> (검색일: 2021.10.4.).

고 격한 권력 암투를 벌이는 것에 대한 징벌 때문이었다.⁴⁰⁷⁾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었다.⁴⁰⁸⁾

김정은 집권 이래 김원홍 아래서 국가안전보위부의 위세가 올라가던 시절, 국가안전보위부는 인민보안부의 사법권 일부를 빼앗아 행사했고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인민보안부 간부들을 감시하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보복성으로 죄를 만들어 씌우는 식으로 간부사업에 개입했다. 이에 대해 조직지도부가 국가안전보위부에 여러 차례 경고했으며, 김원홍의 도를 넘어서 행위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공히 성으로 격하된 직접적 계기는 2016년 6월초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송림시를 연결하는 도로에서 국가안전보위부 10호 초소와 인민보안부 기동타격대 사이에 발생한 패싸움 때문이었다. 10호 초소는 노동당 변호관이나 인민군 변호관을 달지 않은 모든 운전기재를, 그리고 행인의 짐과 몸을 수색했다. 그런데 사리원시와 송림시 사이의 10호 초소에서 보위부와 보안부의 요원들 사이에 패싸움이 발생했다. 패싸움의 발단은 보위부 군인들이 인민보안부 기동타격대 자동차를 가로막고 많은 병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지휘관들의 몸을 살살이 수색한 것이었다. 이에 분노한 보안부 기동타격대 병사들이 보위부 초소원을 집단 구타하고 기물을 파괴했다. 보안부 기동타격대는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당황한 10호 초소 군인들이 공중에 대고 자동보총(소총)을 난사했다. 보안부 요원들은 평소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상자는 없었다. 그러나 이 싸움으로 국가안전보위부 10호 초소 군인들 9명이 중상을 입었다. 인민군 경무국이 개입하여 싸움

407) “북 보안부·보위부 왜 성으로 바뀌었나?,” 『자유아시아방송』, 2017.4.3.,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nk_now/nktoday-04032017094547.html> (검색일: 2021.10.4.).

408) 위의 글.

이 겨우 중지됐다. 이 사건으로 중앙당 조직지도부 검열이 시작되었는데, 김원홍은 612 상무를 동원해 가짜 진술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많은 지방당 간부들을 숙청했다.

2016년 7월경, 주요 간부에 대한 처형과 혁명화 조치가 있었다.⁴⁰⁹⁾ 내각 교육부총리 김용진(63·전 교육상)은 회의에서 졸았다거나 또는 안경을 닦았다는 이유로 7월 처형됐다. 통일전선부장 김영철(70)은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지방 농장에 가서 혁명화 교육 처벌을 받았다. 이유는 그가 무리하게 통일전선부 권한의 확장을 추진하는 등 권력 남용 때문이라 했다.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최휘(61)도 5월 말 이후 지방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았다.⁴¹⁰⁾

김원홍과 국가안전보위성의 권세와 월권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2016년 12월 조직지도부는 국가안전보위성을 검열했다.⁴¹¹⁾ 검열 주체는 조직지도부 6과인데, 이 부서는 국가안전보위성의 간부사업과 활동을 지휘하는 감독기관이었다. 김원홍은 2017년 1월까지 검열을 받고 연금되었고, 보위성 부상급 간부 5명도 고사총으로 처형됐다.⁴¹²⁾ 또한 보위성은 김정일을 모실 자격이 없다고 하여, 보위성 내의 김정일 동상도 치워졌다. 김원홍은 5과 반동 혐의로 체포됐다는 설도 있었다. 5과는 김정은의 호위와 사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위한 인원을 관리하는 부서였기에, 5과 반동은 체제전복을 모의했

409) “천안함 폭침 주역 김영철도 지방서 혁명화 처벌받고 복귀,” 『중앙일보』, 2016.9.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0531214#home>> (검색일: 2021.10.4.); “‘닭장’에서 사육되는 북한 간부들,” 『자유아시아방송』, 2016.9.2.,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seoullife-09022016091008.html> (검색일: 2021.10.4.).

410) 위의 글.

411) “북 국가안전보위성 깜짝 검열 받아,” 『자유아시아방송』, 2017.1.17.,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jn-01172017131722.html> (검색일: 2021.10.4.).

412) “김원홍, 1월 말까지 조사받고 연금 중,” 『자유아시아방송』, 2017.2.27.,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housearrest-02272017080129.html> (검색일: 2021.10.4.).

다는 것을 의미했다.⁴¹³⁾

김원홍 실각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됐다.⁴¹⁴⁾ 조직지도부 간부 6과의 2016년 12월 초기 검열은 국가안전보위성 612 상무만을 상대로 했다. 612 상무는 김정은이 2013년 은하수관현악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날짜에서 기원했다. 은하수관현악단 사건은 그해 연말 장성택 처형사건으로 번졌다. 국가안전보위성은 장성택 잔당 청산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인민보안성 산하에 있던 109(612) 상무를 2014년 2월 빼앗았다. 612 상무는 처음 조직될 때부터 장성택 여독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당 간부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안전보위성은 612 상무를 통해 자신들에게 불만을 가진 간부들과 복종하지 않은 간부들을 가차 없이 숙청했다. 2016년 10월부터 11월 사이 국가안전보위성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북도에서 30여 명이 넘는 도와 시의 비서급, 부장급 당 간부들을 숙청했다. 이유는 함경북도 수해 복구 물자를 횡령했다는 것이었다. 조직지도부 당 생활지도과는 612 상무를 해체하고 612 상무에 의해 처형되었거나 숙청된 간부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벌였다. 김원홍 보위상 해임 후 중앙당 검열단이 각 지역에 파견되어 관련 간부들을 해임하고 철직하는 데 주력했다. 이 검열은 특히 양강도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7명이 해임됐다. 양강도 보위성이 양강도 근로단체부장에게 누명을 씌웠는데, 이를 김정은에게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다.⁴¹⁵⁾

413) “북 간부들, 김원홍 혐의에 관심 집중,” 『자유아시아방송』, 2017.3.23.,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wonhong-03232017085435.html> (검색일: 2021.10.4.).

414) “북, ‘612 상무’ 월권행위로 김원홍 숙청,” 『자유아시아방송』, 2017.3.14;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purgekim-03142017095258.html> (검색일: 2021.10.24.); “김원홍 숙청의 내막,” 『자유아시아방송』, 2017.3.13.,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nk_now/nktoday-03132017101131.html> (검색일: 2021.10.4.).

이와 병행하여, 조직지도부는 평양과 지방 도, 시, 군 보위성 책임 간부들을 평양으로 연달아 소환하여 집중검열을 진행했다.⁴¹⁶⁾ 국가 보위성 사건의 여파는 인민군 보위부까지 미쳤다. 각 군단 보위부들에 대한 총정치국의 강도 높은 검열이 시작되면서 군 지휘관들도 불안감에 떨었다.⁴¹⁷⁾ 일반 주민들도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김정은이 조직 자체를 초도화시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7년 3월 말 경 인민보안성이 4월 1일부터 전국적 범위에서 이동통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전국에 하달됐다.⁴¹⁸⁾ 이 조치는 과거 국경 인근 주민들에게만 적용하던 것이었다. 이 조치는 인민보안성이 국가안전보위성이 위기에 빠진 사이 그동안 빼앗긴 과거의 사법 권한을 장악할 목적으로 취해진 것으로 인식됐다.

속청된 것으로 알려졌던 김원홍이 2017년 4월 15일 대장 계급장을 달고 김일성 생일 열병식에 등장했다.⁴¹⁹⁾ 그는 2017년 5월부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임명됐다. 김원홍은 2016년 11월 말부터 조

415) “김원홍, 김정은 지시 무시로 철직돼…양강도서 7명 해임,” 『DailyNK』, 2017.3.6., <<https://www.dailynk.com/%EA%B9%80%EC%9B%90%ED%99%8D-%EA%B9%80%EC%A0%95%EC%9D%80-%EC%A7%80%EC%8B%9C-%EB%AC%B4%EC%8B%9C%EB%A1%9C-%EC%B2%A0%EC%A7%81%EB%8F%BC%EC%96%91/>> (검색일: 2021.10.4.).

416) “김원홍 해임’ 후폭풍…보위성 책임간부 평양 ‘출소환,’” 『DailyNK』, 2017.3.23., <<https://www.dailynk.com/%EA%B9%80%EC%9B%90%ED%99%8D-%ED%95%B4%EC%9E%84-%ED%9B%84%ED%8F%AD%ED%92%8D%EB%B3%B4%EC%9C%84%EC%84%B1-%EC%B1%85%EC%9E%84%EA%B0%84%EB%B6%80/>> (검색일: 2021.10.4.).

417) “북 주민, 김정은의 속청정치에 반감,” 『자유아시아방송』, 2017.4.5.,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purge-04052017090051.html> (검색일: 2021.10.4.).

418) “북, 전국적으로 주민이동 강력 통제,” 『자유아시아방송』, 2017.3.30.,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peoplemoving-03302017091404.html> (검색일: 2021.10.4.).

419) “북 간부들, 김원홍 출현에 당혹감,” 『자유아시아방송』, 2017.4.17.,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nk_now/nktoday-04172017093120.html> (검색일: 2021.10.4.).

직지도부 조치에 따라 호위사령부 보위국에 연금되어 조사받고 있었다. 김원홍의 재등장에 인민보안성이 가장 놀랐다. 만약 김원홍이 국가보위상으로 복귀하면 인민보안성이 큰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원홍 재등장에 대해서는 김원홍 숙청 이후에 국가보위성에 남아 있던 간부들도 위험을 느꼈다. 이들은 김원홍 일당 숙청에 협력했을 개연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중앙당이 범죄사실이 명백한 김원홍도 함부로 제거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해졌을 가능성에 대해 격앙됐다. 조직지도부 검열로 국가안전보위성이 초토화되었지만, 김원홍을 조사하던 조직지도부가 오히려 자중지란을 겪으면서 김원홍에 대한 처분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⁴²⁰⁾ 사건이 이렇게 흘러간 배경은 다음과 같았다. 조직지도부 검열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위상 김원홍은 노동당 지방조직 간부들 사이에 심각한 개인숭배, 지방할거주의가 존재함을 고발했다. 그런데 개별 간부에 대한 숭배, 중앙집권에 반하는 지방할거주의는 최고지도부가 역사적으로 가장 경계해온 종파주의였다. 조직지도부 지방지도과는 지방당 조직의 이러한 종파행위를 근절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김원홍이 이를 고발했다. 따라서 김원홍은 최고지도부를 수호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김원홍 해임 사건 이후 민습 수습용 조치 또는 상황이 등장했다. 첫째, 김정은은 2017년 1월 말 ‘인권유린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보위성에 하달했다. 그 영향으로 보위부가 과거처럼 뇌물을 받고도 강압과 협박을 하던 식으로 주민을 수탈하는 것 대신, 주민에게 뇌물을 애원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경향이 등장했다.⁴²¹⁾ 예를 들어 회령

420) “노동당 내분으로 번지는 김원홍 사건,” 『자유아시아방송』, 2017.4.26.,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ms-04262017100423.html> (검색일: 2021. 10. 4.).

시 보위원은 한국과 통화하다 체포된 주민을 거액의 상납을 받고 풀어 주는 대신 전용차량으로 집까지 태워다 주었다. 김원홍 해임 이후 국가보위성 위상이 하락했고, 그에 따라 보위원들은 배급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한편에서 외부 통화자들에 대한 강경대응에 나서는 식으로 뒷돈 챙기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한편, 주민 불만을 고려하여 상납을 받으면서도 과거와 비교할 때 느슨한 모습을 연출했다.

둘째, 김원홍 해임사건의 여파로 공안 및 사법 기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당의 권한이 확대됐다.⁴²²⁾ 김원홍 사건 이후 김정은은 2017년 6월경 당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라는 내부 지시를 내렸다. 이후 국가보위성은 물론이고 각 도 검찰소의 권한도 대폭 축소되었고, 검찰소와 도 보안국의 모든 결정권이 해당 지역 당 위원회로 이관됐다. 일반 주민들은 이러한 조치를 환영했다. 그 간 보안원, 보위원, 검사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상납금 요구와 같은 횡포를 부려왔기 때문이다.

셋째, 2017년 10월 중순부터 증거 제일주의의 원칙에 바탕하여 김정은 집권 이후 숙청된 정치범들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됐다.⁴²³⁾ 김

421) “거침없이 자금 강탈하던 北보위원, 최근엔 굶실댄다는데...,” 『DailyNK』, 2017.3.14. <<https://www.dailynk.com/%EA%B1%B0%EC%B9%A8%EC%97%86%EC%9D%B4-%EC%9E%90%EA%B8%88-%EA%B0%95%ED%83%88%ED%95%98%EB%8D%98-%E5%8C%97%EB%B3%B4%EC%9C%84%EC%9B%90-%EC%B5%9C/>> (검색일: 2021.10.4.); “北보위부, 1만 위안 뇌물에 단속주민 집까지 태워다 줘,” 『DailyNK』, 2017.11.24., <<https://www.dailynk.com/%e5%8c%97%eb%b3%b4%ec%9c%84%eb%b6%80-1%eb%a7%8c-%ec%9c%84%ec%95%88-%eb%87%8c%eb%ac%bc%ec%97%90-%eb%8b%a8%ec%86%8d%ec%a3%bc%eb%af%bc/>> (검색일: 2021.10.4.).

422) “도 검찰소·보위성의 모든 결정권 당 위원회로 넘어가,” 『DailyNK』, 2017.6.9., <<https://www.dailynk.com/%EB%8F%84-%EA%B2%80%EC%B0%B0%EC%86%8C%EB%B3%B4%EC%9C%84%EC%84%B1%EC%9D%98-%EB%AA%A8%EB%93%A0-%EA%B2%B0%EC%A0%95%EA%B6%8C-%EB%8B%B9/>> (검색일: 2021.10.4.).

423) “북, 처형 숙청된 정치범들 재조사,” 『자유아시아방송』, 2017.10.30.,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executionpurge-10302017101108.html> (검색일: 2021.10.4.).

정은은 당 중앙위 정무국이 사법기관들의 무분별한 월권행위를 파악하고도 무시한 것에 대해 크게 화를 냈다고 했다. 그는 2016년에 해체된 국가보위성 산하 612 상무를 재조사하며, 자신의 집권 이후 사법기관들이 정치범으로 몰아 처형한 주민과 숙청한 간부들의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7월 초부터 인민반회의에서는 정치범 신고는 충분한 증거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특히 최고존엄 관련 범죄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불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천명됐다. 이러한 동향은 그간 정치범 처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김원홍 전 국가보위부장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이 있었다.

2017년 10월 7일에 개최된 당 중앙위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최룡해는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됐다. 최룡해의 주도하에 11월부터 조직지도부가 총정치국을 검열했다. 이러한 검열은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정원에 따르면, 검열의 명분은 당에 대한 총정치국의 불손한 태도 때문이었다.⁴²⁴⁾ 황병서는 10월 13일 이후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았다. 조직지도부의 총정치국 검열은 2017년 10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다. 그 결과 (2018년 2월 현재) 황병서는 총정치국장장에서 해임되어 고급당학교에서 사상교육을 받고 있었고, 제1부국장이던 김원홍은 해임·출당 처분되었고, 부국장 조남진과 염철성 등은 강등 후 혁명화 조치되었고, 다수 간부가 처형됐다.⁴²⁵⁾ 검열이 촉발된 직접적 계기는 군인들의 월동준비 소홀이었다.⁴²⁶⁾ 김정은은 2017년도 동계 훈련을 앞두고, 적들의 도발이 예

424) “국정원 ‘北, 軍총정치국 20년만에 검열…황병서 등 처벌첩보,’” 『연합뉴스』, 2017. 11. 20., <<https://www.yna.co.kr/view/AKR20171120127551001>> (검색일: 2021. 10. 4.).

425) “국정원 ‘북, 총정치국 검열로 황병서·김원홍 해임…간부 다수 처형,’” 『한겨레』, 2018. 2. 5.,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30857.html>> (검색일: 2021. 10. 4.).

426) “인민군 총정치국 검열 배경은 외화벌이 기관 장악 때문,” 『자유아시아방송』, 2017. 11. 27.,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ms-11272017092233.html>

상된다고 하면서 전투준비태세와 월동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간부들에 당부했었다. 그런데 간부권을 악용해 군부 외화벌이 기관과 자금줄을 장악하고 있던 총정치국은 병사들의 겨울 군복을 마련할 자금도 보장하지 않았다. 인민군 보위부가 이를 김정은에게 보고했고, 김정은이 조직지도부에 총정치국을 검열하도록 지시했다.⁴²⁷⁾

그런데 조직지도부의 총정치국 검열의 핵심 목표가 김원홍이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⁴²⁸⁾ 국가보위성이 2016년 말 2017년 초 조직지도부로부터 검열을 당한 이유는 612 상무를 통해 당 간부들을 별 근거 없이 숙청했고, 이것을 상부 기관인 조직지도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검열의 결과, 보위성 부부장들이 해임·철직·처형을 당했는데, 보위상인 김원홍만 무사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됐다. 그 하나는 김원홍이 조직지도부에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김정은에게는 보고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김원홍을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더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김정은은 김원홍과 국가안전보위부의 말을 듣고 그동안 수많은 간부를 숙청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원홍의 잘못을 이유로 그를 숙청하면, 두 가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터였다. 즉 첫째, 김정은이 김원

(검색일: 2021.10.4.); 다른 스토리에 따르면, 총정치국 검열이 발단된 것은 총정치국 내부의 뇌물과 개인비리 때문이었다. 군 외화벌이 기관들이 대북 제재 때문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총정치국 조직부 간부들이 산하 외화벌이 기관에 무리하게 뇌물 상납을 받다가 적발되었고, 황병서와 김원홍이 이를 김정은에게 보고하는 대신 덮어버렸다. 당 조직지도부가 이를 김정은에게 보고했고, 그리하여 총정치국 검열이 시작됐다고 했다. 또한 최룡해는 황병서 및 김원홍과 오래된 원한이 있었는데, 총정치국 비리와 부정부패를 핑계삼아 최룡해가 황병서에게 반격을 가했다고 한다. “황병서 처벌은 충격이었다,” 『자유아시아방송』, 2017.12.1.,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news_analysis/sisakorea-12012017090543.html> (검색일: 2021.10.4.).

427) 위의 글.

428) “북, 조직지도부의 총정치국 검열 표적은 김원홍,” 『자유아시아방송』, 2018.2.6.,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ms-02062018084149.html> (검색일: 2021.10.4.).

흥에 휘둘린 바보 꼴이 되고, 둘째, 숙청당한 수많은 간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 문제가 대두할 것이었다. 따라서 김원흥을 숙청하자면 어떤 다른 이유를 만들어야 했고, 그 이유를 만들기 위해 김원흥을 충청치국 제1부국장으로 보냈다는 것이었다.

김원흥의 후임으로 2018년 1월 정경택이 국가보위상으로 취임했다. 2018년 2월경 국가보위성은 양강도 국경 군부대에 이례적 지시를 하달했다. 즉 국경 군부대가 당자금 확보를 위한 타 기관의 밀수에 조직 차원에서 협조하라는 것이었다.⁴²⁹⁾ 밀수 협조 대상으로 지목된 기관은 39호실 산하 금강관리국, 그리고 대외연락소 727 회사, 미림해운회사 등이었다. 미림해운회사는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결의안 2321호 제재 대상이었다. 39호실은 김정은 통치자금 관리기관이고, 대외연락소 727 회사는 대남 공작 기관이었다. 727 회사는 공작부서 요원들이 자체 자금 마련을 위한 외화벌이를 하고 있었다. 국가보위성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당 소속 무역회사의 불법 밀수를 돕는 일은 드문 일로서, 김정은의 직접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됐다. 본연의 임무가 밀수 단속인 군부대들이 이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무역회사의 밀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기관이 됐다. 양강도 국경경비대 25여단과 인민군 제10군단 산하의 혜탄(지역주둔)중대는 금강관리국을, 강안(지역 주둔)중대는 대외연락소 727 회사를, 삼수중대는 미림해운회사를 도왔다. 국경부대들은 담당 무역회사들에게 차량을 보장하고 밀수물자를 운송하며, 보호하는 주동적 역할을 수행했다. 밀수에 차질이 있는 경우 국경주둔 군부대 간부들이 책임까지 져야 했다. 과거 관행은 밀수를 묵인하는 대가로

429) “北국가보위성, 통치자금 확보 밀수에 국경부대 협조 지시,” 『DailyNK』, 2018.2.28., <<https://www.dailynk.com/%E5%8C%97%EA%B5%AD%EA%B0%80%EB%B3%B4%EC%9C%84%EC%84%B1-%ED%86%B5%EC%B9%98%EC%9E%90%EA%B8%88-%ED%99%95%EB%B3%B4-%EB%B0%80%EC%88%98%EC%97%90/>> (검색일: 2021.10.4.).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국가보위성, 국경경비대, 무역회사가 나누는 것이었다. 2019년 12월에 7기 5차 당 중앙위가 열리기 직전 김정은은 정경택에게 보위성에 김정일 동상을 다시 세울 것을 지시했다.⁴³⁰⁾ 김정일 동상은 2012년 10월 김원홍 취임 후 세워졌다가, 2016년 말 2017년 초 조직지도부 검열과 관련해 김정은의 지시로 해체됐다. 그러다가 다시 세우라 지시가 내려졌다. 이는 김정은이 보위성을 다시 신임하니 공을 세우라는 뜻이었다.

2018년 2월에는 호위사령부가 조직지도부 검열을 받고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을 당했다.⁴³¹⁾ 호위사 정치위원 김성덕 상장이 재정담당 소좌(여성, 29세)로부터 뇌물과 성상납을 받은 혐의 때문이었다. 해당 소좌는 사령부 산하 동양무역회사 책임자와 함께 11월 강건군 관학교 사격장에서 처형됐다. 이 사건으로 정치위원 김성덕과 윤정린 호위사령관(대장)이 해임되어 평남 개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이후 김정은은 호위사령부의 권한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경호부대 3개를 추가로 신설했다.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는 당 중앙위 호위처, 국무위원회 경위국, 호위국, 호위사령부 순으로 4개의 호위기관이 참가했다.⁴³²⁾ 당 중앙위 호위처는 ‘김정은 동지를 결사 호위하는 친위대원’이라 소개됐다. 국무위 경위국은 김

430) “올해 더욱 살벌해질 김정은의 공포통치,” 『자유아시아방송』 2020.1.24.,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co-sh-01232020094359.html> (검색일: 2021.10.4.).

431) “北, 김정은 경호 담당 호위사령부 간부 여러 명 숙청,” SPN, 2018.12.11,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91>> (검색일: 2021.10.4.); “北 군부에 숙청 태풍 불고 있다,” 『시사저널』, 2019.3.19,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459>> (검색일: 2021.10.4.); “김정은, 호위 수장 불륜에 격분… ‘서로 감시’ 경호팀 4개로 쪼갬,” 『조선일보』, 2021.2.2.,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02/YQFF75YSIZCMHLHP2FMCPHILAA/> (검색일: 2021.10.4.).

432) “열병식서 드러난 북한 김정은 경호 책임자들… ‘김정은 결사호위,’” 『연합뉴스』, 2020.10.12.,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2031700504>> (검색일: 2021.10.4.).

정은이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대외활동을 할 때 호위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위국장 김철규는 2019년 2월 2차 미북정상회담, 4월 북러정상회담, 6월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등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호위국은 “최고 참모부 당 중앙을 지켜선 방패부대”라고 소개되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인 노동당 본부청사와 노동당의 모든 건물을 경비하는 조직으로 추정됐다.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호위사령부는 경호업무의 최상위 조직으로 최고지도자와 고위 간부들에 대한 경호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부대다.⁴³³⁾

그동안 조직지도부장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7년 10월 최룡해가 임명된 이후 계속 임명됐다. 최룡해는 조직지도부 출신이 아니었다. 최룡해가 지휘하던 조직지도부는 10월부터 3개월간 총정치국을 겸열했다. 또한 2018년 2월에는 호위사령부가 겸열을 받았다. 그는 2019년 4월 리만건으로 교체됐다. 리만건 또한 조직지도부 출신이 아니었다.⁴³⁴⁾ 리만건은 2010년 10월부터 평북도당 책임비서였고, 2016년 1월경부터 군수공업부장이었다.⁴³⁵⁾ 군수공업부는 핵개발을 포함 군수분야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는 2017년부터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되었고, 2019년 4월 당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됐다가, 2020년 2월 당 간부 양성기지 부정부패 또는 김일성고급당학교 부정부패 사건으로 해임됐다.⁴³⁶⁾ 이후 그는 6월 평양중

433) 위의 글.

434) 리만건이 조직지도부 출신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인태, “2021년도 기본·일반과제 최종보고회 토론문” (통일연구원 최종보고회 토론자료, 2021.10.28.)

435) “北 '핵개발 담당' 군수공업부장, 리만건으로 교체된 듯,” 『서울신문』, 2016.1.1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11800190> (검색일: 2021.10.4.).

436) “느닷없이 잘린 당 2인자...김정은, 평양 입시비리에 격노했다,” 『중앙일보』, 2020.3.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20328#home>; “김일성고급당학교 학장·간부 부패혐의로 출당 철직,” 『자유아시아방송』, 2020.3.1., (<https://www.rfa.org/korean/in_focus/corruptionnk-03012020125802.html> (검색일: 2021.10.4.).

합병원 자재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자로 발탁됐다. 그가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군수공장 현실과 공정수행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⁴³⁷⁾ 그는 8월경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호명됐다.⁴³⁸⁾ 2월 해임된 리만건의 후임자는 8월 임명된 김재룡이었다. 그는 2015년 2월부터 군수공업의 중심지인 자강도당 책임비서였고, 2019년 4월부터 내각책임비서를 역임했다. 그 역시 전임자 리만건과 마찬가지로 군수공업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여러 변화를 고려하면, 조직지도부의 전통적 위상과 기능에 네 가지 변화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먼저 조직지도부장과 관련된 특징 두 가지를 보자. 첫째, 2021년 8차 당대회로부터 조직비서와 조직지도부장이 분리됐다. 2019년 4월부터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던 조용원⁴³⁹⁾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조직비서로 임명됐다. 북한은 2017년 10월 최룡해가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조직비서 또는 조직지도부장은 두고 있지 않았다. 최룡해의 조직지도부장 임명 이후, 2019년 4월 리만건, 2020년 8월 김재룡이 조직지도

437) “해임된 리만건, 김정은 ‘지적’에 평양종합병원 자재 총책임자로,” 『DailyNK』, 2020. 6. 15., <<https://www.dailynk.com/%ED%95%B4%EC%9E%84%EB%90%9C-%EB%A6%AC%EB%A7%8C%EA%B1%B4-%EA%B9%80%EC%A0%95%EC%9D%80-%EC%A7%80%EC%A0%81%EC%97%90-%ED%8F%89%EC%96%91%EC%A2%85%ED%95%A9%EB%B3%91%EC%9B%90-%EC%9E%90%EC%9E%AC-%EC%B4%9D/>> (검색일: 2021.10.4.).

438) “부패 해임 김정은 측근 리만건, 김여정과 실세 부서 맡았다,” 『한국일보』, 2020.8.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0910540003203>> (검색일: 2021.10.4.).

439) 조용원은 1957년 생으로 대학졸업 후 조직지도부에 들어갔으며, 2014년부터 김정은 현지지도에 등장했다. 그는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가장 많이 수행했다. 2017년 34회, 2018년 51회, 2019년 34회, 2020년 12회 등 총 131회이다. 그는 2021년 1월 14일 8차 노동당 대회 열병식에서, 김정은, 김여정, 현송월과 함께 가족 트랜치 코트를 입고 등장했다. 그는 2021년 조직비서 임명 이후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다른 고위 당부장을 공개 질책하기도 했다. “김정은 최측근 부상 조용원 ‘근기반장’ 역할… “黨간부들 한심하다” 질책,” 『동아일보』, 2021.2.15.,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215/105413727/1>> (검색일: 2021.10.4.).

부장으로 임명됐다. 2021년 1월 조용원이 조직비서로 임명됨으로써, 조직비서와 조직지도부장이 동시에 존재했다.

이 같은 체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두 가지이다. 우선 조용원 조직비서는 애초부터 조직지도부에서 성장한 인물인데, 2017년 10월 당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된 최룡해, 리만건, 김재룡의 세 사람 모두 조직지도부 출신이 아니다. 2021년부터 이러한 이중 체계를 둔 것은 조직비서를 통해 조직지도부 고유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비조직지도부 출신 조직지도부장을 통해 조직지도부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북한의 기관별로 조직이기주의와 배타성이 해당 기관의 권세의 크기에 대략 비례한다는 경험법칙에 조직지도부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직지도부는 당 생활지도, 인사권, 정책지도, 검열지도(감찰)라는 업무상의 특징 때문에, 구조적으로 다른 기관 위에 군림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렇지만 조직지도부는 선군 시대에는 군부와 행정부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위축당해 있었다. 2012년 김정은 집권과 함께 조직지도부는 말 그대로 헤게모니 부처로 재등장했고, 조직지도부의 위세를 견제할 만한 경쟁 기관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정은은 이러한 조직지도부에 2017년 10월 이래 최룡해, 리만건, 김재룡 같은 비조직지도부 출신들을 조직지도부장에 임명했다. 김정은이 조직지도부의 위세를 제어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조직지도부에 외부 출신 인사를 연이어 임명하고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비조직지도부 출신으로 조직지도부 고유업무 수행에 미흡했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지도부 출신 조용원을 조직비서에 임명했을 수 있다.

다음으로 조직비서와 조직지도부장 모두가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2019년 이후 리만건과

김재룡과 같은 군수공업 부문 관련자가 연이어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되고 있었다. 2016년 1월경부터 군수공업부장이던 리만건이 2017년부터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조직지도부 개혁/미사일 관련 군수공업과 관련된 것은 더 이른 시점부터이다. 그런데 2021년 1월 조직비서에 임명된 조용원 역시 김일성대 물리학과 출신이고, 핵물리학과 과학기술에도 정통하다고 한다.⁴⁴⁰⁾ 이를 보면, 당 생활통제와 정책지도라는 조직지도부의 전통적 2대 업무 이외에 핵/미사일 또는 군수공업 관련 업무가 주요 업무로 추가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셋째, 8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조직 개편을 보면, 조직지도부의 권한과 역할이 분산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장성택 숙청 이후 정부는 조직지도부 산하 부처로 통합됐다가, 법무부라는 이름으로 분가했다. 또한 조직지도부의 권세의 주요 원천 중의 하나가 다른 기관에 대한 검열 기능이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검열받지 않았다. 그런데 8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검사위원회가 검열위원회의 권능을 이관받았고, 산하에 규율조사부라는 집행부서를 두게 됐다. 이러한 기능은 조직지도부의 지도검열 기능과 중복하는데, 이기동에 따르면 조직지도부도 검열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⁴⁴¹⁾ 한편 2021년 9월 9일 조용원 비서는 흰색 군복을 입고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 민간 및 안전 무력 열병식을 검열했다.⁴⁴²⁾

440) “이틀 만에 北서열 3위로 댄 조용원… 그는 김정은의 분신,” 『조선일보』, 2021.1.13.,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1/13/N4WJVJDUKQFA B5HPB6MVNHYU6SY/> (검색일: 2021.10.4.).

441) 이기동,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와 권력구조 변화,” 세종정책브리프 (2021.1.28.), p. 6., <<https://www.sejong.org/board/1/egoread.php?bd=3&itm=&txt=&pg=1&seq=5802>> (검색일: 2021.10.4.).

442) 9월 9일 열병식보다 앞서서 열렸던 2번의 열병식, 즉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75년 기념 열병식과 2021년 1월 14일 노동당 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은 리병철이 조선인민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의 실패는 그 연루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김여정과 김영철은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실패 이후 근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두 인물은 2019년 6월부터 정상적으로 활동을 재개했다.⁴⁴³⁾ 외무상 리용호는 2020년 1월 리선권으로 교체됐다. 김영철과 오랫동안 협력해온 리선권은 통전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가 외무상으로 임명된 것은 이례적 인사였다. 2020년 6월 탈북자 전단 살포 문제로 김여정이 개성공단을 폭파하기까지 이르렀던 사태의 진행 중에, 김여정과 김영철이 공히 대남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⁴⁴⁴⁾ 김여정은 대남대미정책을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⁴⁴⁵⁾

2021년 6월 29일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에는 30명가량의 정치국 구성원 외에도 중앙당, 성, 중앙기관, 도시군의 당과 행정 간부, 연합기업소 당 책임비서, 무력기관, 국가비상방역 부문의 간부들까지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총인원은 1천 명가량으로 조선노동당 역사에서 이례적인 회의였다.⁴⁴⁶⁾ 이 회의에서 군부 핵심 인물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이병철, 총참모장 박정천,⁴⁴⁷⁾ 국방상 김정관 등

군 원수의 자격으로 주도했다.

443) “김여정도 공식석상 등장… 북한, 하노이 이후 조직 정비 완료 관측,” 『한국일보』, 2019.6.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041690359932>> (검색일: 2021.10.4.).

444) “화해 물꼬 튼 김여정·김영철, 이번엔 대남 강경 대응 주도,” 『한겨레』, 2020.6.1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48590.html>> (검색일: 2021.10.4.).

445) “집권 9년차 김정은, 권한 부분이양… 김여정 대남대미 업무 총괄,” 『동아일보』, 2020.8.21.,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821/102581021/1>> (검색일: 2021.10.4.).

446) “평양의 자중지란, 노동당과 군부의 정면충돌을 보며,” 『자유아시아방송』, 2021.7.8.,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c548cc2cc77c-bc15c0acc758-c83fcac04c9c4b2e8-1/weeklydiagnosis-07072021151601.html> (검색일: 2021.10.4.).

군부 핵심 인사가 강등/교체되었고, 최상건 당 과학·교육담당 비서가 해임됐다. 군부 인사들이 강등/교체된 핵심 이유는 6월 15일~18일 6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던 당 중앙위 8기 3차 전원회의에서의 김정은이 발령한 ‘특별명령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⁴⁴⁸⁾ 그리하여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었다.⁴⁴⁹⁾

국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의 군부가 비판받은 핵심은 두 가지였다.⁴⁵⁰⁾ 첫째, 평북 의주 비행장을 대중국 국경개방 소득 거점으로 4월까지 만들고자 했으나 군이 준비를 소홀히 한 것, 둘째, 전시 비축미 관리실태가 부실했고, 전시 비축미를 주민에게 공급하라는 김정은의 ‘특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당 조직비서 조용원과 당 부부장들인 김여정과 현송월의 고위 당간부가 토론자로 나서 군부를 문책했다.⁴⁵¹⁾ 그런데 박정천은 조만간 오히려 승급하여 현직에 복귀했다. 당 중앙위 정치국 공보는 9월 7일 박정천을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중앙위 비서로 임명함을 알렸다. 또한 당 중앙위 군수공업부장에 유진, 인민군 총참모장에 립광일, 사회안전상에 장정남이 임명됐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째인 9월 29일 장정남 사회안전상은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됐다.

447) 이병철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2020.5-), 당정치국 상무위원 (2020.8-), 당비서국 비서 (2021.1-)로 가히 북한 군부 서열 1위의 인물이었다. 박정천은 총참모장 (2019.9-),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2019.12-), 당정치국원 (2020.4-)이었다.

448) “특별명령서’ 사인한 김정은, 군량미 풀어 식량난 해결하나,” 『중앙일보』, 2021.6.2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6684#home>> (검색일: 2021.10.4.).

449) “김정은 “방역 중대사건’ 북한 코로나에 풀렸나,” 『중앙일보』, 2021.7.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95276#home>> (검색일: 2021.10.4.).

450) “군 수뇌부 줄줄이 강등…북한 군부에 무슨 일이,” 『연합뉴스』, 2021.7.8.,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8069551504>> (검색일: 2021.10.4.).

451) “北 리병철·박정천만 거수의결 못해…군량미 동원령 어겨나,” 『연합뉴스』, 2021.6.30., <<https://www.yna.co.kr/view/AKR20210630067851504>> (검색일: 2021.10.4.).

〈표 IV-1〉 김정은 시대 주요 직책 변화 (2012-2021.10)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조직비서										조용원 (2021.1~)
조직지도부장						최종해 (2017.10~)		리만건 (2019.4~)	리만건(추정) (~2020.2), 김재룡 (2020.8~)	김재룡
					황병서 (2014.4~2017?)					
						리만건 (2017~)			리만건 (2020.2~) 김여정 (2019.12~)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조국 (2019.4~)	
									조용원 (2019.4~2020.12)	
					조연준 (2012.1~2017?) 김경욱 (2008~2018?)					
선전선동비서										리일환 (2021.1~)
선전선동부장			김기남 (2010.5~)			비광호 (2017.10~)		리일환 (2019.12~)		리일환 (검토편?)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여정 (2018.2~)			
부부장					김여정 (2014.11~)				현승일(추장) (2019.2~)	
총정차국장	조명록 (1995.10~, 2010.11 서명), 김장각 제1부부장 (2007.3~), 최동해 (2012.4~)	최동해		황병서 (2014.5~)			김장각 (2018.2~), 김수길 (2018.5~)	김수길		권영진 (2021.1~)
통진부장		김안건 대님 비서 겸임 (2007.3~2015.12)				김영철 (2016.5~)		장금철 (2019.4~)		김영철 (2021.1~)
군수담당비서		박도준 (2010.9~)		김준심 (2015.2 ~2016.1?)						리병철 박정찬 (2021.1~)(2021.9~)
기계공업부장 → 군수공업부장		주규창 기계공업부장 (2010.9~2015.4?)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2016.1~)1)	태종수 (2017.10~)		리병철 (2019.12~)		유진 (2021.9~)
내각총리	최영림 (2010.6~)			박봉주 (2013.4~)				김재룡 (2019.4~)	김덕훈 (2020.8~)	
외무상		박이춘 (2009.4~)		리수용 (2014.4~)		리용홍 (2016.5~)			리산권 (2020.1~)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인민무력상 → 국방상	김영준 (2009.2~), 김장각 (2012.4~), 김격식 (2012.10~)	장정남 (2013.5~)	한영철 (2014.6~)		박영식 (2015.6~)		노광철 (2018.6~)		김정관 (2019.12~)	리영길 (2021.7~)
	리영호 (2009.2~), 한영철 (2012.7~)	김격식 (2013.5~), 리영길 (2013.8~)	리영길	리명수 (2016.2~)	리영길 (2018.6~)	박정천 (2019.9~)				리광일 (2021.9~)
총집모장		김명철 (2008년~2016.5?)				장길성 (2017.9~) ²⁾				리광일 (2019.12~)
정찰총국장 국가안전보위부장 → 국가보위상	우동숙 제부부장 (2005~), 김원홍 (2012.4~)	김원홍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 회의에서 국가보위상으로 개칭 (2016.6.29.)						정경택 (2017~)		
	리명수 (2011.4~)	최고인민회의의 13기 4차회의에서 인민보안상으로 개칭(2016.6.29)		최부일 (2013.2~)				김정호 (2019.12~) 사회안전상 으로 개칭 (2020.6)	리영길 (2020.11~)	장정남 (2021.9~)
인민보안부장 → 인민보안상 → 사회안전상										

주: 1) '北' 핵개발 담당, 군수공업부장, 리만건으로 교체된 뒤, "연합뉴스, 2016.1.11. <<https://www.yra.co.kr/view/AKR2016011124400014>> (검색일: 2021.10.4),
2) "도교신문 "북한 신임 정찰총국장에 장길성 임명", 한국일보 2017.10.1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10131796062756>> (검색일: 2021.10.4).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인물자료>를 기준으로 저자작성. <<https://nkinfo.unikorea.go.kr/nkfp/theme/people/ist.do>> (검색일: 2021.10.4).

V. 결론



1.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이 2012년 권력세습 이후 10년 동안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정치 분야 정책을 평가했다. 김정은 정권의 통치전략과 정책을 ① 통치 안정화 전략과 통치 담론, ② 김정은과 엘리트 관계 및 지배 세력과 인민의 관계, ③ 국정전략의 변화와 지배연합 재편으로 구분해서 분석했다.

첫째, 김정은 정권의 통치 안정화 전략과 통치 담론을 분석했다. 우선 김정은 정권의 통치 안정화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전략을 밝혔다. 역대 북한 정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최고지도자 개인에 권력이 집중된 인적 독재, 즉 독재자 중심 개인 독재체제라는 것이다. 2011년 말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죽음 당시 김정은의 세습과정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겨우 1년 남짓 출속한 후계자 수업 기간만을 가질 수 있었던 김정은은 김정일의 유신들로 구성된 후견연합의 지원하에 권력을 계승했다.

김정은 집권 10년은 북한판 개인독재체제인 유일영도체제의 재건과 개인독재자로서의 생존을 위한 집권 안정화 과정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김정은은 김정일 정권부터 강행된 핵무장과 이를 통해 직면하게 된 외교적 고립과 국제제재 강화에 따른 경제난 악화로 위기에 봉착한 비정상 체제를 세습 받았다. 김정은에게 집권 안정화는 지난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의 생존전략은 무엇이였을까? 바로 가산제 통치 안정화 전략이다. 개인독재체제에서도 독재의 주요 수단은 결국 탄압과 포섭이다. 이 두 자산을 활용하여 지배연합 엘리트 세력을 가신화하여 통치체제 안정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피지배주민의 저항과 봉기를 사전 봉쇄해 나가는 것이 가산제 전략의 핵심이다.

그의 유일체제 재건에 가장 큰 걸림돌은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일 와병 이래 3대 세습과정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김정일의 측근 가신들, 권력엘리트 후견세력들이었다. 2016년 7차 당대회 이전까지 김정은은 공포의 숙청정치를 지휘하며 김정일 시대에 주축이었던 후견엘리트들을 제거 또는 무해화한다. 김정은은 또한 대대적인 가산제 간부사업을 통해 지배연합 재구성에 매진한다. 장성택, 리영호, 현영철 등을 처형하고 김기남, 최태복 등 비교적 무해한 인사들도 차례로 이선으로 퇴진시킨다.

또한 7차 당대회 이전 숙청공정 기간에 260명 이상의 최고위급 간부를 처형 또는 숙청한다. 숙청된 원로간부들의 빈자리는 가산제 엘리트 발굴 전술의 일환으로 등용된 신진 엘리트들로 채워진다. 지배연합의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빈자리를 신진층성과 관료로 채우면서 통치 안정화에 진력한다. 그러나 이들 신측근 집단조차 엘리트 길들이기 무해화공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빈번한 좌천과 재등용의 회전문 인사, 유배형 순환근무와 재교육 등 가산제 간부공작에서 피해 갈 수 없었다. 또한 당을 가산제 권력 플랫폼으로서 전면으로 부각시킨다.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의 재건에 있어 핵심세력으로 선군정치 시기 비대해진 군부 등 무장 세력이 감시통제의 중추기제로서 자리매김한다. 그중 조직지도부는 핵심 중 핵심으로 부상한다.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 당 우위 및 당적 통제 원칙을 재확인하며 개정 당 규약에 “최고 형태의 정치조직으로서 당의 권위를 철저히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한다.⁴⁵²⁾

김정은은 경제통제, 이념교양, 전체주의 주민동원 등 전통적인 북

452)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조선중앙통신』, 2021.1.10.

한식 주민통제 전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피지배주민 통제를 통한 정권 안정화에도 진력했다. 이에 더해 김정은은 대중 동원 및 사상교양의 핵심 기제로서 당 체제 재건, 인민제일주의 등 새로운 신념 상징체제의 도입을 통한 선제적 이념 통제를 했다. 그리고 핵무력 개발에 따른 대외적 압박을 국제제재의 대립국면을 활용하여 내부 정치적 체제결집으로 활용하는 전환전술을 정교하게 활용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 확립과 권력 안정화를 위한 통치 담론을 분석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 김정일애국주의를 내세웠다. 이는 기존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변용한 것으로 수령-조국-인민을 연결시킴으로써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유업을 계승하는 데 있어 책임자임을 설명했다.⁴⁵³⁾ 그리고 권력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혁명의 후계자이자 새로운 수령으로서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아래의 글에서 나타나듯 애국심을 바탕으로 인민대중의 동원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⁴⁵⁴⁾

“일반적으로 애국주의는 자기의 조국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고상한 사상감정이다. 애국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나서 자란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융성과 번영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도록 한다.”⁴⁵⁵⁾

453) “조국은 곧 수령이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야말로 최고의 애국이라는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관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대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로 수령영생유업 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고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나가고 계신다.” 김혜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절세의 애국자,” 『정치법률연구』, 2014-2(제46호) (2014), pp. 5~6

454) “오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의 정신인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힘 있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양치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국토관리사상과 리론은 김정일애국주의로 일관된 사상리론,” 『사회과학원학보』, 2014-1(제82호) (2014), pp. 11~13.

다만 김정일애국주의는 수많은 기사와 논문, 구호를 통해 사상교양 사업이 이루어졌으나, 일색화 운동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공식적인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지침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하위 실천담론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과도기적 하위 담론으로 활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어 2014년부터는 백두의 혁명정신을 내세웠다. 이 담론은 선대부터 당초 체제 위기 시에 수령에 대한 충성과 체제 결속 강화를 위해 활용되다 김정은 시기부터 백두혈통의 강조와 함께 권력세습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담론으로 활용됐다. 또한 백두의 혁명정신도 김정은의 권력 강화라는 기능 외에 김정일애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 인민대중을 동원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⁴⁵⁶⁾

백두의 혁명정신은 김일성-김정일주의하에서 혁명의 후계자이자 새로운 수령으로서 김정은의 권력을 뒷받침하고 강화하는 역할 외에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인민대중 동원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일애국주의의 뒤를 잇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애국주의와 비교해도 그 철학적 이론체계가 부족하고, 통치 담론으로써의 일색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으며, 지도적 지침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핵무력의 완성을 목표로 하던 김정일애국주의와 이후 등장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 사이의 시기적 간극을 연결하는 하위 담론으로 봐야 할 것이다. 결국

455) 최원철,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 『사회과학원학보』, 2012-3(제76호) (2012), pp. 12~13.

456) “우리의 천만 군민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지니고 높이 발휘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고 하루빨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령마루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려야 할 것이다.” 리광용,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주체혁명위업 완성을 담보하는 가장 귀중한 정신적 재보,” pp. 15~16.

김정일애국주의와 백두의 혁명정신은 권력승계기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되는 김정은 체제의 실천을 뒷받침할 개념과 내용을 구상하기 위한 담론이었으며, 이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그 사상적 원천을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에 두고 있다.⁴⁵⁷⁾ 그러나 이보다 앞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적 원천에 관하여 다른 글에서는 김정일애국주의만을 사상적 원천으로 언급하고 있으며,⁴⁵⁸⁾ 사용 빈도에 있어서도 김정일애국주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실질적인 사상적 원천은 김정일애국주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철학적 이론체계는 김정일애국주의의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애국주의의 조국관, 인민관은 결국 우리 국가제일주의에서 강조하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인민을 위한 헌신을 뒷받침한다.⁴⁵⁹⁾

또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노래 ‘우리의 국기’를 활용한 대대적인 선전 및 보급, 2019년 2월과 7월 그리고 9월에 각각 “우리 국가제일

457)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애국주의의 최고정화인 김정일애국주의와 함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사상정신적기초로 하고있다.” 림충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기초,”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2019-3호(제158호) (2019), pp. 16~17;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기초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애국주의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위력한 정치사상적 무기,” 『민주조선』, 2019.1.18.

458) 리현숙,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원천,”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2018-3호(제154호) (2018), pp. 14~15;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원천,” 『민주조선』, 2017.12.16.

459)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국력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애착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조국, 우리 국가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지니도록 한다. 여기에 김정일애국주의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되는 리유의 하나가 있다. 김정일애국주의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김정일애국주의가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이기 때문이다.” 리현숙,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원천,” pp. 14~15.

주의에 대한 교양을 심화시켜 누구나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게 하자”,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자”, “우리 국가제일주의 높이를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자”라는 구호 아래 관련 기사들을 연이어 보도하는 등 적극적인 일색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김정일애국주의와 백두의 혁명정신과 마찬가지로 지도적 지침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으나, 공식적인 지도지침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인 주체사상을 사상적 원천으로 하고 있으며,⁴⁶⁰⁾ 자강력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통한 국가발전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하위 실천 담론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김정일애국주의, 백두의 혁명정신, 우리 국가제일주의 등의 통치 담론을 통해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고, 혁명의 후계자이자 새로운 수령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화하는 데 성공했다.

둘째, 김정은과 엘리트 관계 및 지배 세력과 인민의 관계를 분석했다. 우선 김정은과 엘리트 관계를 분석했다. 개인독재화의 관점에서 김정은의 통치술은 사후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습 독재자는 신생 독재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는 자신의 정치 게임을 절대복종의 조정 균형-연구자의 게임 모델에서 절대복종의 조정 균형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모두 함께 다른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일방적으로 충성의 선택을 바꿀 이해관계가 없다. 이러한 이점을 등에 업고 있으면서도 젊은 독재자는

460)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또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국가의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는 궁지와 자부심이다. ... (중략) ... 우리 국가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김정철,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적 내용,” pp. 40~45.

외양적으로 당을 복원하고 전통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를 관찰하면서 북한 주요 엘리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였을 것이다. 자신의 눈에 (잘못) 비친 미숙한 독재자를 “포획”하여 자신의 지위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은 연구자의 기뻐할 공식에서 p(개인독재)의 값을 크게 올렸다고 가정할 수 있다.⁴⁶¹⁾ 이 경우 상대의 선택과 상관없이 수령의 호의를 얻기 위한 충성이 지배전략으로 부상한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다. 이는 조정게임과 달리 개인독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호작용이다. 이 때문에 독재자는 쉽게 개인독재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김정일의 유산이 한몫했다. 김일성 사망 이후 자신이 지배하던 기간 내내 분할 통치로 엘리트 사이의 앙금과 불신을 심어준 점이다. 조선노동당의 쇠락, 선군정치와 행정부의 부상, 심화조사건 등을 거치면서 엘리트는 김정일 분할통치가 파급한 깊은 내상을 입었다. 다시 말해 극단적 감시와 통제만큼이 깊은 구원으로 인해 상호불신이 협력을 가로막았다.

김정은의 권력 장악 과정은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는 생물학의 법칙을 상기시킨다. 김정은의 권력 장악 과정은 김일성과 비슷하나 주기가 아주 짧다는 의미이다. 김일성 혹은 공산독재의 원조 스탈린과 마찬가지로 권력투쟁 과정에서 집단적 반대를 위한 공동지식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처신한 김정은의 위장술이 돋보인다.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위계질서의 이완, 김정일의 와병 등 연이은 혼란 속에서 형성된 엘리트 파벌 문제에 직면한 김정은은 외양적으로 노동당을 복원하는 모습을 초기에 시연했다. 이는 특별히 선군노선이 헌법적 지위로까지 격상되면서 노동당의 정상적 작동이 멈춘 김정일 시대와 크게 대비됐다.

461) 박형중, “권력세습과 통치연합 재편,” pp. 93~95.

이런 정상 사회주의화 분위기 속에서 핵심 엘리트들은 세습 독재에 대해 맞설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어린 독재자를 등에 업고 구원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실책을 저지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장성택이다. 수령제의 관습적 뿌리를 고려할 때 구원을 뒤로 한 채 핵심 엘리트 사이의 광범위한 협력만이 절대권력을 세습한 독재자가 누리는 전략적 이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사실 이들에게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난의 행군, 선군노선의 혼란, 김정일의 건강 악화 등을 기회로 주요 엘리트는 파벌 연합으로 집단행동력을 키울 수 있었다.⁴⁶²⁾ 하지만 이들은 김일성 시대 비김일성파가 범한 결정적인 실수를 되풀이했다. 오만과 상호 불신이다.⁴⁶³⁾ 이들이 협력하지 못하는 이상 개인독재로의 엘리트의 조정을 물려받은 세습 독재자에게 맞설 능력은 없다.

오만과 상호불신에 빠진 엘리트와 달리 어린 김정은에게서 개인 독재화에 걸림돌이 될 실수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세습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주요 엘리트를 한꺼번에 숙청하지 않았다. 주기가 짧을 뿐이지 순차적 숙청의 패턴을 보인다. 또한 개인우상화 역시 초기 백두 혈통의 전통적 정당성에 의거하다 차츰 개인의 카리스마를 강조하는 식으로 수위를 조절한다. 결국 2020년 평양출판사에서 출판된 『위인과 강국시대』에서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버금가는 노골적 개인 우상화를 김정은이 동일하게 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숙청을 마무리하면서 김정은은 이를 헌법이라는 최대 스피커(speaker)를 통해 절대권력에 대한 절대복종이라는 공동지식과 엘리트의 조정을 공식화한다. 그리고 자신의 공식 명칭을 자주 변경하는 식으로 자신의 절대권력에 대한 순간의 망각과 흐트러짐도 허용

462) Barbara Geddes, Joseph Wright, and Erica Frantz,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pp. 25~41.

463)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 정체성, 구조』, pp. 301~314.

하지 않고 있다. 절대복종의 조정 균형에서 한 순간도 이탈하지 못하도록 최소 징벌의 수준이 극단적이다.

그렇지만 중간간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숙청과 무분별한 조직 개편은 분명 엘리트 사이에 불만과 불안을 동시에 키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미래의 기대가 짧아질수록 개인독재의 매력은 급속히 감소한다는 연구자의 게임 모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불안해진다면 수령에 대한 집단 반발의 위험성도 올라간다. 세습 개인독재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경솔한 수령의 지배 행위는 개인독재의 조정 균형의 토대를 부지불식간에 허물어버릴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에서 지배 세력과 인민의 관계를 분석했다. 권력세습 이후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는 김정은에 대한 인민들의 반대를 막고, 인민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김정은 정권은 이중적 인민정책을 실행했다. 지지자들에게는 관대하고, 반대자들은 강력하게 억압·통제한다. 김정은 정권이 제시한 인민중시정책과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지지자들을 향한 정책이다. 반면에 적대 계층이나 정권 위협 세력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감시·억압한다.

반면, 김정은 정권의 인민정책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김정은 정권은 조선노동당의 통치과정에서 수립된 기존의 인민 통제 시스템을 활용했다. 북한 정권의 인민 통제 시스템은 인민들을 지지자와 반대자로 구분해서 이중적으로 대응한다. 김정은 정권은 기존 인민 통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민들의 반대를 억압하고,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을 실행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의 권위와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했다. 권력세습 이후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권위와 정통성 확립은 중요한 과제였다. 김정은 정권은 권력세습 초기에 김정

은의 권위와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김일성 흉내 내기, 친인민적 이미지 구축, 김일성·김정일의 백두혈통 활용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했다.

게다가, 김정은 정권은 인민중시정책을 추진했다. 인민중시는 권력세습 초기부터 시종일관 강조됐다. 김정은은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당의 인민중시·인민존중·인민사랑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대중을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멸사복무하는 충복이 되라고 요구했다. 인민중시정책은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발전했다. 2016년 제8차 당대회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규정했다. 김정은 정권은 인민중시정책과 인민대중제일주의의 현실적 목표를 인민 생활 향상으로 제시했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식량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가 지속되면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먹는 문제와 식량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이중적 인민정책은 김정은 정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노동당이 80년 이상 통치하면서 제도화한 것이었다. 김정은 정권은 이중적 인민 통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인민의 충성을 유도했고, 백두혈통과 친인민적 지도자 이미지를 통해서 김정은의 권위와 정통성을 확립했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해 인민중시정책을 실행했다.

김정은 정권은 지지자들의 지지를 결집하고, 반대자들을 억압하면서 정권을 안정시켰다. 김정은 정권이 인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통해서 인민 생활을 향상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먹는 문제와 식량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경제발전을 독려한다. 그러나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인민 생활 향상이라는 과제는 실패를 거듭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와 식

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셋째, 김정은 정권에서 국정전략과 기관·인물 체계 재편을 분석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엘리트 재편은 크게 두 번에 걸쳐 일어났다.

첫 번째 재편은 2012~2013년 사이에 발생한 변화이다. 두 번째 변화의 파고는 2019~2021년 사이에 발생했다. 두 번의 재편은 상이한 목표에 이바지했다. 첫 번째 시기의 변화를 관통하고 있는 특징은 세 가지이다. ① 김정일이 결성해준 후계자 용위 그룹의 해체이다. ② 선군 원칙 대신에 선당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다. ③ 공안기관 우선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①과 관련한 핵심 변화는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을 통해 김정은식 권력 재편에 대한 군부 저항의 벽을 허문 것, 그리고 장성택과 행정부를 제거함으로써 노선 투쟁을 정리하고 독자 노선 파벌이 공고화되는 싹을 없앴다.

②와 관련한 변화는 비군인 출신을 총정치국장과 인민무력부장에 임명하고, 총정치국을 앞세워 선군 시대에 결성된 군부 기관별 이기주의, 외화벌이 관련 부패와 도당을 혁파하고, 군부를 당적으로 통제하면서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새롭고 보다 공세적인 군사태세로 재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최룡해는 2012~2014년 기간 선군 군부의 예봉을 꺾는 데 공을 세웠다. 이를 계승해서 총정치국 부국장 출신 박영식이 인민무력상으로서 2015~2017년 사이에 재임했고, 최룡해 후임으로 2014년 5월 황병서가 총정치국장에 임명됐다. 두 인물은 군대를 선당 원칙에 따라 재조직하여 정착시키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

③과 관련한 변화는 공안기관 우선 체계를 수립한 것이다. 2012년 이래 김원홍과 국가안전보위부가 타 부서를 압도하는 권세를 누리는 양상이 등장했고, 인민보안부와 총정치국, 조직지도부 같은 공안

관련 부서의 경우는 책임자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12~2013년에 수립된 인물·기관 체계가 대략 2017년까지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 위원·후보위원과 관련해서 상당한 폭의 교체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주요 핵심 실무 직책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 시기 또 한 가지 특징은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까지 당시까지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김원홍·황병서, 그리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조연준과 김경욱이 퇴임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2019년 4월에는 조직지도부장이었던 최룡해가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이직한다. 경찰총국장과 통전부장을 역임하던 김영철도 2018년 장금철 통전부장으로 교체됐다. 그는 2021년 다시 통전부장으로 부활한다.

두 번째 엘리트 재편은 2019-2021년 사이에 발생한다. 무엇보다 주요 공안 직책 담당자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인민보안부장 최부일이 김정호로 2019년 교체되고, 2020년부터 리만건·김재룡으로 이어지는 핵·군수공업 계열의 조직지도부장이 임명되며, 조직지도부 내에서는 2020년부터 김여정·조용원·김조국·리만건 4인 체제가 진행되고 있다.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실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김영철은 통전부장으로 재기했다. 2021년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김정은 초기의 고위직 인물 중에서 김영철이 유일하게 여전히 동급의 고위직을 유지하고 있다. 2012~2013년에 인물·기관 재편이 <집권 체계의 재편 + (새로운 국정노선에 부합한) 재정향>이라는 이중의 목적을 추구했다면, 2019~2021년의 재편은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전략국가’가 지향하는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국정의 노선과 체제를 정비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길’이라는 표어에 집약된 새로운 국정의 노선과 체제는 미국과의 대결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자력갱생과 과학기술발전을 토대로 내적인 힘을 기르는데 집중하며, 특히 핵·미사일 능력의 추가 발전 및 재래식 군비의 선택적 현대화를 토대로 ‘국방력 강화’를 통해 미국을 ‘제압’하는 물적 능력과 작전적 행동 능력을 겸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반사회주의를 통해 내부안정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추구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도와 기관·인물의 체계가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시정연설과 권력개편에서부터 발전되기 시작했고 2019년 12월 7기 5차 당 중앙전원회의를 거쳐 8차 당대회에서 일단 정식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길’에서 핵심 목표는 핵·미사일 능력의 추가 발전과 재래식 군비의 선택적 현대화인데, 이 목표 실현에 부합하게 국정 체제가 정비된 것이 2019~2021년 재정비의 핵심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정책 시사점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10년 정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의 정치 분야 평가를 요약하면,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일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에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단기간 내에 정치적 반대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없고, 김정은의 권력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 정권은 가산제 통치 안정화 전략에 기초해서 엘리트와 인민들의 충성과 복종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의 정치 분야 평가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는 수령 대 하부 권력기관 사이의 세력

관계, 하부 권력 기관들 사이의 세력 관계가 상이하며,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하부 권력 기관들이 분열되어 경쟁하고 있기에 수령이 결국 압도적 권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부 권력 기관들은 수령으로부터 권세와 이권을 더 얻어내기 위한 충성경쟁 또는 수령 포획 경쟁을 벌인다. 동시에 다른 권력기관에 대해 상대적으로 득세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가히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김정은은 수령독재 내부의 갈등과 알력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알력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수령독재체제 붕괴의 전조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과잉 판단은 우리의 대북 정책에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김정은 정권은 엘리트와 인민들의 자발적 충성과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통치 담론을 생산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사상교양을 진행한다.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간부들의 충성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렵다. 김정은 정권의 권력세습에 대해 인민들의 동의와 순응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하기에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인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혁명 과업의 후계자이자 새로운 수령인 김정은에게 조직사상적 기초, 인민의 지지 확보, 후계자로서 자신의 역량 입증을 위해 통치 담론의 제시와 활용은 필연적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애국주의, 백두의 혁명정신, 우리 국가제일주의라는 통치 담론을 활용하여 권력의 안정화를 이루어냈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인민대중의 동원을 끌어냈다.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통치 담론을 생산하면서 엘리트와 인민들에 대한 사상통제와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한 노동당의 복원은 사회주의의 정상화와 관련이 없다. 즉 노동당의 역할은 정책 및 주요 정치적 결정을

십의 토의하는 회의체가 아니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단기적으로 당 치로 변화가 일어날 어떠한 조짐도 없다. 한동안 당 내외 공안 기구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김정은 독재의 단기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넷째, 김정은 정권은 권력 안정화를 위해서 대내외적 위기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대외적 위협요인은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봉쇄이다. 이러한 상황은 김정은 정권의 경제 위기를 악화시킨다. 김정은은 인민 생활 향상을 외치면서 수차례에 걸쳐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먹고 사는 문제 해결과 인민 생활 향상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위기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김정은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은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대북제재와 북중 국경봉쇄는 외화 수입 감소를 초래한다. 외화 수입 감소는 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을 고갈시킴으로써 정권의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지배연합을 구성하는 엘리트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정권에 대한 엘리트들의 불만은 커질 것이다.

다섯째, 김정은 정권이 추구한 국정전략과 핵심 정책을 파악했다. 우선, 2012년 김정은 집권 이래 국정의 최고 목표는 ‘국가 핵무력 완성’이었다. 북한의 국정체계와 엘리트 재편은 이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 김정은은 때때로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든지, 인민의 희생에 대해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8차 당대회에서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국정목표는 ‘국가 핵무력’완성이었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북한은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싱가포르 미북정상

회담을 앞두고 ‘경제핵건설의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사회주의적 경제건설에 집중한다’는 ‘경제건설 집중 노선’이라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내세웠다. ‘새로운 전략 노선’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실패 이후 사실상 폐기됐다. 또는 ‘새로운 전략 노선’이 내세웠던 ‘경제집중’이라는 노선은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었다. 2018년~2019년 2월 사이에도 북한의 엘리트 구성과 내부 국정체계는 핵·미사일의 표준화 및 대량생산과 관련하여 목표를 수정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 안정성, 국정전략, 핵심 정책을 염두에 두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절대권력을 장악한 개인독재가 공고한 이상 북한의 현상 유지 편향성은 더욱 고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사회주의 등에서 당치 등 집단독재 등으로 엘리트의 정치적 힘이 성장하면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도될 수 있다. 엘리트의 정치 경제적 이해를 늘리기 위한 법적 제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혹은 국유재산 등에 대한 엘리트의 권한이 강화되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 김정은의 북한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러한 북한을 염두에 두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단기적으로 북한의 이해를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현재 북한은 국가 내부의 행위자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없기에 외부적 유인이 작동할 여지가 거의 없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김정은의 압도적 승리의 결과 자신의 국내 정치적 이유로 대남정책에서 지금보다 더한 위협을 감수하는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아직 김정은은 시장개혁을 수용하지 않는 선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이러한 모색은 실패로 끝날 개연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새로운 정책(대안적 모델)을 모색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갖는다.

북한이 현상 유지를 통해 문제를 돌파하는 동안 우리는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북한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노동당의 회의체 기능의 소멸과 다양화된 공안 기구의 위상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자력갱생의 기존 노선을 단기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북한이 자신의 정책적 수단이 소진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우리는 북한에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장기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서 다양한 경로로 신뢰감 형성을 위한 신호를 북한에 보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재홍. 『북한의 군(軍) 통제 연구: 견제와 균형의 지속』.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서울: 창작과비평, 2013.
- 김진하·박형중·오경섭·한기범.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9.
- 내외통신사.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 사회』. 서울: 내외통신사 부설 북한문제연구소, 1995.
- 니콜로 마키아벨리 지음. 강정인·김경희 옮김. 『군주론』. 서울: 까치, 2011.
- 라종일. 『장성택의 길: 신정神政의 불온한 경계인』. 서울: 알마, 2016.
-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저. 이영철 역. 『철학적 탐구』. 서울: 서광사, 1994.
-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 정체성, 구조』. 서울: 한울, 2010.
-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알라스케어 스미스 지음. 이미숙 옮김. 『독재자의 핸드북』.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2.
- 애나 파이필드 지음. 이기동 옮김. 『마지막 계승자』. 서울: 프리뷰, 2019.
- 오경섭·김진하·홍석훈·이지순·한기범·이해정·이혜진.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9』. 서울: 통일연구원, 2009. 재인용: 오경섭. “북한 전체주의 사회통제와 체제 내구성.” 『세종정책

- 연구』, 2009.
- 이상신·오경섭·임예준.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이종석. 『새롭게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이호령·천명국·손효종. 『김정은시대의 권력엘리트 변화와 특징』. 서울: 국방연구원. 2020.
- 정보사령부. 『2014 북한연보』. 정보사령부, 2015. 재인용: 이호령·천명국·손효종. 『김정은시대의 권력엘리트 변화와 특징』. 국방연구원, 2020.
- 정성장·이종석·김진무·이영훈·전영선·최은주. 『2019 북한 동향과 분석』. 성남: 세종연구소, 2020.
- 존 오스틴(John L. Austin) 저. 김영진 역. 『말과 행위』. 서울: 서광사, 1992.
- 최진욱. 『현대북한행정론』. 서울: 인간사랑, 2002.
- 크리스티앙 들라캥파뉴(Christian Delacampagne) 저. 조현진 유서연 역. 『20세기 서양 철학의 흐름』. 서울: 이제이북스, 2006.
-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태영호 증언』. 서울: 기파랑, 2018.
- 프랑크 디콰터 지음. 고기탁 옮김. 『독재자가 되는 법』. 파주: 열린책들, 2021.
- 필립스 쉬블리 지음. 김계동 외 옮김. 『정치학 개론: 권력과 선택』. 서울: 명인문화사. 2017.
- 한병진. 『독재의 법칙: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탐욕과 배신의 정치사』. 파주: 곰출판, 2021.
- 황장엽. 『황장엽 비록 공개: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1.
- C. E. 메리안 지음, 신복용 옮김. 『정치발전론』. 서울: 청아출판사, 1987.

- Axelord, Robert.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1984.
- Bialer, Seweryn. *Stalin's Successors: Leadership, Stability, and Change in the Soviet U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Bratton, Michael and Nicolas van de Walle. *Democratic Experiments in Africa: Regime Transi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Brownlee, Jason. *Authoritarianism in an Age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Bueno de Mesquita, Bruce, Alastair Smith, Randolph M. Siverson, James D. Morrow.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Cambridge: MIT Press, 2003.
-
- _____. *The Logic of Political Survival*. Massachusetts: The MIT Press, 2005.
- Bueno de Mesquita, Bruce, and Alastair Smith. *The Dictator's Handbook: Why Bad Behavior Is Almost Always Goo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11.
- Chehabi, Houchang E. and Juan J. Linz. eds.,. *Sultanistic Regime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 Chwe, Michael Suk-Young. *Rational Ritual: Culture, Coordination, and Common Knowled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Ezrow, Natasha M. and Erica Frantz. *Dictators and Dictatorships: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s*.

-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11.
- Fioretos, Orfeo, Tulia G. Falletti, and Adam Sheingate eds., *The Oxford Handbook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 Fitzpatrick, Sheila. *Tear off the Masks: Identity and Imposture in Twenty-Century Russ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 Frantz, Erica. *Authoritarianism: What Everyone Needs to Kno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Gause, Ken E. *North Korean House of Cards: Leadership Dynamics under Kim Jong-un*, Washington, DC: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
- Geddes, Barbara. *Paradigms and Sand Castles: Theory Building and Research Designing Comparative Politic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3.
- _____, Joseph Wright, and Erica Frantz. *How Dictatorships Work: Power, Personalization and Collaps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 _____. *Politician's Dilemma: Building State Capacity in Lat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 Gorlizki, Yoram and Oleg Khlevnuk. *Cold Peace: Stalin and the Soviet Ruling Circle, 1945–195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Greitens, Sheena Chestnut. *Dictators and Their Secret Police: Coercive Institutions and State Viol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 Haggard, Stephan and Marcus Noland. *Witness to*

-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1.
- Hannah,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1973.
- Herb, Michael. *All in the Family: Absolutism, Revolution, and Democracy in the Middle Eastern Monarchi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 Huntington, Samuel P.,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 Jackson, Robert H. and Carl G. Rosberg. *Personal Rule in Black Africa: Prince, Autocrat, Prophet, Tyra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Kihl, Young Whan and Hong Nack Kim, eds. *North Korea: The Politics of Regime Survival*. Armonk: M.E. Sharpe, 2006.
- Dimitrov, Martin K. ed., *Why Communism Did Not Collapse?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 Resili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 McEachern, Patrick. *Inside the Red Box: North Korea's Post-totalitarian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 North, Douglas C., John J. Wallis, and Barry R. Weingast, *Violence and Social Ord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Posusney, Marsha Pripstein and Michele Penner Angrist eds.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Regimes and Resistance*.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2005.

- Schumpeter, Joseph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HaperPrennial, 1975.
- _____,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 Svolik, Milan W.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Taylor, Robert H., *The State in Myanma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9.
- Tullock, Gordon. *Autocracy*.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87.
- Van Dame, Nikolas. *The Struggle for Power in Syria: Politics
and Society under Asad and the Bath Party*. New York:
I.B. Tauris, 2011.
- Wintrobe, Ronald.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1st
edi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Wittman, Donald and Barry Weinga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2. 논문

- 강명구·박상후.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신한국에서 세계화까
지.” 『한국사회학』. 제31권 1호, 1997.
- 강혜석.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
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59권 3호, 2019.

- 구갑우. “제2차 북미 핵갈등의 담론적 기원: 2002년 10월 3일-11월 26일, 말의 공방과 담론의 생태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4호, 2014.
-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의 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 2002.
- _____. “김정은 시대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추상화.” 『한국과 국제정치』. 통권 84호, 2014.
- 김에스라. “김정은 시기 정치담론 동학에 관한 연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김열수·김경규. “남북한 군사전략 비교와 함의.” 『新亞細亞』. 22권 2호, 2015.
- 김진하.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순환도발전략의 기원 및 권력세습 이후 패턴분석.” 『국방연구』. vol. 57, no. 1, 2014.
- _____.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통일정세 분석』. 2010.
- 김창희. “북한의 통치이념 ‘김일성-김정일주의’ 분석.” 『한국정치연구』. 제22권 3호, 2013.
-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2017년 봄(통권 제115호), 2017.
- 박완신. “북한의 인권과 정치범수용소 실상.” 『통일로』. 56호, 안보문제연구원, 1993. 재인용: 오경섭. “북한 전체주의 사회통제와 체제 내구성.” 『세종정책연구』, 2009.
- 배성인. “김정일 정권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담론과 담론의 정치.”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재인용: 김에스라. “김정은 시기 정치담론 동학에 관한 연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송인호. “북한의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vol. 43, no. 1, 2019.

- 유영식. “북한 ‘국가주의’ 탐색 - 우리 국가제일주의.” 『장신논단』, vol. 51, no.5, 2019.
- 유판덕·박영택. “북한 ‘핵무력’과 재래식 군사력 강화 방향 및 공세적 운용과의 관계 연구 - 김정은 시대(2012~2019)를 중심으로.” 『한국국가전략』, 통권 제13호, 2020.
- 이기형. “담론분석과 담론의 정치학: 푸코의 작업과 비판적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제14권 3호, 2006.
- 이승열·이승현.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797호, 2021.2.9.
- 이태섭.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과 ‘단결’의 정치.” 『현대북한연구』, vol. 6, no. 1, 2003.
- 이호령. “김정은 시대의 권력엘리트 변화와 특징.” KIDA Brief no. 2021-안보-4. 2021.7.30.
- 이호령·조남훈.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발 추이와 대응 방향.” 『주간 국방논단』, 제1691호, 2017.
- 임수진. “백두 구호를 통한 김정은정권의 정치사회화 전략 분석: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77집, 2019.
- 임혁백. “유신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의 마키아벨리적인 시간(상).” 『한국정치연구』, 제13집 2호, 2004.
- 정영철.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 2020.
- 한기범. “북한의 제8차 당대회 평가(Ⅲ): 인사개편·당규약 개정 등,” 북한연구소 INKS 논평, 2021.1.12.
- _____. “북한의 제8차 당대회 평가(Ⅱ) 김정은의 사업총화보고.” 북한연구소 INKS 논평, 2021.1.10.
- 한병진. “독재의 권력투쟁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 소련, 중국, 이라크, 시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9권 2호, 2020.

- _____. “북한 버틸 수 있을까? 국가제도의 공고성과 시장개혁 변수를 통해 본 북한의 미래.” 『대한정치학회보』. 제22권 제2호, 2014.
- 한병진·임석준. “조정, 독재권력 형성과 변동의 미시적 기초.” 『현대정치연구』. 제7권 1호, 2014.
- 허규호·안경모. “김정은 시기 북한 군부의 역할과 성격 변화에 대한 연구: 전문직업주의의 부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5권 제4호·2019년 겨울호(통권 제126호), 2020.
- Bellin, Eva. “The Robustness of Authoritarianism in the Middle East: Except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mparative Politics*, vol. 36, no. 2, January 2004.
- Smith, Benjamin. “Life of the Party: The Origins of Regime Breakdown and Persistence under Single-Party Rule.” *World Politics*, vol. 57, no. 3, April 2005.
- Brownlee, Jason. “Hereditary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 59, no. 4, 2007.
- Egorov, Georgy and Konstantin Sonin. “Endogenizing the Loyalty-Competence Trade-Off.”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 9, no. 5, 2011.
- Escriba-Folch, Abel. “Accountable for What? Regime Types, Performance, and the Fate of Outgoing Dictators, 1946-2004.” *Democratization*, vol. 20, no. 1, 2013.
- Geddes, Barbara, Joseph Wright, and Erica Frantz. “Autocratic Breakdown and Regime Transitions: A New Data Set.”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12, no. 2, 2014.
- _____. “How Autocrats

- Defend Themselves Against Armed Rivals.” *APSA 2009 Toronto Meeting Paper*. August 2009.
- Gehlbach, Scott and Pilip Keefer. “Investment without Democracy: Ruling-Party Institutionalization and Credible Commitment in Autocraci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9, no. 2, June 2011.
- Gentile, Emilio. “Fascism, totalitarianism and political religion: definitions and critical reflections on criticism of an interpretation.” *Politics, Religion and Ideology*. vol. 5, no. 3, 2004.
- Hale, Henry. “Formal Constitutions in Informal Politics: Institutions and Democratization in Post-Soviet Eurasia.” *World Politics*. vol. 63, no. 4, 2011.
- Hlaing, Kyaw Yin. “Setting the Rules for Survival: Why the Burmese Military Regime Survives in an Age of Democratization.” *Pacific Review*. vol. 22, no. 3, 2009.
- Kendall-Taylor, Andrea and Erica Frantz. “When Dictators Die.” *Journal of Democracy*. vol. 27, no. 4, 2016.
- Kim, Jin-Ha. “North Korea’s Succession Plan: Stability and Future Outlook.” *Korea University Ilmin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IRI)-MacArthur Foundation Working Paper*. no. 8, December 2010.
- Magaloni, Beatriz. “Credible Power Sharing and the Longevity of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41, no. 4-5, April 2008.
- Mansourov, Alexandre Y. “Emergence of the Second Republic: The Kim Regime Adapts to the Challenges of Modernity,” in Young Whan Kihl and Hong Nack Kim, eds., North

- Korea: The Politics of Regime Survival. Armonk: M.E. Sharpe, 2007.
- Myerson, Roger B. "The Autocrat's Credibility Problem and Foundations of the Constitutional State."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2, no. 1, 2008.
- North, Douglas, C. and Barry R. Weingast. "Constitutions and Commitment: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Governing Public Choice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49, no. 4, 1989.
- Paasha, Mahdavi and John Ishiyama. "Dynamics of the Inner Elite in Dictatorships: Evidence from North Korea." *Comparative Politics*. vol. 52, no. 2, 2020.
- Quinlivan, James T. "Coup-Proofing: Its Practice and Consequences in the Middle Eas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4, no. 2, 1999.
- Remmer, Karen L. "Neopatrimonialism: The Politics of Military in Chile, 1973-1987." *Comparative Politics*. vol. 21, no. 1, January 1989.
- Rudolph, Lloyd I. and Susanne Rudolph. "Authority and Power in Bureaucratic and Patrimonial Administration: A Revisionist Interpretation of Weber on Bureaucracy." *World Politics*. vol. 31, January 1979.
- Shadmehr, Mehdi. "Extremism in Revolutionary Movement." *Games and Economic Behavior*. vol. 94, no. C, 2015.
- Slater, Dan. "Iron Cage in an Iron Fist: Authoritarian Institutions and the Personalization of Power in Malaysia." *Comparative Politics*. vol. 36, no. 1, 2003.
- Svolik, Milan W. "Power-Sharing and Leadership Dynamics in

- Authoritarian Regim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3, no. 2, 2009.
- Theobald, Robin. “Patrimonialism,” *World Politics*. vol. 34, July 1982.
- Thomas, Kyle A., Peter DeScioli, Omar Sultan Haque, and Steven Pinker. “The Psychology of Coordination and Common Knowled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7, no. 4, 2014.
- Tir, Jaroslav. “Territorial Diversion: Diversionary Theory of War and Territorial Conflict,” *The Journal of Politics*. vol. 72, no. 2, 2010.
- Weeks, Jessica L. “Strongmen and Straw Men: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 Initiation of International Conflic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06, no. 2, May 2012.
- Wilfert, Bryon J. “Les notions philosophiques: dictionnaire.” *Auroux Sylvian, Encyclopédie philosophique universelle*. vol. 2, Tome 1.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0.

3. 북한자료

- 김강민. “김정일애국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대를 이어가며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사상정신적 양식.” 『김일성종합대학보(철학, 경제학)』. 제3호, 2015.
- 김미옥.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최후승리를 위한 강위력한 사상정신적 보검.” 『정치법률연구』. 2015-3(제51호),

2015.

- 김성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어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 『정치법률연구』. 2015-2호(제50호), 2015.
- 김용일.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후대관으로 일관된 애국주의.” 『사회과학원학보』. 2012-4(제77호), 2012.
- 김재천. 『후계자 문제의 이론과 실천』. 평양: 발행처 불명, 1989.
-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2년 7월 26일).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5.
- 김정철.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본질적 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64권 4호, 2018.
- 김혜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정치법률연구』. 2014-2(제46호), 2014.
- 리광용.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주체혁명위업 완성을 담보하는 가장 귀중한 정신적 재보.” 『정치법률연구』. 2016-1(제53호), 2016.
- 리성환·박길성. 『조국번영의 위대한 기치 김정일애국주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리정범.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인민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애국주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60권 3호, 2014.
- 리현숙.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원천.”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2018-3호(제154호), 2018.
- 림충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사상정신적 기초.”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2019-3호(제158호), 2019.
- 문성세.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의 강의한 정신력의 역센 뿌리.” 『철학연구』. 2012-4(제131호), 2012.

- 박영자.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2): 지도체계 및 엘리트.” 통일 연구원 Online Series CO 16-13, 2016.5.13.
- 박영훈. “김정일애국주의는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 있는 애국주의.”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 경제학)』. 제59권 1호, 2013.
- _____.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적 특징.” 『정치법률연구』. 2012-4호 (제40호), 2012.
- 봉덕.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안고살아야 할 영원한 혁명정신.”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4호, 2015.
- 양치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국토관리사상과 리론은 김정일애국주의로 일관된 사상리론.” 『사회과학원학보』. 2014-1 (제82호), 2014.
- 양혜영.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 유산.” 『정치법률연구』. 2013-3(제43호), 2013.
- 오경섭·김진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3): 정치 분야.” 통일 연구원 Online Series CO 21-03, 2021.1.15.
- 오성길·장은옥. 『인민의 령도자 1』. 평양: 평양출판사, 2014.
- 오윤수. “생산과 건설에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더욱 발양하자.” 『근로자』. 1959-4(제161호), 1951.
- 장동국.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 『철학, 사회정치학연구』. 2018-3호(제154호), 2018.
- 정영선.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강국 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간직하여야 할 정신력의 근본핵.” 『정치법률연구』. 2017-4호(제60호), 2013.
-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광명백과사전3: 정치, 법』.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9.
- 주학석. “근로자들 속에서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 『근로자』. 1971-11(제356호), 1971.

진문정. “백두의 혁명정신의 사상적 기초.” 『철학연구』, 2012-1(제128호), 2012.

_____. “백두의 혁명정신의 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 경제학). 제58권 1호, 2012.

최성욱.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6. 재인용: 송기호. “북한 민족주의의 기원과 지향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김일성민족론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최원철. “김정일애국주의의 본질.” 『사회과학원학보』, 2012-3(제76호), 2012.

허은미.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 양식.” 『정치법률연구』, 2013-1(제41호), 2013.

『로동신문』.

『로동신문』, 2012. 4.12.. 재인용: 이승열. “김정은 집권 시기 북한 통치관료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NARS 현안분석』, 100호, 2019.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4. 기타 자료

『뉴스1』 <<https://www.news1.kr>>.

『뉴스시스』 <<https://www.newsis.com>>.

『동아일보』.

『미국의 소리』 <<https://www.voakorea.com>>.

『서울신문』.

- 『시사저널』.
- 『연합뉴스』.
-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
- 『조선일보』.
- 『조선닷컴』 <<http://pub.chosun.com>>.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재인용: 김에스라. “김정은 시기 정치담론 동학에 관한 연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한겨레』.
- 『한국일보』.
- DAILY NK <<https://www.dailynk.com>>.
- 『The New York Times』.
- 세종연구소 <<https://www.sejong.org>>.
-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
- 통일연구원 <<https://www.kinu.or.kr>>.
- 통일부 북한지식사전 <<https://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nknow/list.do>>.
- 통일부 통일교육자료센터 <<https://lib.uniedu.go.kr/library>>.
-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 at Columbia University SIPA <<https://www.energypolicy.columbia.edu>>.
- 김인태. “김정은 집권 10년 통치전략과 인민정책 및 인민통제 평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1.9.10.
- _____. “2021년도 기본·일반과제 최종보고회 토론편.” 통일연구원 최종보고회 토론자료. 2021.10.28.
- 김일기. “김정은 집권 10년 인민정책과 인민 통제.”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1.9.25.

이철. “김정은 집권 10년 통치전략, 인민정책, 인민통제 평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1.9.25.

한기범. “김정은 인민시책 평가.”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21.9.25.

_____. “김정은 정권 핵심 엘리트집단.”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19.8.21. 재인용: 오경섭·박형중·김진하·김에스라.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서울: 통일연구원, 2019.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19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옥,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중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민 외	10,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을 결정요인 분석	정은외 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번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장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Study Series〉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Baek, Sangme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Park, Juhwa	

2020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0-01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20-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 문선혜	10,000원
2020-03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김수암 외	9,000원
2020-04	평화-인권-발전의 트라이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들	홍석훈 외	11,000원
2020-05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현승수 외	11,500원
2020-06	한반도 평화번영과 북일관계 연구	이기태 외	8,000원

2020-0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외	8,500원
2020-08	남북기본합정 체결방향과 과제	도경옥 외	9,000원
2020-09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이무철 외	11,000원
2020-10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김갑식 외	13,000원
2020-11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박주화 외	12,500원
2020-1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성윤 외	15,500원
2020-1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은이 외	11,000원
2020-1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나용우 외	14,500원
2020-15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나용우 외	17,500원
2020-16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4,500원
2020-16-01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6,500원
2020-16-02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6,500원
2020-1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주화 외	12,500원
2020-18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보혁 외	20,000원
2020-19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조한범 외	11,500원
2020-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홍 민 외	18,000원
2020-21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3,000원
2020-2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외	14,000원
2020-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최장호 외	7,000원
2020-24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조정아 외	13,000원
2020-25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이상신 외	24,500원
2020-26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오경섭 외	14,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20-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이규창 외
2020-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외

〈Study Series〉

2020-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Do, Kyung-ok·Ahn, Jun-hyeong
2020-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Opening' Park, Young-Ja·Jeong, Eun Mee·Han, Ki Bum
2020-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Yee, Ji Sun·Yi, Hee Young
2020-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환 8,000원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9,000원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9,000원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9,500원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11,000원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10,000원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근 외 14,500원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11,500원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운 10,500원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10,500원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10,500원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18,000원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김석진 10,000원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과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9,500원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2,500원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16,000원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16,500원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9,500원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13,500원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운진 외 11,000원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11,000원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중호 외 23,500원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13,000원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11,000원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19,000원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3,000원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장철운 외 14,000원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16,500원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12,000원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감식 외 12,000원
2021-31-01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10,000원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1,500원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14,000원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14,000원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	--------------------------------	-------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 · 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 · Choon Geun Lee · 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KINU Insight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2020-03	미국의 對北성공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20	이규창 외	21,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이규창 외	27,000원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21,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27,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0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2 (2021)	10,000원

기타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2020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김범수 외
2020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정근식 외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혁·용혜민 엮음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